

研究報告書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1993. 9

文興鎬 (政策研究室 責任研究員)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報告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서 發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政策研究室

要 約

第 I 章 序 論

鄧小平體制 출범 이후 중·대만은 비정치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왔으나 정치적으로는 첨예한 대립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변화와 불변의 兩面性을 지닌 중·대만관계의 주요 특징이다. 중·대만의 정치적 관계개선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근본 원인은 중국이 兩岸關係를 「하나의 중국」 원칙 하에 中央政府와 地方政府的 관계로 설정하고자 하는 반면, 대만은 대등한 정부간의 관계로 설정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중·대만관계와 南北韓關係는 역사적 배경, 정치·경제적 조건, 국제적 지위 및 국제사회의 인식 등에서 많은 차이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政治·理念的 制約 속에서 추진된 중·대만의 交流·協力 성과 및 그 과정에서 야기된 각종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쌍방의 움직임은 남북한 교류·협력 活性化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중국의 鄧小平體制 출범 이후 중·대만관계의 변화 추이 및 인적 교류, 경제교류, 사회·문화교류 등 각 분야별 交流·協力 實態를 검토한 바탕위에서 중·대만관계의 향후 發展方向을 전망하고, 남북한관계와 관련된 示唆點을 제시하고자 한다.

第Ⅱ章 中·臺灣關係의 變化 推移

1. 三通四流政策과 三不政策의 對立

중국이 「대만동포에게 고하는 글」을 발표한 이후 대만정부가 대륙내 친척방문을 허용하기까지의 兩岸關係는 중국의 三通四流政策과 대만의 三不政策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하였다.

중국공산당 11期 3中全會 이후 중국은 「대만동포에게 고하는 글」 이외에 葉劍英의 「평화통일 9개 방침」, 鄧小平의 「조국통일 6개 원칙」을 통해 ① 대만문제의 평화적 해결, ② 대만정권의 존속과 自治權 인정, ③ 대만의 기존 사회·경제체제 및 주민의 생활방식 유지, ④ 대만의 군사력 보유, ⑤ 黨對黨 談判을 통한 3차 國共合作 실현 등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대만정부는 중국의 각종 제의가 대만을 파괴·흡수하기 위한 政治的 陰謀라고 일축하고 어떠한 형태의 접촉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에 들어 大陸政策에 대한 대만내의 비판이 대두되면서 대만정부는 기존의 대륙정책으로는 비판적인 여론과 민간차원의 비공식 인적 교류, 경제교류 등 三不政策 이탈현상을 억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2. 非政治·民間次元의 交流·協力 擴大

1980년대 중반 이후 대만의 폐쇄적인 大陸政策이 한계를

보이고 이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자, 대만정부는 대륙정책의 전반적인 전환을 추진하였으며 대표적인 예가 1987년 10월의 대륙내 친척방문 허용 조치이다. 이는 兩岸의 교류·협력을 위한 전제조건인 人的 交流 통로를 제공함으로써 양안관계 발전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친척방문을 통한 인적 교류는 자연히 경제교류, 사회·문화 교류 등 다각적인 兩岸交流·協力을 촉진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양안관계를 단절·고립된 관계에서 교류·협력의 관계로 변모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결국 대만정부가 친척방문을 허용한 이후 1991년 3월 國家統一綱領을 공포하기까지의 중·대만관계는 비록 제한적인 형태이기는 하지만 대만정부가 중국의 거듭된 교류·협력 제의에 응함으로써 비정치·민간차원의 양안교류·협력이 일정한 궤도에 진입한 반면, 정치적인 문제에서는 침예한 대립을 지속하는 不均衡的인 관계발전 양상을 보였다.

3. 交流·協力の 制度化 및 政治的 關係改善 摸索

1990년 이후 중·대만은 기존 교류·협력의 제도화를 모색하고 있다. 대만의 海峽交流基金會, 중국의 海峽兩岸關係協會가 양안간 중재기구로서의 역할을 시작하였으며 黨對黨 會談, 불가침협정 제의 등 정치적 관계개선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주로 대만정부의 적극적인 대륙정책에 기인한다.

대만정부는 기존의 비현실적·수세적인 대륙정책을 지양하고

향후 새로운 차원의 양안관계 수립을 위한 사전준비로서 國家統一委員會, 大陸委員會를 설립하는 한편 「國家統一綱領」, 「人民關係條例」 등의 통일지침을 제정하였다. 이를 계기로 중·대만관계는 교류·협력의 제도화 및 정치적 관계개선을 모색하는 단계로 진입했으며, 1993년 4월 海協會 汪道涵 會長과 海基會 辜振甫 會長의 「汪辜會談」은 대표적인 예이다.

第Ⅲ章 中·臺灣關係의 分野別 現況

1. 人的 交流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兩岸의 간헐적인 인적 교류가 시작되었으나 이는 정부의 공식적인 허가를 얻지 않은 극소수의 상호방문에 불과하였다. 양안의 본격적인 인적 교류는 대만정부가 대륙내 친척방문을 허용하면서 이루어졌다.

대만정부의 대륙내 친척방문 허용조치에 대해 중국은 환영의사를 표명하는 동시에 각종 편의 제공을 약속하였다. 대만정부가 초기에 발표한 친척방문 규정은 까다로운 조건을 부가한 것이었으며, 특히 대륙거주 중국주민의 臺灣訪問을 엄격히 제한하였다. 그러나 대만정부는 兩岸의 경제교류 및 사회·문화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친척방문에 관한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최근에는 中國共產黨員의 대만방문, 대만 公務員의 대륙내 친척방문 등이 확대되고 있다.

2. 經濟交流

중·대만간의 경제교류는 兩岸關係 발전을 촉진한 중요한 요인인 동시에 향후 관계발전의 지표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한 이후 대만의 資本·技術 導入을 적극 고려하였으며, 대만 역시 대내적인 요구에 따라 중국과의 경제교류에 적극성을 보였다. 현재 중·대만 경제교류는 이미 非公式的인 間接貿易을 중심으로 한 초보적인 교류단계에서 벗어나 무역·투자규모를 확대하고 이를 制度化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양안간 교역량은 대만정부의 三通 不許에도 불구하고 1979년의 7,780만달러 수준에서 1992년에는 약 80억달러 수준으로 급격하게 확대되었다. 또한 交易商品構造에 있어서도 초기의 노동집약적 상품, 원자재 위주의 교역에서 점차 자본집약적인 상품의 교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중·대만의 交易量은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것이며, 교역방식에 있어서도 기존의 간접교역 위주에서 점차 直接交易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交易量の 증대와 함께 양안간 경제교류의 중요한 측면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대만기업들의 對中國 直接投資이다. 1987년말 현재 대만의 대중국 투자는 총 80개 항목의 1억 4천만달러에 불과하였으나, 1992년에는 7,358개 항목의 약 90억달러로 증가하였다. 특히 1992년 한해 동안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投資項目, 投資協議額에서 1991년까지의 총투자 규모를 능가하는 신장세를 보였다.

대만의 경제여건 변화와 중국의 대만기업 專用工團 조성

및 세제상의 혜택 부여 등은 대만기업의 對中國 投資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제약요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중에서도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대만기업에 대한 法的 投資保護가 미흡하다는 점은 대만기업들의 중국진출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이다. 이와 관련 대만은 投資保護協定을 요구하고 있으나 중국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3. 社會·文化交流

중·대만의 비정치적 교류가 活性化되면서 사회·문화교류 역시 兩岸關係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중·대만의 관계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중·대만간의 사회·문화교류는 쌍방의 政治的 關係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고 뿌리깊은 相互不信이 해소되지 않은 데 따른 制約要因을 안고 있다.

사회·문화교류의 이러한 한계는 중국과 대만이 설정하고 있는 양안간 사회·문화교류의 基本趣旨에서도 잘 나타난다. 중국은 대만과의 사회·문화교류에서 ① 대륙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대한 대만주민들의 再認識 유도, ② 대만과의 전면적인 三通 추진을 위한 분위기 조성, ③ 중·대만의 文化的 同質性 강조를 통한 대만주민들의 독립추구 성향 억제 등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에 대만은 사회·문화분야의 각종 통로

를 통해 대만의 정치·경제적 경험과 성과를 전파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륙주민들에게 「民主·自由·均富」의 중국건설 필요성을 인식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즉 중·대만의 社會·文化交流은 내면적으로 상대방에 대해 자신들의 이념·체제의 우월성을 인식시키고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중·대만의 사회·문화교류는 政治的 要因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으나, 兩岸의 관계개선, 교류·협력 분위기 조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4. 半官機構의 接觸

양안간 교류·협력이 확대되면서 중국과 대만은 이에 대한 제도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대행할 수 있는 半官半民 성격의 海協會, 海基會를 설립하였다. 두기구의 설립 이후 쌍방의 실무자간에 간헐적인 접촉이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성과는 「汪辜會談」이다.

중국과 대만은 「汪辜會談」을 통해 교류·협력의 제도화 추진을 위한 양안의 공식적인 접촉통로 확립이라는 목적 이외에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었다. 중국은 대만이 三不政策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대만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여 三不政策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반면에 대만은 三不政策을 카드로 투자보장협정 체결, 武力使用 포기 등과 관련된 중국의 양보를 얻어냄으로써 대만의 政治的 實體

확보를 위한 목표를 단계적으로 실현해 가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汪辜會談」에서 다루어진 주요 현안은 ① 海協會와 海基會間 회담의 定例化, ② 교류·협력 과정에서 야기된 각종 범죄·분쟁 처리를 위한 관련 협정 체결, ③ 대륙에 진출하고 있는 대만기업의 投資保障 문제 등이다. 결국 「汪辜會談」은 쌍방의 공동성명을 포함한 4개의 협의서를 채택하고 두 기구간의 접촉을 정례화함으로써 양안간 교류·협력의 제도화 추진을 위한 協商通路의 확보라는 기본적인 목표를 달성하였다.

第Ⅳ章 中·臺灣關係의 發展方向

1. 影響要因

가. 對內的 要因

향후 중·대만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적인 요인은 중·대만의 정치·경제적 변화와 관련된 것이다.

우선 중국의 정치·경제적 변화와 직결되는 문제는 鄧小平 사후 江澤民體制의 안정 여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효율적인 운용 등이다. 중국은 중국공산당 14全大會와 8기 全人大 1차회의를 통해 정치적으로 江澤民을 중심으로 한 鄧小平 後繼體制의 기반을 확립했고, 경제적으로는 개혁·개방 확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확립을 통한 경제발전을 최우선적인 정

책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중국이 政治的 安定과 經濟發展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즉 江澤民이 黨·政·軍의 대권을 장악하고 있으나 강택민체제가 완벽하게 구축되었다고 단언하기는 이르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을 위해서도 장기간의 노력이 요구된다. 결국 향후 중국의 정치·경제상황은 江澤民體制의 안정,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효율적인 추진여부에 밀접한 영향을 받을 것이나, 일부 정치·경제적 변화와 관계없이 대만정책을 포함한 기존 대내외정책의 基本方向이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만정국 변화의 핵심은 ① 民進黨을 중심으로 한 재야세력의 급성장과 국민당의 정치적 입지 약화, ② 국민당내 主流·非主流의 대립·분열, ③ 大陸政策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의 대립 등이다. 대만의 在野勢力을 대표하는 民進黨은 1986년 창당 이후 급성장하여 1992년 12월 총선에서 50석을 확보함으로써 국민당의 獨走를 견제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확보하였다. 이는 야당의 단순한 정치적 입지 강화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향후 대만 政局變化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국민당지도부의 대립·분열 역시 대만정국 변화를 가속화하는 요인이다. 국민당 主流의 구성원은 주로 臺灣省 출신자들로서 兩岸의 통일을 표방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臺灣獨立을 추구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반면에 국민당 非主流는 주로 대륙출신의 國民黨 원로, 군부출신으로서 李登輝정부의 대륙

정책과 민진당의 대만독립 움직임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민당내의 대립은 대만출신인 連戰의 행정원장 취임, 비주류 소장파 의원들의 탈당과 新黨 설립을 전후하여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처럼 대만은 정치적 변화요인을 안고 있으나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국민당이 주도적인 지위를 견지하고 민진당이 국민당의 獨走를 견제하는 상태에서 국민당·민진당의 兩黨體制가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대만정국, 大陸政策의 급격한 변화는 야기되지 않을 것이다.

나. 對外的 要因

중·대만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적 요인중에서도 중·미 관계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1989년 6.4 天安門事件 이후 중·미관계는 중국의 人權 상황, 불공정 무역 관행, 제3국에 대한 核技術 지원 및 무기수출에 대한 미국의 비판과 중국의 반발로 인해 불안정한 관계를 지속하여 왔다. 중·미간의 대립을 야기했던 문제들은 여전히 양국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남아 있으나 클린턴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關係改善의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중·미관계의 새로운 변화 움직임은 기존 현안에 대한 양국의 태도변화에서 엿볼 수 있다.

중·미 관계개선 움직임은 양국간 현안의 근본적인 해결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대한 現實的 判

斷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對內外 情勢 변화 및 사안의 성격에 따라 또 다른 대립이 야기될 가능성을 안고 있으며, 대만문제 역시 양국관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민한 문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양국간에 극도의 대립상태가 야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특히 대만문제에 대한 미국의 기본정책이 現狀維持이고 중국도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근본적으로 위배하지 않는 한 대만문제에 의한 미국과의 마찰을 피하고자 하기 때문에 대만문제에 대한 중·미간의 첨예한 대립이나 그로 인한 중·대만의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중·대만관계의 발전과정에서 홍콩이 수행한 政治·經濟的 役割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홍콩반환은 향후 중·대만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중국은 홍콩의 반환이 臺灣問題 해결의 先例가 된다는 인식하에 홍콩문제 처리에 있어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대만 역시 자신들의 정치적 장래와 관련하여 홍콩의 정치·경제적 변화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홍콩반환과 관련된 中·英間의 대립이 해소되고 返還日程이 구체화될 경우 양안관계에 미치게 될 영향은 우선 一國兩制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강화됨으로써 統一方式에 대한 중·대만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홍콩이 양안교류 仲介地로서의 중립적인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양안간 교류·협력 방식이 再調整될 가능성이 크다.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 西方國들은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으며 대만정부도 이들과의 關係強化를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즉 주요 西方國家들은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고 중국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며, 특히 대만과의 정치·군사적인 관계강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만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주요 서방국들의 政治·經濟的 意圖와 결합되어 대만과 주요 서방국들의 정치적 관계강화, 대만의 국제적인 지위·역할 증대, 중·대만관계의 긴장 고조 등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2. 展望

가. 兩岸의 三通

양안간 교류·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은 兩岸의 전면적인 三通 추진여부와 직결된다. 즉 대만정부가 기존 입장을 전환하여 중국과의 직접적인 通商, 通郵, 通航을 추진할 경우 양안의 교류·협력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교류·협력의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양안의 三通중 通商·通郵는 상당부분이 이미 실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양안간 교류·협력의 진일보 확대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양안의 通航이다. 중국은 양안의 通航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

나 대만의 반응은 아직도 부정적이다. 즉 대만은 자신들의 정치적 요구가 실현되는 조건하에서만 通航問題를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중·대만 모두 통항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直航形態는 아니더라도 이와 유사한 방식의 통항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중·대만은 이미 直航 이전 대만이 부정기 專貫機를 취항하는 문제를 협의하였다. 특히 대만정부는 대만내의 여론이 直航路開設을 포함한 三通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모아지고 있고, 홍콩반환의 可視化 등 대내외적인 요인들을 감안하여 양안의 三通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나. 兩岸의 政治的 關係設定

대만의 정치적 실체, 국제적 지위 확보를 위한 彈性外交 필요성을 역설해 온 대표적인 인물인 連戰이 行政院長으로 취임하면서 대만정부의 탄성외교 정책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대만정부의 이러한 노력은 중국의 초강경 반대, 국제적 지지 확보의 어려움 등 한계를 안고 있다. 그중에서도 중국의 반발은 가장 큰 장애요인이다. 중국은 1993년 8월 31일 발표한 「統一白書」에서 밝혔듯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兩岸關係를 규정하는 鐵則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만이 이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對臺灣 武力使用을 불사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중·대만관계의 대외적 영향요인에서 분석하였듯이 미국과 주요 서방국들의 對臺灣政策이 다소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기존의 對中關係 불변을 기본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대만이 의도하는 정책목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따라서 대만이 유엔가입을 통하여 중국 및 국제사회로부터 독자적인 정치적 실체, 國際的 地位를 확보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다만 대만이 유엔가입 추진으로 중국을 극도로 자극하기보다 우선 주요 國際組織에의 능동적인 참여, 相關국가들과의 비정치적 교류·협력 확대를 도모하고 海協會·海基會의 半官機構 접촉 확대, 黨對黨會談의 제한적 수용 등을 통하여 정치적 현안에 대한 쌍방의 입장을 조정할 경우에는 兩岸의 정치적 관계 설정을 둘러싼 중·대만의 대립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다. 兩岸의 平和定着

중국이 대만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대만에 대한 武力使用 가능성을 유보하는 중요한 이유는 이를 대만의 獨立 움직임을 견제하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즉 중국은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 가능성을 포기할 경우 대만의 外交攻勢를 제어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대만문제의 해결이 더욱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대만정책이 획기적으로 전환되거나 대만이 「하나의 중국」, 「一國兩制」 원칙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한 중국의 무력사용 포기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중국의 무력사용 포기 선언과는 별개로 兩岸의 평화정착 문제가 진전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즉 양안의 평화정착 문제는 相互不可侵條約 체결, 중국의 공식적인 武力使用 포기 등 제도적인 방식을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행사 역시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間接的·非公式的으로 무력사용 포기를 선언하거나 무력사용 포기에 조건을 부가하는 방식을 통해 보다 진전될 가능성이 있다.

第V章 南北韓關係에 대한 示唆點

1. 北韓의 改革·開放政策 誘導

대만에 대한 중국의 정책전환은 改革·開放政策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통한 經濟發展을 최우선적인 정책목표로 설정하면서 대만정책이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 있었다. 대만은 중국에 대한 不信感 때문에 초기에는 중국의 각종 제의를 거부하였으나 점차 비정치·민간차원에서 의 교류·협력과 관련된 제의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였다.

중·대만관계에 비추어 장기간의 理念的 對立을 지속해 온 두체제의 관계변화를 위해서는 비록 理念·體制의 근본적인 전환은 불가능하더라도 최소한 대내외 환경변화와 관련된 現實的 要因을 중시하는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은 남

북한의 관계발전을 위해서도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다. 즉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지도부의 인식전환, 특히 改革·開放政策을 유도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을 유도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중·대만관계가 示唆하고 있는 점은 「평화적 이행」(和平演變) 및 經濟統合에 대한 북한의 危機意識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중·대만의 정책전환과 관계변화는 쌍방의 관계개선 및 교류·협력 확대가 각자의 政治·經濟的 存立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共通認識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따라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한간 교류·협력 확대가 북한의 정치·경제체제에 危害要因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신시켜 주어야 한다. 또한 북한이 다른 서방국가들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適應力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북한의 危機意識 내지는 疑懼心을 완화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南北韓 人的 交流의 活性化

중·대만의 인적 교류는 양안간 교류·협력의 시발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류·협력의 擴大要因으로 작용함으로써 兩岸關係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였다. 중·대만관계의 발전 과정에서 인적 교류가 수행했던 역할의 중요성은 인적 교류가 活性化된 1988년 이후와 그 이전의 중·대만관계가 확연하게 구분된다는 점에서도 잘 나타난다.

중·대만관계에서 인적 교류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첫째, 양안주민의 적대감 완화와 兩岸의 緊張緩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양안관계 변화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둘째, 상호방문을 경제교류, 사회·문화교류의 기회로 활용함으로써 양안교류·협력을 擴大·發展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셋째, 대만정부의 三不政策, 三通 不許 등이 양안교류·협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능을 하였다.

남북한의 人的 交流 역시 남북한 주민의 상호이해 촉진, 각종 교류·협력의 확대요인으로 작용하여 南北韓關係 변화의 새로운 계기를 조성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중·대만관계와 남북한관계의 성격이 相異하다는 점을 감안, 남북한관계의 현실에 부합하는 인적 교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은 대만정부의 대륙내 친척방문 허용을 아무런 조건없이 수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한 데 반해, 북한은 자신들의 政治·經濟體制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여 남북한 인적 교류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의 인적 교류 活性化를 위해서는 우선 인적 교류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동시에 북한의 改革·開放 推移에 부합하는 점진적인 인적 교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3. 海外僑胞의 橋梁的 役割 擴大

중·대만관계의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한 요인중에서 남북한

관계 발전과 관련하여 의미를 갖는 또 다른 문제는 중·대만이 상호간의 政治的 接觸이 단절된 상황에서 각자의 입장과 정책을 전달하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海外僑胞들을 적극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중·대만은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 3국 국적의 학자·정치인·기업인들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政策方向과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또한 홍콩, 싱가포르 등 華僑가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지역·국가가 양안교류·협력의 仲介地, 대립·갈등의 緩衝地帶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남북한관계 개선과정에서도 한국의 海外僑胞를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안은 해외 교포들이 한국의 정책과 입장을 지지·옹호하도록 설득하는 데 주력하기보다 남북한의 입장과 政策方向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남북한관계 개선의 바람직한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民族和合을 위한 同伴者로서의 교포사회 형성이라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해외교포들에게 남북한관계 현황, 통일정책의 基本方向 등을 정확하게 인식시키는 동시에 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각국 僑胞團體, 주요 인사들의 親南韓, 親北韓 性向을 지나치게 구분하지 말고 이들이 남북한 학자,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각종 행사를 주관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남북한 교류·협력의 橋梁的 役割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先政治·非政治分野의 分離, 後均衡的 發展 推進

중국과 대만은 兩岸關係에서 정치·비정치분야, 정부·민간차원을 분리하고 교류·협력을 비정치·민간차원에 국한시켜 왔다. 이러한 정책은 兩岸의 정치적 관계가 不透明하고 정치적 접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불가피했던 조치이며, 만약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양안관계는 對立 一邊倒의 기존 관계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중·대만의 사례에 비추어 남북한 역시 政治·非政治分野의 분리를 통해 남북한간 교류·협력을 活性化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남북한이 정치적 현안 때문에 비정치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단절시키기 보다는 정치·비정치분야의 분리를 통해 우선 非政治分野의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남북한의 정치적 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은 남북한 교류·협력을 일정한 軌道에 진입시키기 위한 交流·協力の 初期段階에서는 매우 효과적이지만, 교류·협력이 본격화된 이후에는 정치·비정치분야의 균형적인 관계발전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부작용이 야기된다는 약점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예는 중·대만관계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남한이 남북한 교류·협력의 轉機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政治·非政治分野를 구분한 교류·협력방안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교류·협력이 본격화된 이후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對備策을 함께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5. 對北 經濟交流의 政府·企業間 共同步調 維持

중·대만관계의 주요 특징이자 문제점은 양안교류·협력이 경제교류에 偏重되었다는 점이다. 즉 兩岸關係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경제문제에 집중되고, 특히 대만의 각 기업들이 무분별한 경제교류를 추진함으로써 정부와 기업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남북한의 경제교류 추진시에도 반드시 유의하여야 할 부분이다.

양안교류·협력의 경제교류 편중에 따른 부작용은 대만의 경우에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대만정부가 각 기업들과의 협의를 거쳐 경제교류의 段階別 推進 및 각 단계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 따라서 남한이 對北 經濟交流를 추진할 때에는 정부가 段階別 推進方案을 수립하고 각 단계의 경제교류 主體, 範圍, 規模 등을 융통성있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초기단계에서는 기업·개인 등 民間次元 위주의 경제교류를 적극 유도하되, 경제교류가 본격화된 이후에는 정부가 다른 분야와의 균형을 고려, 調整者 役割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북 경제교류의 段階 設定 및 각 단계의 구체적인 交流方案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 기업들과의 충분한 협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6. 對北政策의 世代·出身地域間 葛藤 解消

남북한관계, 중·대만관계를 불문하고 쌍방의 관계개선, 統一政策에 대한 汎國民的 合意는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에 불가결한 요소이다. 과거 중·대만의 양안관련 정책은 최고 지도부가 독점하여 왔다. 그러나 대만의 경우 政治民主化가 진전되면서 民進黨, 在野 政治勢力은 물론, 지식인·학생, 일반주민에 이르기까지 대륙정책에 대한 다양한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兩岸關係에 대한 대만주민들의 관심 제고와 다양한 의견제시는 일단 양안관계 발전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세대, 출신지역간 갈등을 심화시킴으로써 大陸政策에 대한 汎國民的 合意를 도출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비단 대만 뿐만이 아니라 對北政策, 統一政策과 관련하여 세대간의 갈등, 그리고 대만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지만 출신지역간(실향민)의 갈등을 안고 있는 남한에게도 적용되는 문제다. 따라서 남한 역시 對北政策과 관련된 각종 갈등을 해소하고 범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에는 각종 대립·갈등의 해소 뿐만이 아니라 남북한 통일에 대한 汎國民的 關心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第Ⅵ章 結 論

중·대만관계는 대립·갈등시기, 비정치·민간차원의 교류·협력 확대시기를 거쳐 政治的 關係改善 및 통일문제에 대한 접근을 모색하는 단계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관계변화를 촉진한 주요 요인은 중국과 대만의 政治·經濟的 變革이며 사회주의권 변화 이후의 새로운 國際秩序 또한 관계변화의 촉진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중·대만의 향후 정치적 관계는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우선 정치적 관계발전의 肯定的 要因은 중·대만 모두가 양안의 정치적 관계개선 내지는 통일문제에 대한 접근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비록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대만과의 정치적 관계개선을 통해 경제교류·협력의 障礙要因을 제거하는 동시에 대만문제 해결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대만 역시 기존 교류·협력의 制度化, 정치적 관계 설정 등과 관련하여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대만에는 兩岸 關係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존재한다. 중국이 안고 있는 부정적인 요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政治變動 및 經濟政策의 변화가능성이다. 현재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정치·경제적 어려움은 현지도체제나 경제정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러한 문제들은 중국의 政治·經濟的 不安定, 불확실성을 의미하며 중·대만의 정치적 관계발전을 낙관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다. 대만의 경우 國民黨의 政治的 位相 변화 및 대만내 독립분위기의 고조 현상 등은 중·대만의 정치적 관계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특히 대만정부의 적극적인 外交攻勢가 주요 서방국가의 對中·對臺灣 政策 변화를 야기한다면 중·대만관계가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게 될 것이다.

이처럼 중·대만관계에는 쌍방의 정치적 관계발전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존재하는 반면, 현상황에서 극복하기 어려운 制約要因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제약요인들이 단기간내에 제거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왜냐하면 중·대만의 정치적 관계발전을 제약하고 있는 요인들은 쌍방의 政治的 立場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어서 民間次元의 교류·협력에서 처럼 우회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과 대만은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쌍방의 한계와 제약요인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共感帶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중에는 비정치·민간차원 교류·협력의 지속적인 발전, 형식과 절차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政治的 接觸의 확대 등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남북한관계 개선, 南北韓 統一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도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다. 즉

目 次

第Ⅰ章 序 論	1
第Ⅱ章 中·臺灣關係의 變化 推移	6
1. 三通四流政策과 三不政策의 對立	6
2. 非政治·民間次元의 交流·協力 擴大	10
3. 交流·協力の 制度化 및 政治的 關係改善 摸索	14
第Ⅲ章 中·臺灣關係의 分野別 現況	16
1. 人的 交流	16
2. 經濟交流	19
3. 社會·文化交流	24
가. 學術交流	26
나. 言論交流	31
다. 文藝·體育交流	37
4. 半官機構의 接觸	39
第Ⅳ章 中·臺灣關係의 發展方向	47
1. 影響要因	47
가. 對內的 要因	47
나. 對外的 要因	60
2. 展望	77

가. 兩岸의 三通	77
나. 兩岸의 政治的 關係設定	82
다. 兩岸의 平和定着	87
第V章 南北韓關係에 대한 示唆點	92
1. 北韓의 改革·開放政策 誘導	93
2. 南北韓 人的 交流의 活性化	95
3. 海外僑胞의 橋梁的 役割 擴大	98
4. 先政治·非政治分野의 分離, 後均衡的 發展 推進	100
5. 對北 經濟交流의 政府·企業間 共同步調 維持	102
6. 對北政策의 世代·出身地域間 葛藤 解消	106
第VI章 結 論	110
參考文獻	115

第 I 章 序 論

중국의 鄧小平體制 출범 이후 중·대만관계는 쌍방의 정치적 변화와 경제적 요구, 주변 국제정세 변화 등에 따라 기존의 대립·갈등 일변도 관계에서 보다 완화되고 신축성있는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

우선 중국은 여전히 「하나의 중국」 원칙에 입각한 一國兩制를 대만문제 해결의 기본원칙으로 견지하고 있으나,¹⁾ 그동안 비정치·민간차원에서 이룩한 관계발전을 토대로 兩岸의 정치적 관계개선, 나아가 통일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대만도 교류·협력 초기의 수세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보다 능동적인 입장에서 大陸政策을 추진하고 있다. 즉 대만정부는 중국이 一國兩制를 고수하는 것처럼 三不政策 등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분야의 양안교류·협력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책전환을 추진하여 왔다. 대만정부의 대륙정책 변화

1) 중국의 이러한 입장은 1992년 10월 12일 14全大會 政治報告와 1993년 3월 15일 8기 全人大 1차회의 政府工作報告에서도 잘 나타난다. 즉 江澤民총서기는 “하나의 중국이라는 전제하에 국가의 근본체제는 사회주의제도를 견지하되 홍콩·마카오·대만의 자본주의제도를 장기간 유지하는 一國兩制 원칙에 따라 조국의 평화통일 대업을 완수해야 한다”(江澤民, “加快改革開放和現代化建設步伐奪取有中國特色社會主義事業的更大勝利,” 「人民日報」, 1992年 10月 13日)고 강조하였으며, 李鵬 총리 역시 政府工作報告에서 “조속한 조국통일을 위해 평화통일, 一國兩制 원칙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人民日報」, 1993年 4月 2日.

는²⁾ 蔣經國 집권말기에 추진된 國民黨 주도하의 정치개혁과 1988년 1월 장경국 사망 이후 李登輝 중심의 국민당 권력구조 개편을 바탕으로 한 대내외정책의 혁신적인 전환에 따른 것으로 이는 중·대만관계의 변화를 가속화시킨 주요 요인이었다.

이처럼 1980년대 중반 이후 중·대만관계는 과거 「革命的完結」, 「臺灣의 解放」이란 관점에서 대만정책을 추진해 온 중국의 정책변화와 「반공」, 「本土收復」이란 관점에서 대륙정책을 추진해 온 대만의 정책변화가 접합되면서 새로운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중국과 대만이 정치·이념적 요인보다 現實的 國益을 중시하는 국제질서의 새로운 변화에 편승하면서 중·대만의 관계발전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대만은 아직까지 정치적인 관계의 재정립 및 統一問題를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즉 중·대만은 비정치·민간차원에서의 획기적인 관계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대립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곧 變化와 不變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중·대만관계의 주요 특징이다. 쌍방의 정치적 관계발전에 근본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 「하나의 중국」이란 기본원칙하에 중앙과 지방의 관계로서 兩岸關

2) 과거 대만정부는 중국의 무력적 위협, 국제적 고립을 극복하는 최선책은 대만의 내부단결과 이를 바탕으로 한 경제발전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특히 대만정부는 혁명시기 공산당과의 國共合作에서 패배했다는 역사적 피해의식 때문에 중국의 각종 제안을 불신·거부함으로써 兩岸關係 발전여지를 철저히 봉쇄하여 왔다.

係를 재정립하고자 하는 반면, 대만정부는 대만의 政治的 實體 인정과 국제적 지위 보장 및 대만에 대한 중국의 武力使用 포기를 양안간 정치적 관계발전의 전제조건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중·대만관계의 최대 과제는 기존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쌍방이 참여하게 대립하고 있는 정치적인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중·대만관계의 이러한 변화 및 향후 발전방향은 南北韓 關係改善 및 통일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물론 中·臺灣關係와 남북한관계는 역사적 배경, 쌍방의 정치·경제적 조건, 국제적 지위 및 국제사회의 인식 등에서 많은 차이를 갖고 있다. 또한 중·대만의 관계변화는 기존의 政治·理念的 對立을 완전히 해소한 바탕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발전의 한계가 여전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이념적 대립이라는 제약속에서 추진된 兩岸 교류·협력의 성과, 교류·협력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야기된 각종 문제점 및 이를 처리하기 위한 쌍방의 움직임 등은 남북한 교류·협력 活性化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1993년 4월 27~29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汪辜會談」은 비정치적 현안을 논의한 半官機構間 會談이라는 형식상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정치적인 관계개선의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중·대만정부의 의도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중국의 鄧小平體制 출범

이후 중·대만관계의 변화 추이 및 인적 교류, 경제교류, 사회·문화교류 등 각 분야별 交流·協力 實態를 분석한 바탕위에서 중·대만관계의 향후 발전방향을 전망하는 데 중점을 두되, 남북한 교류·협력 활성화와 관련된 示唆點을 함께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논리와 내용으로 전개된다.

第Ⅱ章은 중국의 대만정책 전환의 시발점이 된 1979년 1월 1일 중국 全人大 常務委員會의 「대만동포에게 고하는 글」(告臺灣同胞書)³⁾ 발표 이후 중·대만관계의 변화 추이와 시기별 주요 특징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다.

第Ⅲ章에서는 1987년 10월 대만정부가 대륙내 친척방문(探親)을 허용한 이후 급속하게 확대된 兩岸間의 인적 교류, 경제교류, 사회·문화교류, 반관기구의 접촉 등 중·대만의 분야별 교류·협력 실태를 분석한다.

第Ⅳ章에서는 양안의 三通, 정치적 관계설정 및 대만의 국제적 지위 보장, 平和定着 등 정치적 현안들을 중심으로 중·대만관계의 향후 발전방향을 전망한다. 이를 위해 우선 兩岸關係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대내적 요인으로 중·대만의 정치·경제·사회적 변화가능성을 분석하는 동시에 대외적 요인으로 中·美關係, 홍콩문제와 관련된 中·英間의 갈등, 日·獨·佛 등 주요 서방국가의 對中, 對臺灣政策 변화가능성을 분석한다.

3) 완전한 명칭은 “中華人民共和國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告臺灣同胞書,” 「人民日報」, 1979年 1月 1日.

第V章에서는 중·대만의 교류·협력 성과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남북한관계와 관련된 示唆點을 제시한다.

第Ⅱ章 中·臺灣關係의 變化 推移

중·대만관계는 1978년 말, 1979년 초를 고비로 중요한 轉機를 맞았다. 중국은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11期 3中全會를 통해 鄧小平體制의 확립 및 대내외 정책의 혁신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만정책의 전환 의지를 강력히 시사하였다. 또한 1979년 1월 1일의 「대만동포에게 고하는 글」을 통해 대만정책 변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여기에서 중국은 평화통일을 위한 軍事對決 및 分裂狀況의 조속한 종식과 이를 위한 兩岸의 교류·협력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중국의 이러한 정책변화와 관계개선 제의는 비록 대만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곧바로 兩岸關係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으나, 결국 대륙내 친척방문 허용(1987. 10), 「國家統一綱領」 공포(1991. 3) 등 대만정부의 대륙정책 변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장에서는 중·대만관계의 질적인 변화를 야기한 이상 3개 조치의 발표시기를 分期點으로 1979년 이후 중·대만관계의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1. 三通四流政策과 三不政策의 對立

중국이 「대만동포에게 고하는 글」을 발표한 이후 대만정부

가 대륙내 친척방문을 허용하기까지의 중·대만관계는 양안의 교류·협력 확대를 겨냥한 중국의 三通四流政策¹⁾ 과 이를 거부하는 대만의 三不政策²⁾ 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하였다.

대만정부가 중국이 제시한 일련의 관계개선 제의를 철저하게 거부한 데에는 중국공산당에 대한 대만정부의 뿌리깊은 不信任感과 함께 1979년 1월 1일의 美·中修交, 미·대만 방위협정 폐기 등으로 심화된 대만의 국제적 고립감, 안보상의 위기의식 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즉 대만정부는 鄧小平體制 출범 이후 중국이 대내적인 정치·경제 체제개혁과 더불어 국제적 지위를 신장시켜 나가는 반면, 대만의 국제적 지위가 계속 실추되는 상황에서 眞意를 파악할 수 없는 중국의 각종 제의에 응하기 보다는 대내적 안정 확보에 주력하였다.

중국이 제11期 3中全會에서 대만문제의 해결방식을 종래의 무력적 해결에서 평화적 해결로 전환한 이후 대만에 제시한 대표적인 제의는 「대만동포에게 고하는 글」 이외에도 葉劍英의 「평화통일 9개 방침」(1981. 9. 30),³⁾ 鄧小平의 「조국통일

1) 三通四流의 「三通」은 通商(직교역), 通郵(우편물 교환), 通航(항공기·선박의 직항로 개설), 「四流」는 경제·문화·과학기술·체육교류를 지칭한다.

2) 대만의 三不政策은 중국과의 不接觸·不談判·不妥協을 의미한다.

3) 葉劍英이 全人大 常務委員長 명의로 발표한 「평화통일 9개 방침」(關於臺灣回歸祖國實現和平統一的方針政策)은 兩岸의 三通四流를 강조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3차 國共合作을 위한 쌍방 대표의 파견, ②通郵·通商·通航·친척방문·학술교류·문화교류·체육교류, ③特別行政區로서 대만의 자치권 및 군사력 보유 허용, ④대만의 현행 사회·경제체제, 생활방식의 보장

6개 원칙」(1983. 6. 26)⁴⁾ 등이 있다. 이들 제의가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대만문제의 平和的 解決, 대만정권의 존속과 自治權 인정, 대만의 기존 사회·경제체제 및 주민의 생활방식 유지, 대만의 군사력 보유, 黨對黨 談判을 통한 제 3차 國共合作 실현 등 대만문제의 해결방식 및 양안의 교류·협력문제와 관련된 사항이었다.

중국의 이러한 제의에 대한 대만정부의 반응은 중국이 제시한 일련의 대만정책이 ‘평화를 위장한 統一戰線의 일환’이라는 것이었다. 즉 대만정부는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화통일을 강조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점과 대만정부를 단순히 地方政府로 간주하는 중국의 문제해결 방식은 결국 대만을 파괴·흡수하기 위한 정치적

의 경제·문화관계 허용, ⑤대만당국자 및 각계 인사의 中央政府 참여 허용, ⑥대만의 재정곤란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보장, ⑦대만주민의 大陸移住와 자유왕래 허용, ⑧대만기업의 大陸投資 허용 및 합법적인 권익·이윤 보장, ⑨조국통일을 위한 대만 각계 각층의 건의 환영. 「人民日報」, 1981年 10月 1日 참조.

- 4) 「조국통일 6개 원칙」은 1983년 6월 26일 鄧小平이 在美 중국계 학자 楊力宇 교수와 접견하는 자리에서 강조한 것으로서 통일 이후 ①중국 軍事·정부요원의 대만과건 금지, ②대만의 독립적인 입법권 및 현행 법률·사법기구의 유지, ③대만의 독자적인 군대 유지(대륙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④대만의 對外事務 처리권한 유지, ⑤대만의 特別旗幟 및 「中國臺灣」 칭호 사용, ⑥외국으로부터의 무기구입을 포함한 대만의 자위권 허용 등이다. 그러나 1983년 7월 29일 新華社의 공식보도에서는 제 6항 대만의 무기구입과 자위권 허용에 관한 부분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鄧小平의 「조국통일 5개 원칙」으로 지칭되기도 한다. 楊力宇, “鄧小平對和平統一的最新構想,” 「七十年代」(1983年 8月號), pp. 17~19 참조.

음모라고 일축하였다.⁵⁾ 또한 대만정부는 黨對黨 담판 등 중국의 각종 제의에 응하는 것은 대만 스스로 지방정부임을 자인하는 것이라는 인식하에 어떠한 형태의 접촉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대만정부는 중국의 각종 제의를 철저하게 거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기초한 통일방안과 大陸政策을 체계화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이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중국의 제의를 무조건 거부하는 것만으로는 중국의 平和攻勢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대만의 內部動搖를 제어하기 어렵다는 대만지도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대만은 국민당 제12차 全國代表大會를 통해 「삼민주의에 의한 중국통일 방안」(貫徹以三民主義統一中國案)⁶⁾을 통과시킨 이후 중국문제의 가장 이상적인 해결방안은 정치적 민주, 경제적 평등, 사회적 다원화를 중국 전역에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三不政策은 대만이 大陸과 분리되어 敵對·戰爭狀態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 사

5) 蔣經國, 孫運璿 등 당시 국민당 수뇌부는 중국이 양안관계와 관련된 문제를 「臺灣問題」라고 지칭하는 것 자체에 심한 거부반응을 보였다. 즉 이들은 “中國問題만이 존재할 뿐 臺灣問題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중국과의 모든 접촉·담판·타협을 거부하는 것만이 중국의 정치적 음모를 봉쇄할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했다. 蔡政文, 林嘉誠, 「臺海兩岸政治關係」(臺北: 國家政策研究資料中心, 1989), pp. 132~133 참조.

6) 이 결의안은 三民主義의 신봉, 자유·민주·均富의 新中國 建設, 民主憲政의 실천, 中華文化의 부흥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통일방안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회의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⁷⁾ 라는 논리로써 三不政策의 불가피성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1979년 이후 대만정부는 三不政策을 내세워 중국의 각종 제의를 철저히 거부했고 자신들의 입장에 기초한 對應論理를 강화함으로써 중·대만관계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대만내에서는 정부의 大陸政策에 대한 비판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⁸⁾ 또한 대만정부도 기존의 정책만으로는 대만내의 비판적인 여론과 민간차원에서의 인적 교류, 경제교류 등 三不政策의 이탈현상을 더 이상 억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2. 非政治·民間次元의 交流·協力 擴大

1980년대 중반 이후 대만의 폐쇄적인 大陸政策이 현실적인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이에 대한 대만내의 비판이 고조되자, 대만정부는 대륙정책을 포함한 對內外政策의 전반적인 조정을 시도하였다. 대만정부의 대내외정책 전환 의지가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예는 1987년 10월의 大陸內 친척방문 허용 조치이며, 이는 양안의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위한 전제조건인

7) 蔡政文, 林嘉誠, 「臺海兩岸政治關係」, p. 136.

8) 당시 대만정부의 대륙정책에 대한 대만내의 비판은 주로 三不政策에 집중되었는데 비판의 핵심은 三不政策으로 인해 대만이 지나치게 피동적인 입장에 처했으며, 양안의 교류·접촉이 없이는 三民主義 실천의 경험·성과를 大陸에 전파하고 궁극적으로 三民主義에 의한 中國統一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인적 교류의 통로를 제공함으로써 兩岸關係 발전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대만정부가 대륙내 친척방문 허용한 이후 1991년 3월 國家統一綱領을 공포하기까지의 기간에는 비록 정치적 차원의 접촉은 배제되었으나 비정치·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이 획기적으로 확대되면서 중·대만관계가 새롭게 정립되었다.

당시 대만정부가 대륙내 친척방문을 허용할 수 있었던 것은 대내외 상황의 변화에 따른 국민당지도부의 認識變化 및 政治改革이 선행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蔣經國을 중심으로 한 국민당지도부는 1986년 3월 29일의 국민당 제12기 3中全會를 전후하여 당내 권력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동시에 1949년 이후 정치활동을 규제하여 왔던 야당 설립 금지조치 철폐(1986. 9. 28), 戒嚴令 해제(1987. 7. 14) 등 대륙정책 전환에 대비한 대내 정치개혁을 단행하였다.⁹⁾ 이러한 정치개혁의 바탕위에서 대만정부는 反共政策의 불변, 국가안전의 확보 및 중국의 統一戰線 억제, 전통윤리 및 인도적 입장의 견지라는 3개 원칙을 전제로 대륙내 친척방문을 허용하였다.

친척방문을 통한 인적 교류는 자연히 경제교류, 사회·문화 교류 등 다각적인 兩岸 교류·협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함으로

9) 당시 대만이 대내적으로 政治改革을 추진했던 주요 배경으로는 대륙정책의 전환을 위한 사전 대비라는 측면 이외에 정치민주화 요구의 제한적 수용, 對美關係를 비롯한 대외관계의 재정립, 蔣經國 후계체제를 위한 권력구조 조정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써 兩岸關係를 기존의 단절·고립된 관계에서 교류·협력의 관계로 변모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더욱이 1988년 1월 蔣經國의 사망과 李登輝의 총통직 승계 이후 대만정부의 대륙정책이 보다 현실적이고 능동적인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양안의 교류·협력이 더욱 활성화되었다.

中國政府는 대만정부의 대륙정책 전환에 환영을 표하고 兩岸의 교류·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마련하였다. 대만정부 역시 1980년대 중반 이후 양안의 관계변화를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동시에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1988년 7월 「대륙정책안」(中國國民黨現段階大陸政策案)을 마련하였다. 중국과 대만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비록 자신들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기는 하나,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계기로 兩岸關係의 새로운 정립을 위한 돌파구를 모색한다는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었다.

다만 중국과 대만은 兩岸의 교류·협력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일정한 범위로 규제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예를 들어 중국은 李登輝의 총통직 승계 이후 대만정부의 對內外政策이 능동적으로 전환되고 이에 따라 대륙정책이 현실화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대만의 정책변화가 兩岸의 교류 협력의 촉진과는 별도로 대만의 국제적 지위 신장, 더 나아가 대만의 독립 움직임을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李登輝정부가 대만의 국제적 지위 강화와 관

런된 「彈性外交」, 「雙重承認」 등을 노골적으로 표명하면서 중국의 불만이 가중되었다.¹⁰⁾ 대만 역시 兩岸의 교류·협력을 무제한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다. 따라서 중국이 대만의 정치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武力使用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三不政策을 포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안의 교류·협력을 비정치·민간차원에 국한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였다.¹¹⁾

결국 이 기간의 中·臺灣關係는 중국의 거듭된 교류·협력 제의에 대만정부가 비록 제한적인 형태이기는 하지만 이에 응함으로써 非政治·民間次元의 양안 교류·협력이 일정한 궤도에 진입한 반면, 中·대만의 정치적 관계설정, 평화정착, 統一政策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참여한 대립을 지속하는 불균형적인 관계발전 양상을 보였다.

-
- 10) 중국지도부는 자신들이 국민당 제 2세대들이 집권하기 전에 국민당 혁명 1세대들과 통일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중국지도부의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는 宦國蒼, “北京調整對臺政策,” 「九十年代」(1986年 3月號), pp. 44~47 참조). 따라서 중국은 蔣經國的 사망으로 대만 출신인 李登輝가 총통직을 승계하자 국민당의 「臺灣化」, 대만독립주의자들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등으로 인해 대만내의 독립요구가 더욱 고조될 것을 우려하였다.
- 11) 즉 당시 대만정부는 대륙정책 추진과정에서 國家의 安全·社會의 安定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동시에 각종 교류·협력의 이득과 弊弊를 냉철하게 분석해야 하며 결코 낭만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蔡政文, 林嘉誠, 「臺海兩岸政治關係」, p. 155.

3. 交流·協力の 制度化 및 政治的 關係改善 摸索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중·대만관계는 기존의 교류·협력을 制度化하는 동시에, 정치·비정치분야, 정부·민간차원을 철저하게 분리했던 기존 교류·협력방식의 점진적인 전환을 모색하는 단계에 진입하였다. 즉 대만의 海峽交流基金會(1990. 11, 「海基會」로 약칭)와 중국의 海峽兩岸關係協會(1991. 12, 「海協會」로 약칭)가 설립되어 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교류·협력의 제도화를 추진하는 仲裁機構로서의 역할을 시작하였다. 또한 黨對黨 會談 제의, 불가침협정 제의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양안의 정치적 관계개선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중·대만관계의 이러한 변화는 주로 대만정부의 적극적인 大陸政策에 기인하는데, 대만정부가 積極性을 보이게 된 주요 배경으로는 ① 6. 4 천안문 사건 이후 중국정국의 혼란, ② 소·동구의 붕괴, ③ 독일의 통일 등으로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대만정부의 자신감이 고조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¹²⁾ 이러한 배경하에서 대만정부는 總統府 직속의 國家統一委員會(1990. 10), 行政院 산하의 大陸委員會(1990. 10) 등을 설립

12) 대만정부는 교류·협력 제도화 및 이를 위한 중국과의 접촉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三不政策 고수라는 정치적 고려 때문에 현실적 요구와 정치적 입장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政策手段을 선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사회주의권의 대대적인 변혁, 서독에 의한 동독의 吸收統一, 주요 서방국가들의 對中政策 변화 움직임 등은 이념·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대만주민·지도부의 자신감을 고조시켰으며 결과적으로 대만정부의 대륙정책 변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하고 체계화된 統一指針으로서 「國家統一綱領」¹³⁾ 을 제정하였다. 또한 대만정부는 1949년 이후 대만의 정상적인 憲政 實現을 제약해 온 「動員勸亂時期」(1991. 5)의 종식을 선언하고 양안 교류·협력을 총괄하는 「臺灣地區·大陸地區人民關係條例」(1992. 7, 「人民關係條例」로 약칭)¹⁴⁾ 를 공포함으로써 중국과의 적대관계 청산 및 대륙정책 전환 의지를 보였다. 특히 「國家統一綱領」과 「人民關係條例」는 대만정부가 기존의 비현실적·수세적인 대륙정책을 지양하고 향후 새로운 차원의 兩岸關係를 수립하기 위한 사전준비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처럼 대만의 「國家統一綱領」과 「人民關係條例」 공포를 계기로 중·대만 관계는 교류·협력의 제도화 및 정치적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단계로 진입했으며, 1993년 4월 海協會 主導 涵 會長과 海基會 辜振甫 會長의 「汪辜會談」은 중·대만관계의 질적인 변화를 보여준 대표적인 예이다.

13) 대만의 「國家統一綱領」은 통일정책의 기본방향을 협상에 의한 평화통일 견지 및 分離主義 반대, 쌍방의 정치실체 및 통치권의 독립 승인(즉 主·客, 中央·地方으로의 구분을 배격), 「唯一·合法的 代表權」에 대한 편견 포기 및 국제무대에서의 平和共存 실현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兩岸의 통일이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통일정책 추진과정을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의 정책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短期目標: 대만의 정치적 실체 확보, 민간교류의 확대, 중국의 정치·경제개혁 유도, 중국의 무력사용 포기 및 평화공존 실현. 中期目標: 정부차원의 공식적인 접촉 통로 확립, 兩岸의 전면적인 三通 실현. 長期目標: 통일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 추진. 黃昆輝, “國家統一綱領的要旨與內涵,” 「中國大陸研究」, 第34卷 12期 (1991年 12月), pp. 5~9 참조.

14) 「人民關係條例」는 총 6장 96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안관계와 관련된 행정, 민사, 형사, 罰則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 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통일 이전에 대만지구의 안전과 주민의 권익·복지를 확보하고,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주민의 왕래를 規範化하며,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규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第 III 章 中·臺灣關係의 分野別 現況

前述한 바와 같이 중·대만의 관계변화는 어느 일방의 적극적인 노력보다는 이념적·정치적 제약의 틀속에 얽매어 있는 기존관계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쌍방의 인식전환에 기인한다. 즉 중국과 대만은 과거 兩岸關係와 관련된 제반정책을 결정·추진하는 과정에서 政治的 考慮를 절대시하였으나 점차 現實的·經濟的 要求를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따라서 쌍방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政治的인 分野와 비교적 덜 예민하면서도 각자의 대내적인 요구에 부합될 수 있는 경제·사회·문화분야를 엄격히 구분하는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이에 따라 중·대만은 인적 교류, 경제교류, 사회·문화교류, 半官機構의 접촉 등 비정치적인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관계발전을 이룩하였다.

1. 人的 交流

중·대만간의 인적 교류는 경제교류와 함께 非政治的 交流·協力の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중·대만간에는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간헐적인 인적 교류가 시작되었으나 이는 정부의 공식적인 許可를 얻지 않고 비공식적인 차원에서 행해진 극소수 인사의 상호방문에 불과하였다. 兩岸의 본격적인 인적 교류는 대만정부가 대륙내 친척방문을 허용하면서 이루어졌

다. 1987년 당시 國民黨內에서는 대륙내 친척방문의 허용여부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야기되기도 했으나, 결국 蔣經國의 의도에 따라 친척방문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었다.¹⁾

대만정부의 대륙내 친척방문 허용조치는 당시 中國으로부터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음으로써 중·대만의 관계발전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중국 國務院은 특별담화를 통하여 “중국정부는 兩岸住民의 자유로운 往來와 交流增進을 주장해 왔으며 앞으로 대륙을 방문하는 대만주민을 열렬히 환영하는 것은 물론 이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할 것”²⁾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國務院 辦公廳은 대만주민의 대륙방문을 위한 편의 제공과 관련한 通知에서 ① 대만동포의 대륙내 친척방문, 관광을 환영하며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한다. ② 대륙방문 수속은 홍콩의 외교부 홍콩사무소와 中國旅行社, 미국·일본 및 기타 지역에서는 중국 대사관·영사관에서 담당한다. ③ 세관 통과시 휴대품은 적정한 범위내에서 검사를 면제한다. ④ 대륙방문중 각종 교통비와 숙박료는 大陸住民과 동일한 대우

1) 당시 國民黨內的 진보세력은 이미 兩岸의 정치·경제·사회·문화수준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륙내 친척방문 허용을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까다로운 조건을 부가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반면에 國民黨內的 원로·보수세력들은 대륙내 친척방문 허용을 기존의 反共政策 포기로 인식함으로써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蔣經國은 친척방문 허용을 결정하는 동시에 이를 전담하는 위원회(專門小組)를 구성하여 친척방문의 구체적인 절차, 방법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 蔣經國의 이러한 의도는 집권 말기에 추진한 대내적 정치개혁과 대륙정책 조정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尤里, “探親方案顯示臺灣開放誠意,” 「爭鳴」(1987年 11月號), pp. 72~73.

2) 「人民日報」, 1987年 10月 15日.

를 받는다. ⑤ 國家外換局에서 換錢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外換의 휴대는 제한이 없다. ⑥ 대륙주민과 동일하게 參觀·관광할 수 있다. ⑦ 중국정부의 각종 法律과 規定을 준수하고 각지의 社會風俗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³⁾

대만정부가 초기에 발표한 친척방문에 관한 규정은 대륙내에 三寸이내(1988년 7월 이후 四寸 이내로 확대)의 친척이나 배우자가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現역군인과 공무원을 제외하고 年齡, 省籍과 관계없이 대만 적십자사에 친척방문을 신청하고 대륙을 방문할 수 있다는 것으로 비교적 까다로운 제한을 부가한 것이었다. 또한 대륙거주 중국주민의 臺灣訪問에 관해서는 이를 엄격히 제한하는 정책을 취하였다. 그러나 인적 교류가 점차 활성화되면서 친척방문에 관한 제한규정이 보다 완화되어 1988년 11월 9일 問病·問喪을 위한 대륙거주자의 대만방문을 허용한 데 이어 1988년 12월 20일에는 해외 거주 學者, 해외 留學生의 대만방문을 허용하였다.⁴⁾ 그 밖에 1990년 8월에는 中國共產黨員을 제외한 대륙거주 학자, 예술인, 체육인 등 일부 주요 인사의 대만방문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최근에는 中國共產黨員의 대만방문, 대만 공무원의

3) 「人民日報」, 1989年 10月 17日.

4) 1988년 11월 9일~1992년 4월 2일의 기간중 問病·問喪을 위해 대만을 방문한 대륙주민은 총 12914명(問病 9,873명, 問喪 30,411명)에 달한다. 또한 동기간 중 대만을 방문한 대륙의 民間團體 인사, 해외에서 활동하는 學者, 留學生은 439명에 달한다. 朴斗福, 「中·臺 兩岸關係: 交流·協力の 推進實態 및 그 示唆點」(서울: 統一院, 1992), pp. 142~143.

대륙내 친척방문 등에 대한 제한도 점차 완화하고 있다.⁵⁾

이처럼 중·대만의 인적 교류는 친척방문 형식의 相互訪問을 허용한 이후 이에 관한 제한규정이 점차 완화되고, 특히 兩岸의 경제교류 및 사회·문화교류가 확대되면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2. 經濟交流

중·대만간의 경제교류는 비정치적인 분야에서의 兩岸交流중에서도 쌍방의 利害關係가 명확히 일치하는 부분으로서 기존의 양안관계 발전을 촉진한 중요한 요인일 뿐만 아니라 향후 관계발전의 지표다. 중국은 1980년대 중반 이후 改革·開放政策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대만과의 전반적인 關係改善과 함께 대만의 자본·기술 도입을 적극 고려하기 시작하였으며, 대만 역시 대내적인 정치·경제적 상황변화에 따라 대륙과의 經濟交流에 적극성을 보였다. 현재의 중·대만 경제교류는 이미 비공식적인 間接貿易을 중심으로 한 초보적인 교류단계에서 벗어나 무역·투자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5) 대만정부가 인적 교류에 더욱 적극성을 보이게 된 것은 1988년 7월 12일에 개최된 국민당 13全大會 제7차 회의에서 「現階段大陸政策案」을 통과시키면서 부터이다. 여기에서 국민당은 그간의 兩岸關係 변화를 결산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정치·경제·사회·문화교류의 4개 부문에 대한 중점사항을 명시하였다. 그중에서 인적 교류와 관련을 갖는 사회부문에서는 친척방문의 지속적인 확대 및 제한의 축소, 직계 친척·배우자의 間病·間喪을 위한 대륙거주 중국인의 대만방문 허용 검토, 민간단체를 통한 양안간 민간 서신교환 허용 등을 중점사항으로 규정했다. 「中央日報」(臺灣), 1988年 7月 13日 참조.

制度化를 추진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우선 양안간 교역면에서 비록 대만정부가 공식적으로 兩岸의 三通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交易量이 1979년의 7,780만달러 수준에서 1991년에는 약 57억달러, 1992년에는 약 80억달러 수준으로 급격하게 확대되었다. 또한 交易規模의 확대 뿐만 아니라 交易商品構造에 있어서도 초기의 섬유류, 공업용 원료 및 부품, 식품류 등 노동집약적 상품이나 원자재 위주의 교역에서 점차 기계·전자제품 등 자본집약적인 상품의 교역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와같은 중·대만간 교역의 확대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최근 중국은 社會主義 市場經濟體制로의 전환과 改革·開放 확대를 위해 대만과의 교역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며, 대만도 兩岸間的 경제교류 확대에 대한 대만 經濟界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국, 대만은 한결같이 세계경제의 블럭화 및 保護貿易主義 강화추세, 미국·EC의 市場開放 압력에 효율적으로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홍콩, 마카오 및 동남아의 화교경제권을 포함하는 「中華經濟圈」 형성을 적극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중·대만의 교역이 더욱 활성화될 가능성이 많다. 또한 交易方式에 있어서도 기존의 간접교역 위주에서 점차 直接交易 형태를 띠게 될 것이다. 다만 ① 대만정부가 아직까지 전면적인 三通을 공식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고, ② 대륙에 대한 經濟依存度의 심화가능성을 우려하여 양안간 교역량을 대만의 총

교역량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⁶⁾ ③ 무역역조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은 兩岸間 교역확대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⁷⁾

교역량의 증대와 함께 양안간 경제교류의 중요한 측면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대만 기업들의 對中國 直接投資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양안간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중국이 「대만동포의 투자장려에 관한 규정」(關於鼓勵臺灣同胞投資的規定)⁸⁾ 등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 유치를 위한 각종 特惠措置를 마련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즉 1987년말 현재 대만의 대중국 투자는 총 80개 항목의 1억 4천만달러(投資協議額 기준)에 불과하였으나 1988년에는 433개 항목의 6억 5천만달러, 1989년에는 1,560개 항목의 16억 6천만달러, 1990년에는 2,868개 항목의 23억 4천만달러, 1991

6) 1991년도의 경우 대만의 對大陸 交易量은 대만 총교역량의 9.8%를 차지했다.

7) 1980~90년중 兩岸間 交易總量은 157억 877만달러이며, 이중에서 중국의 무역적자 총액은 100억 5천만달러에 달했다. 특히 1991년의 경우 총교역량 57억 9천 200만달러중 중국의 무역적자는 35억 4천 100만달러로 급격히 증가되었다. 또한 대만 經濟部 國際貿易局의 발표에 따르면 1993년 1~4월의 양안간 총교역량 26억 3천만달러(전년대비 25.4% 증가)중 대만의 對中國 수출이 22억 9천만달러(전년 동기대비 32.9% 증가)인 반면, 중국의 對臺灣 수출은 3억 3천 700만달러(전년 동기대비 9.4% 감소)에 불과했다. 중국은 대만과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하여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지는 않으나, 앞으로 양안간의 貿易逆調가 계속 확대될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葉運英, “大陸學者看兩案經貿關係,” 「中國大陸研究」, 第35卷 7期(1992年 7月), pp. 10~16 참조.

8) 이 규정은 총22조에 걸쳐 대만의 對中國 투자지역, 투자형식, 투자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 國務院은 1988년 7월 7일 이 규정을 공포하면서 “양안간의 경제·협력을 적극 촉진하고 三通을 추진하여 조국의 平和統一을 실현하고자 하는 취지하에 본 규정을 마련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人民日報」, 1988年 7月 7日 참조.

년에는 3,800개 항목의 35억달러, 1992년에는 7,358개 항목의 약 90억달러로 증가하였다.⁹⁾ 특히 1992년 한해 동안 대만기업의 對中國 投資는 투자 항목, 투자협약에서 1991년까지의 총투자 규모를 능가하는 신장세를 보임으로써 대만은 홍콩·마카오에 이은 제2의 對中國 投資國으로 부상하였다.¹⁰⁾

대만기업의 대중국 투자는 量的인 增大와 함께 투자업종, 투자규모, 투자지역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즉 ① 중소기업에 의한 섬유, 신발, 완구류 등 勞動集約的 産業에서 기계·전자, 석유화학, 에너지 개발 등 자본집약적인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고, ② 기업의 투자규모가 점차 大型化하고 있으며, ③ 대만과 인접한 廣東省, 福建省 등의 연해지역 중심 투자에서 대도시 및 내륙지역으로 투자범위가 확대되고 있다.¹¹⁾

이처럼 대만의 경제여건 변화와 중국정부의 대만 기업 專用工團 조성, 세제상의 혜택 부여 등은 대만 기업의 對中國 投資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여기에도 제약요

9) 「經濟導報」, 1990年 6月 16日, pp. 30~31; 陳福敏, “對海峽兩岸經貿關係發展的階段分析,” 「海峽兩岸關係學術討論會論文」(北京:1991), 表3; 鄭偉鳴, “中共對臺灣工作新轉變,” 「廣角鏡」, 1992年 11月號, p. 13; *The Economist*, May 22, 1993, pp. 29~30 참조.

10) 宋克寒, “李登輝「務實」的兩岸關係展望,” 「鏡報月刊」(1993年 4月號), pp. 82~83 참조.

11) 예를 들어 1987년의 경우 대만기업의 대중국투자는 福建省과 廣東省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1989년 이후에는 北京市, 海南省, 廣西省, 山東省 등으로 투자지역이 확대되고 있다. 張旭平, “海峽兩岸經務關係與展望,” 「中共研究」, 第26卷 7期 (1992年 7月), pp. 25~31; 陳明邦, “現階段對大陸投資政策與法令,” 「中國大陸」(1993年 2月號), pp. 5~9 참조.

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중에서도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대만기업들에 대한 法的 保護裝置가 미흡하다는 점이 대만기업들의 중국진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만의 기업들은 중국에 投資保護協定 체결을 요구하고 있으나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¹²⁾ 그 밖에 臺灣企業들이 중국진출과 관련하여 우려하고 있는 것은 중국진출을 통해 단기적으로 경제활로를 모색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中國에서 생산된 상품이 가격, 품질면에서 대만상품을 압도하는 경우 동일한 상품을 생산하는 대만내 기업이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¹³⁾ 대만정부 역시 이러한 점을 우려하고 있는데 대만 행정원 大陸委員會는 1984~1992년의 기간중 觀光, 貨金, 민간차원의 無償移轉, 投資 등으로 중국에 유입된 대만자본이

-
- 12) 대만의 投資保障協定 체결 요구에 대해 李風淸 經濟貿易部長은 14全大會 기간의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①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대만기업은 「中外合資經營企業法」의 관련규정에 의거, 법적인 보장을 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투자상의 안전문제가 발생한 적은 없다. ② 투자보호협정은 對等한 政府간의 협정이므로 양안간에 이러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③ 다만 臺灣當局이 대만동포의 민심에 순응하여 대만기업의 對中國投資를 장려한다면 적절한 방식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이러한 입장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에 의거, 대만이 투자보호협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대만정부가 우선 三通를 허용하고 대만기업의 대중국투자를 적극 장려할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十四大舉行中外記者招待會,” 「人民日報」, 1992年 10月 16日 참조.
- 13) 이를 우려하는 대만 經濟界의 일부 인사들은 중국에 진출한 대만기업들이 생산한 상품들이 가격, 품질면에서 이미 臺灣商品과 경쟁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中國時報」, 1992年 4月 6日 참조.

194억달러에 달한다고 밝히고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만자본의 對中國 流入이 계속 확대될 경우 대만의 國際收支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¹⁴⁾ 특히 대만정부는 최근 대만의 對中國 投資가 중국의 부동산, 주식 등 危險負擔이 매우 높은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대만기업이 대중국 투자에 신중을 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社會·文化交流

중·대만의 비정치적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民間團體를 중심으로 한 社會·文化交流 역시 양안관계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중·대만의 관계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중·대만간의 社會·文化交流는 쌍방의 정치적인 관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고 뿌리깊은 相互不信이 해소되지 않은데 따른 제약요인을 안고 있다. 즉 사회·문화교류는 인적 교류, 경제교류에 비해 政治的·理念的 制約을 더욱 많이 받기 때문에 외형적인 교류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한 측면을 갖고 있다.

사회·문화교류의 이러한 한계는 중국과 대만이 설정하고 있는 兩岸間 사회·문화교류의 基本趣旨에서도 잘 나타난다.

14) “臺資流入大陸近兩百億美元,” 「中央日報」, 1993年 5月 17日.

中國은 대만과의 사회·문화교류를 통해 ① 대륙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대한 대만주민들의 再認識 유도, ② 대만과의 전면적인 三通 실현을 위한 분위기 조성, ③ 중·대만의 文化的 同質性 강조를 통한 대만내 獨立靄圍氣 억제 등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에 臺灣은 사회·문화분야의 각종 통로를 통해 대만의 정치·경제적 경험과 성과를 전파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륙주민들에게 「民主·自由·均富」의 중국건설 필요성을 인식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¹⁵⁾ 즉 중·대만의 사회·문화교류는 내면적으로 상대방에 대해 자신들의 이념·체제의 우월성을 인식시키고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정치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¹⁶⁾

이처럼 중·대만의 사회·문화교류는 政治的 要因에 의한 제약을 받고 있으나, 이는 장기간의 대립·반목을 지속해 온 두 체제간의 교류·협력 初期段階에서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또한 아직까지 중·대만의 사회·문화교류가 실질적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중·대만의 關係改善, 전반적인 교류·협력 분위기 조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15) “我對中共展開文化出擊,” (臺灣 行政院 新聞局長 邵玉銘의 기자회견) 「中央日報」, 1990年 11月 5日 참조.

16) 바로 이러한 측면은 중·대만간 사회·문화교류의 실질적인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즉 中國은 대만과의 사회·문화교류에서 「和平演變」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臺灣 역시 중국의 「統一戰線」 의도를 경계하고 있기 때문에 중·대만간의 사회·문화교류는 자신들의 체제유지에 威脅要因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基本前提로 설정하고 있다.

가. 學術交流

그동안 중·대만의 학술교류는 제3국에서 개최되는 國際學術會議를 통한 쌍방 학자들의 접촉, 중국 또는 대만에서 개최된 국제학술회의 참가, 제3국에서의 공동학술회의 개최, 中國에서의 공동학술회의 개최 등의 단계를 거치면서 발전하여 왔다.

중·대만간의 학술교류가 活性化되기 시작한 것은 1988년 7월 대만정부가 「現階段大陸政策案」을 통해 兩岸의 사회·문화 교류 지침을 마련하면서 부터다. 이 指針에서 대만정부는 “대륙의 文化復興運動을 추진하는 일환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반대 혹은 학술자유를 위해 노력하여 온 대륙의 學術·文藝界 인사의 대만방문을 추진하는 동시에 대륙의 학술·과학기술·문학·예술분야 출판물 유입을 허용하고 그에 대한 著作權을 보호한다”¹⁷⁾ 는 점을 명시하였다. 물론 대만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초청·유입대상을 反마르크스주의 인사, 출판물로 한정하고 관련부처의 기준을 얻어야 한다는 조건이 부가된 것이기는 하나, 大陸과의 사회·문화교류 자체를 금기시 해 온 기존의 정책을 대대적으로 전환한 획기적인 조치였다. 특히 1988년

17) 사회·문화교류 지침은 그 밖에도 言論媒體의 대륙관련 보도 확대, 각급 교과서의 대륙문제 수록, 대학의 대륙문제 연구과정 강화 및 대륙관련 정보 제공, 국제올림픽 위원회 규정에 의거한 각종 국제경기대회의 참여 등을 명시하고 있다. 朱玉山, “兩岸文教交流之研究,” 「中國大陸研究」, 第35卷 第10期 (1992年 10月), p. 70.

12월 1일 대만 行政院이 이들 조치의 구체적인 추진을 위한 細部指針으로 「대륙문제와 관련된 국제학술회의, 문화·체육활동 요강」, 「대륙내 저명인사 및 해외 유학생의 대만방문 규정」 등을 공포함으로써 兩岸의 학술교류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1988년 12월 이후 徐邦泰, 吳牟人, 許成鋼, 錢穎一, 裴敏新 등 중국 해외 유학생의 대만 방문(1988. 12. 20), 복건성 廈門市 漢醫師聯合會가 주최한 「제1차 한의학 학술교류회」(海峽兩岸首屆中醫藥學術交流會)에 대만 한의학 대표단 참가(1988. 12), 北京大學·中國社會科學院·淡江大學(臺北)이 북경에서 공동 주최한 「5.4운동 7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海峽兩岸紀念五四運動七十周年學術討論會)에 淡江大學 孔鵬程 교수를 단장으로 한 대만의 대학교수대표단 참가(1989. 5. 10) 등 초보적인 학술교류가 추진되었다.¹⁸⁾

중·대만의 학술교류는 1989년 6.4 천안문 사건의 영향으로 침체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1990년 하반기 이후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특히 대만정부는 1991년 12월 양안의 학술·문화·체육교류와 관련된 기존의 制限規定을 보다 완화하는 동시에, 1992년 2월에는 行政院 大陸委員會 주최로 兩岸 학술·문화교류에 관한 討論會를 개최하는 등 대륙과의 학술교류에 적극성을 보였다.¹⁹⁾ 이처럼 중·대만의 학술교류는 6.4 천안문

18) 周玉山, “兩岸文教交流之研究,” pp. 71~76 참조.

19) 行政院 大陸委員會가 주최한 「兩岸文教交流研討會」는 1992년 2월 17~19일의 3일간 개최되었는데 대륙과의 學術·文化交流와 관련된 기관의 과장급 이

사건 이후의 일시적인 浸滯期를 거쳐 계속 확대되어 왔으며, 중·대만의 학술기관이 공동주최하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한 대표적인 學術交流 事例는 「손중산과 아시아」를 주제로 한 학술토론회(1990. 8. 3, 廣東省 中山翠亨村), 「손중산과 중국의 현대화」를 주제로 한 국제학술토론회(1990. 8. 12, 上海), 「손중산사상과 21세기」를 주제로 한 국제학술회의(1991. 4, 홍콩), 「해협 양안관계 학술토론회」(1991년 8, 北京), 신해혁명 80주년 국제학술토론회 (1991. 10, 武昌), 해협양안 제3차 산업 연구·토론회(1993. 4. 27, 北京), 양안 油田開發 토론회 (1993. 5. 20, 北京), 「해협양안 법학연구토론회」(1993. 8. 23, 北京) 등이 있다.

이상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중·대만의 학술교류는 많은 제약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교류 수준은 중·대만의 知識界가 만족할 만한 정도에 이르지 못했으며 이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만의 지식계는 대만정부가 政治的인 要因을 지나치게 고려한 나머지 兩岸의 학술교류에 대해 소극적이고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불만을 보여왔다. 즉 대만의 지식계는 대만정부가 제시하는 정책상의 口號와 實際政策이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륙의 民主化 촉진 및 양안의 共感帶 형성에 기여할

상 실무자, 문화·학술·종교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였다. 이처럼 대만이 대륙과의 학술·문화교류에 적극성을 보이게 된 것은 6.4 천안문 사건 이후 대륙 知識人들의 동요, 사회주의권의 급격한 변혁 등이 자신들의 체제·이념의 우월성을 효율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好機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수 있는 학술교류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²⁰⁾ 따라서 이들은 대만정부가 중국의 統一戰線 기도를 지나치게 의식하지 말고 보다 정정당당하게 학술·문화교류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²¹⁾

앞으로도 중·대만간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兩岸의 학술교류는 여전히 정치적인 요인에 의한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이에 따른 知識界와 政府間의 의견대립도 완전히 해소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양안간 학술교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온 臺灣政府가 최근 정치적인 고려를 최대한 억제하고 학술교류 자체의 純粹性을 부각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 兩岸의 학술교류가 보다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즉 대만의 李登輝 총통은 대만의 대표적인 학술기관인 中央研究院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향후 양안은 政治制度·理念의 구속을 벗어나 학술교류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상호이해의 촉진, 敵對感 解消는 물론 가치관의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²²⁾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兩岸의 학술교류에 대한 정치적

20) 학술교류상의 정치적 제약요인과 이에 대한 대만 지식인들의 불만에 대해서는 陳璋津, “兩岸學術交流中的政治因素,” 「中國大陸研究」, 第35卷 第11期 (1992年 11月), pp. 76~88 참조.

21) 즉 대만의 대다수 지식인들은 자신들이 중국의 統一戰線에 현혹되지 않을 수 있는 소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친척방문 등 구태의연한 편법을 통한 학술교류 방식을 벗어나 보다 진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왔다. “放寬兩岸學術·文化交流管制尺度,” 「聯合報」, 1989年 3月 14日; “學術交流此路仍不通,” 「中國時報」, 1989年 4月 21日.

22) 이와 함께 李登輝 총통은 학술연구는 정치적인 문제를 초월해야 하고, 학술·언론의 자유는 결코 소수학자의 特權이 아니며, 양안의 학술교류를 촉진하는

인 간섭을 축소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대만정부의 정책변화 움직임에 보조를 맞추어 대만의 지식계 역시 兩岸의 學術交流 증진을 위한 각종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방안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대만간에는 단시일에 해결될 수 없는 정치적인 문제들이 존재하지만 정부는 양안의 학술교류가 兩岸關係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政治的 干與를 억제하고 명확한 방침을 수립해야 한다.²³⁾ 둘째, 양안의 학술교류 과정에서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기 위해 대만의 「海基會」와 중국의 「海協會」와 같은 仲介團體를 통해 쌍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學術交流協定」을 체결하여야 한다.²⁴⁾ 셋째, 학술교류의 일차적인 목적을 상호간의 理解增進에 두고 논쟁이 야기될 수 있는 정치·이념적인 주제를 피해야 하며 상호존중·상호이해의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²⁵⁾

이처럼 양안간 학술교류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대만정부 및 대만 지식계의 인식이 제고되고 있다. 중국 역시 대만 지

과정에서 양안정부는 국민의 토론의 자유, 정보취득 및 전파의 자유를 박탈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促進兩岸學術交流應超越一切政治樊籬,” 「中國時報」, 1992年 7月 8日.

23) 李遠哲(臺灣中央研究院 院士), “參雜政治因素交流無益,” 「聯合報」, 1992年 7月 6日.

24)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기본취지는 양안의 학술교류가 일시적인 便法이 아닌 정상적인 제도·규범에 의거하여 추진되어야만 이해관계를 둘러싼 양안의 對立·紛糾를 방지하고 학술연구의 성과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兩岸學術交流應訂立有效規範,” 「中國時報」, 1992年 6月 14日.

25) “兩岸文化交流的省思與努力,” 「聯合報」, 1992年 6月 24日.

식계의 認識變化, 대만정부의 政策變化에 부응하여 학술교류의 최대 장애로 작용해 온 정치적인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고 학술교류의 純粹性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兩岸 학술교류 정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중·대만의 학술교류는 정치적인 제약이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交流對象·主題의 선별, 융통성있는 交流方式의 채택 등을 통해 계속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업·에너지 개발·과학기술분야 등 쌍방의 利害關係가 합치되는 분야에서 학술교류는 더욱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²⁶⁾

나. 言論交流

중·대만의 비정치적 분야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면서 쌍방의 言論交流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대만간의 언론교류가 확대될 수 있었던 요인은 교류·협력 活性化 이후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중·대만주민들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언론기관 본연의 自覺과 중·대만정부가

26) 과학기술분야 학술교류의 대표적인 것은 1993년 3월 北京에서 개최된 核관련 국제학술회의에 대만의 핵전문가가 참가한 것과 대만의 핵폐기물 처리, 중국의 核發電所 건설 등과 관련된 기술협력 움직임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항은 중국이 대만의 핵발전소에서 배출되는 核廢棄物 처리장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대만이 중국의 핵발전소 건설을 위한 기술과 자본을 제공하는 문제다. George Wehrfritz, "Hazardous Business: China offers site for Taiwan nuclear waste," *Far Eastern Economic Review*, 25 March, 1993, p. 23. 그밖에 1993년 4월 12일 북경에서 개최된 「兩岸農業生物技術產業化研討會」에는 대만의 생물·농업기술 전문가 20명이 참가하였다. 「人民日報」, 1993年 4月 13日.

兩岸의 關係改善 촉진 및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媒介體로서 언론의 역할을 중시하게 되었기 때문이다.²⁷⁾

현재 중·대만의 언론교류는 기자들이 친척방문 형식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취재하는 단계를 거쳐 공식적인 取材訪問은 물론 言論社間의 협력, 지사의 상호설치를 협의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최초의 공식적인 취재는 중국정부가 1989년 3월의 제7기 全人大 2차회의에 대만기자들의 취재를 허용함으로써 이루어졌다. 그 이후 중국정부가 北京에서 개최된 아시아개발은행(ADB)연차총회, 아시아지역 청소년 체조선수권대회 등의 행사에 대만기자들의 공식취재를 허용하면서 대만 기자들의 중국방문이 활성화되었다. 중국정부의 이러한 政策變化에 따라 1989년 4월 대만 행정원은 대만 언론기관의 大陸取材를 공식적으로 허용하였으며, 1990년 6월에는 행정원 大陸委員會가 대륙의 언론, 문화, 예술, 체육인사의 대만방문 허용과 관련된 要綱을 발표하였다.²⁸⁾

27) 즉 대만의 경우 대만정부의 戒嚴解除, 언론기관에 대한 각종 제한 완화조치에 따라 언론기관이 양적으로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양안관계에 대한 보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중국의 경우에도 對臺灣 宣傳方式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中·臺灣의 언론교류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1987년 10월 대만정부가 대륙내 친척방문을 허용한 이후 양안의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중·대만의 言論媒體가 기여한 전반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宋國誠, “官方媒體在海峽兩岸交流中的角色: 「人民日報」和「中央日報」的比較分析,” 「中國大陸研究」, 第35卷 第3期 (1992年 3月), pp. 60~74 참조.

28) 대만정부가 중국의 언론인에 대한 대만방문을 허용한 직후 최초로 대만을 방문한 사람은 「新華社」 기자 范麗靑과 「中國新聞社」 기자 郭偉鋒이었다. 이들은 대만방문중 대륙에 직접 기사를 送稿하였는데 이는 兩岸간 언론교류 수준

한편 중국과 대만은 兩岸間의 언론교류가 증가하고 보다 공식성을 띠면서 이를 制度化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중국은 대만정부가 대륙내 친척방문을 허용하면서 친척방문 형식을 통한 臺灣記者들의 대륙취재가 급속히 증가하자 이를 규제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다. 중국이 처음으로 제시한 지침은 1987년 11월 「中華全國新聞工作者協會」(「中國記協」으로 약칭) 명의로 발표된 것이며, 그 내용은 ① 대만의 언론기관이 대륙에 기자를 파견하고자 할 경우 우선 中國記協에 대륙취재를 신청하여야 하고, ② 신청서에는 해당 언론기관의 派遣證明書 및 기자의 履歷書가 첨부되어야 하며, ③ 「中國記協」의 동의를 얻은 후 취재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²⁹⁾ 두번째의 지침은 1988년 5월 중국공산당 中央宣傳部가 발표한 「대만기자의 대륙취재 관리 방안」(關於 臺灣記者在大陸採訪的管理辦法)인데 여기에서는 대만기자의 대륙취재 신청, 취재 규정, 대우 등에 관한 사항을 비교적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1989년 1월 18일 國務院 산하의 臺灣事務辦公室 설치와 때를 맞추어 세번째의 지침을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① 대륙취재를 희망하는 대만의 기자는 新華社 홍콩지사 혹은 중국의 해외공관에 취재를 신청하고, ② 취재신청시 취재대상·지역·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取材計劃書를 첨

을 한차원 높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9) 「人民日報」, 1987年 11月 2日.

부하여야 하며, ③ 취재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³⁰⁾ 그 밖에 중국은 1992년 3월 대륙기자의 대만취재와 관련하여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臺灣工作辦公室, 中央宣傳部の 명의로 「언론분야 종사자의 대만취재에 관한 규정」(關於新聞工作人員赴臺採訪規定)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중국기자의 대만방문에 관한 최초의 규정이다. 이 규정의 주요 내용은 ① 취재를 위한 대만방문은 조직·계획적이어야 하는 동시에 「實效性」을 중시해야 하며, ② 귀국후에는 대만의 언론기관, 언론인과 私的인 親分關係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³¹⁾

이상의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대만간의 언론교류는 兩岸 교류·협력의 活性化 및 양안 주민의 상호이해 촉진 뿐만 아니라 중·대만정부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中間媒介體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중·대만의 언론교류는 兩岸關係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충족시키고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었다기 보다는 다분히 政治

30) 그 밖에 대만의 언론기관이 대륙내에 지사를 설치할 수 없고, 친척방문 혹은 관광형식으로 大陸을 방문하는 기자는 일체의 취재활동을 할 수 없으며, 대만의 언론기관이 대륙주민, 홍콩·마카오 주민을 特約記者 혹은 通訊員으로 고용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했다. 또한 1989년 6.4 天安門事件 이후에는 新華社 홍콩지사의 동의를 얻은 후 다시 「中國記協」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건을 첨가하였는데 이는 당시 중국의 대내적 상황과 관련, 대만기자의 대륙취재를 제한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었다. 唐金鋒, 「海峽兩岸民間交流政策與法律」(上海: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1991), pp. 7~8; 王玲玲, “論臺海兩岸的新聞交流,” 「中國大陸研究」, 第35卷 9期 (1992年 9月), p. 75.

31) 「聯合報」, 1992年 6月 19日.

的 意圖하에 추진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첫째, 언론의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認識 差異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 중국은 여전히 黨 路線·方針의 傳播를 언론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黨 中央과 言論의 일치를 강조한다.³²⁾ 둘째, 언론교류 과정에서 야기되는 정치적인 문제로 인한 상호마찰이다. 즉 國旗, 國號 등의 사용과 관련된 문제 및 대만정부의 共產黨員 신분의 대륙기자에 대한 대만방문 불허 방침 등으로 인해 언론교류가 제한을 받아왔다.³³⁾ 셋째, 언론교류의 對等性, 즉 상호균형문제와 관련된 대립이다. 대만정부가 대륙거주 친척방문을 허용한 이후 1년동안 대만내 40여개 언론기관의 약 200여명의 기자들이 競爭的으로 대륙을 방문하였다. 당시 臺灣政府는 대륙 기자들의 대만방문을 불허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정부는 언론교류의 對等性을 문제삼아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대만기자들의 대륙방문을 제한하는 조치들을 강화

32)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는 車書棟, “堅持新聞工作黨性原則的幾個問題,” 「社會科學戰線」(吉林大學校), 1990年 第2期, p. 120.

33) 대만 行政院이 제정한 「대륙내 주요 언론매체 종사자의 대만방문 지침」(大陸各主要大衆傳播事業所屬有關專業人士來臺參觀訪問申請須知)에서는 공산당원 신분의 대륙기자가 대만을 방문할 경우 공산당을 탈당해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중국의 주요 言論機關 종사자들이 대부분 공산당원이라는 점 때문에 兩岸間 언론교류를 제약하여 왔으며 대만의 언론계·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1992년 7월 31일 공포된 「兩岸人民關係條例」 제77조에서 “대만지구 이외의 지역에서 內亂罪, 外患罪를 범한 대륙지구 주민이 허가를 받아 대만지구에 들어오는 경우, 입국신청시에 사실대로 신고한 경우에는 訴追·處罰을 면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공산당원 신분의 대륙기자도 대만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하였다. 이후 대만정부가 대륙기자들의 대만방문을 허용하면서 이와 관련된 대립은 해소되었으나 滯留期間, 取材範圍, 支社의 상호설치 등과 관련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³⁴⁾

이상에서 지적한 언론교류의 障礙要因들은 단기간내에 완전히 해소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兩岸의 정치적 관계변화에 민감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대만정부가 1993년 8월 16일 개최된 國民黨 제14차 全國代表大會에 중국기자 3명을 공식으로 초청한 것처럼 중·대만정부가 언론교류를 제한해 온 각종 규제조치를 적극 완화해가고 있기 때문에 양안간 언론교류의 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지사의 상호설치, 취재기간·취재지역·취재주제에 대한 制限 撤廢, 상대방 지역에서의 신문발행·배포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 점차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³⁵⁾

34) 兩岸 언론기관의 지사설치와 관련하여 중국은 「新華社」 臺北支社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만정부는 「신화사」 홍콩지사의 경우처럼 해외에 설치된 「신화사」 지사가 명목상 언론기관일 뿐 실제로는 情報蒐集·統戰 등을 추진하는 政治機構라는 점을 들어 이를 거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35)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상대방 지역에서의 신문발행·배포와 관련된 것인데, 여기에는 상대방 지역에서 발행하는 신문의 版本·內容·數量·管理 등이 포함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대만 行政院 大陸委員會는 「兩岸報紙對等發行計畫」 초안에서 원칙적으로 대륙신문의 대만내 발행부수와 대만신문의 대륙내 발행 부수를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 문제와 관련, 대만정부가 언론교류 확대를 위한 제한을 완전히 철폐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王玲玲, “論臺海兩岸的新聞交流,” p. 81.

다. 文藝·體育交流

중·대만의 인적 교류가 본격화된 이후 민간차원의 양안간 문예·체육교류 역시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兩岸住民의 상호이해를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文藝分野의 양안교류는 대만정부가 1988년 7월 중국내 문학작품 및 회화·서예·음악작품의 출판과 유입을 허용하고 TV·신문 등의 言論媒體를 통해 대륙의 각종 風物을 소개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에 따라 1988년 8월에는 중·대만 作曲家들의 회담에서 작품발표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는 데 합의하고 1989년 5월 「오늘의 중국인」(今日中國人)을 주제로 한 「兩岸音樂作品發表會」를 개최한 바 있으며, 1989년 1월에는 중국 東方美術交流協會 회장 鄧琳의 초청으로 대만의 화가 李秀奎가 北京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그 밖에 1989년 8월 양안의 최초 합작영화 「최후의 귀족」(最後的貴族)이 상영되고 1989년 10월에는 상해에서 兩岸圖書展示會가 개최되어 대만의 도서 3천여점이 전시되었다. 이처럼 양안의 문예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兩岸의 각종 문학·예술작품이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고 소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화와 TV 드라마의 共同製作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³⁶⁾ 또한 兩岸의 문예

36) 일례로 1993년 7월 29일에는 臺灣과 上海市의 TV 방송사가 「綜合藝術總動員」이라는 프로그램을 공동 제작하여 약2시간 동안 대만과 上海市에서 동시에 방영한 바 있다. 「中央人民廣播電臺」(北京), 1993年 7月 30日 09:30분 뉴스 참조.

교류가 初期段階에서는 주로 대만작가들의 대륙방문 형식을 통해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에는 대륙내 작가들의 대만방문이 증대되고 있어서 兩岸間 문예교류의 불균형적인 측면이 점차 해소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兩岸의 문예교류는 교류의 범위는 물론 질적인 측면에서도 계속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³⁷⁾

양안의 體育交流는 1888년 8월 대만정부가 국제올림픽위원회 회의 규정에 따라 중국선수단의 참여여부와 관계없이 각종 국제대회에 대만선수단이 참여할 것을 결정하고, 1989년 3월 16일 중국 올림픽위원회 부주임 何振梁과 대북 올림픽위원회 부주석 李慶華가 홍콩에서의 회담을 통해 兩岸의 체육교류에 합의하면서 본격적으로 확대되었다. 쌍방의 합의에 따라 1989년 8월 중국의 탁구 국가대표 鄧毅가 대만을 방문하였으며 1989년 9월에는 北京에서 개최된 제15회 아시아 남자 농구선수권 대회에 대만의 대표팀이 처음으로 참가하였다. 또한 대만은 1990년 8월의 북경아시안게임, 1993년 5월 上海에서 개최된 동아시아경기대회(EAG)에 대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하였다. 이처럼 兩岸의 體育交流는 중·대만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완화로 인해 법적·제도적으로는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

37) 1993년 4월 22일 중국의 政治協商會議 부주석 吳學謙(前 副總理)은 대만의 「兩岸文藝交流訪問團」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兩岸의 작가·예술가들의 다양한 왕래와 접촉을 통해서 중화민족의 문화발전을 위해 공동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人民日報」, 1993年 4月 23日.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대만의 전반적인 체육수준이 중국에 비해 현저하게 뒤떨어지고 있어서 兩岸間 體育交流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4. 半官機構의 接觸

1979년 이후 중국은 제3차 국공합작을 위한 中國共產黨과 國民黨의 黨對黨 會談을 제의하여 왔으나 대만의 거부로 인해 성사되지 못했으며, 더욱이 공식적인 정부간 접촉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³⁸⁾

그러나 중국과 대만은 兩岸의 교류·협력이 비공식적 민간 차원에서의 논의만으로는 규제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확대된 시점에서 이에 대한 制度化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또한 교류·협력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양안의 政治的 接觸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과 대만은 黨對黨 接觸, 政府間 接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정부간 접촉을 대행할 수 있는 半官半民 성격의

38) 중국은 어떠한 형식보다도 黨對黨 會談에 대해 적극성을 보여왔다. 즉 그 동안 중국은 중·대만문제가 中國共產黨과 國民黨의 대립으로 인해 발생했고 결국 양당간의 접촉을 통해서 해결될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은 民進黨을 중심으로 한 야권의 급성장, 국민당의 「臺灣化」 경향 등 대만정국의 변화상황을 감안하여 접촉 통로를 다양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즉 굳이 中國共產黨과 國民黨의 접촉만을 고집하지 않고 黨對黨 會談에 대만 民進黨의 참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仲裁機構인 海協會, 海基會를 설립하였다.³⁹⁾

海基會와 海協會 설립 이후 쌍방의 실무자간에 간헐적인 접촉이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성과는 1993년 4월 27~29일 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汪辜會談」이다. 이 회담은 汪道涵 海協會 회장과 辜振甫 海基會 회장을 대표로 이루어졌으며 두 기구의 성격, 책임자들의 정치적 비중을 감안할 때 중국정부와 대만정부의 공식적인 정치적 접촉에 버금가는 의미를 갖는다.⁴⁰⁾

1992년 8월 중국의 汪道涵 海協會 회장이 대만의 辜進甫 海基會 회장에게 회담을 제의한 이래 회담을 위한 두 기구간의 실무접촉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결국 대만의 海基會가 중국 海協會의 회담제의에 대해 싱가포르를 회담지역으로 제안하자 중국이 이를 받아들였으며, 1993년 4월 8~9일에는 북경에서 唐樹備 해협회 부회장, 邱進益 해기회 부회장을 대

39) 대만의 海基會는 財團法人의 기금형식이며 외형적으로는 순수한 민간기구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行政院 大陸委員會의 위임을 받아 대중국 접촉의 교량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大陸委員會와 海基會의 관계에 대해서는 馬英九, 「兩岸關係的回顧與前瞻」(臺北: 行政院 大陸委員會, 1992), pp. 99~118; “陸委會正式授權海基會,” 「中央日報」, 1993年 4月 5日.

40) 중국의 海協會 회장인 汪道涵은 鄧小平의 개혁·개방정책을 적극 지지해 온 중국의 대표적인 경제관료 출신으로서 1985년 上海市長을 퇴임할 때까지 경제부처의 요직을 담당했다. 또한 江澤民 총서기와는 上海交通大學의 동문이자 상해시의 개혁·개방정책을 주도해 온 동료로서 깊은 인연을 갖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1991년 海協會의 설립과 함께 회장으로 영입되었다. 한편 대만의 海基會 회장 辜振甫는 대만의 대표적인 재벌총수인 동시에 總統府 顧問, 국민당 中央常務委員이며 1991년부터 海基會의 회장을 맡고 있다. 특히 辜振甫는 이등휘 총통의 핵심 측근이다.

표로 한 실무회담이 개최되는 등 「汪辜會談」을 위한 사전작업이 진행되었다. 특히 北京에서의 실무회담에서 양측은 외교적인 관계를 결들여 「양안 공증서 사용 사증 협의」(兩岸公證書使用查證協議), 「양안 등기 우편물 조회와 유실물 보상 협의」(兩岸掛號函件查詢補償事宜協議)를 가조인하였다.

중국과 대만은 「汪辜會談」을 통해 교류·협력의 제도화 추진을 위한 양안의 공식적인 접촉통로 확립이라는 기본적인 목적 이외에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대만이 三不政策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비록 非政治分野의 논의에 한정된 반관기구의 회담이긴 하지만 우선 대만을 협상태이블로 끌어들이므로써 三不政策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 반면에 대만은 현실적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三不政策을 카드로 投資保障協定 체결, 무력사용 포기 등과 관련된 중국의 양보를 얻어냄으로써 대만의 政治的 實體 확보를 위한 목표를 단계적으로 실현해 가려는 의도를 띠고 있었다.⁴¹⁾

「汪辜會談」에서 다루어진 주요 현안은 해협회와 해기회간 회담의 정례화, 교류·협력 과정에서 야기된 각종 범죄·분쟁

41) 대만의 이러한 의도는 최근 중국이 「一國兩制」 원칙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중국은 14전대회 이후 「一國兩制」에 대한 기존의 강경한 입장에서 다소 후퇴하여 대만이 「하나의 중국」 원칙만 견지한다면 「두개의 체제」와 관련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여 왔다. 대만문제와 관련된 중국의 최근 입장변화에 대해서는 齊辛, 「鄧辦」主導下的中共內政外交, 「九十年代」(1993年 6月號), pp. 60~63 참조.

처리를 위한 관련 협정 체결, 대륙에 진출하고 있는 대만기업의 投資保障 문제 등으로 대별된다. 우선 두 기구간의 정기적인 접촉과 관련하여 “쌍방의 副代表級 회담을 6개월에 한번 씩 개최하고 상호 연락체계를 구성한다”는 점에 합의하고, 이를 「두기구간의 연락 및 회담제도 협의」(兩會連繫及會談制度協議)에 명시하였다. 또한 교류·협력의 制度化와 관련하여 北京에서의 실무회담에서 가조인된 바 있는 「양안 공증서 사용 보증 협의」, 「양안 등기 우편물 조회와 유실물 보상 협의」를 공식으로 채택하는 한편, 密入國者 송환, 어민간의 분류 처리, 知的 所有權 보장, 사법기구간의 상호협조 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차기 회담에서 계속 협의한다는 데 합의하였다.⁴²⁾ 그 밖에 대만기업의 投資保障 문제는 양측의 정치적인 입장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원만한 해결을 이루지 못하였다. 즉 중국은 대만기업에 대한 투자보장의 전제로서 대만의 전면적인 三通政策 실시를 요구했고, 대만은 중국의 對臺灣 무력사용 포기를 三通政策 추진의 先決條件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⁴³⁾

42) “以善意和務實態度看待「辜汪會談」,” 「中央日報」, 1993年 4月 28日; “汪辜會談在新加坡舉行,” 「人民日報」, 1993年 4月 28日; “汪辜會談圓滿結束,” 「人民日報」, 1993年 4月 30日.

43) 前述한 바와 같이 대만정부는 1991년 2월에 확정한 「國家統一綱領」에서 통일정책의 추진과정을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의 주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만은 政治的 實體의 확보, 중국의 對臺灣 武力使用 포기 등 단기목표가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기목표로 설정된 양안의 전면적인 三通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만의 통일정책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黃昆輝, “國家統一綱領的要旨與內涵,” pp. 5~9 참조.

결국 「汪辜會談」은 회담 이후의 공동성명(汪辜會談共同協議)을 포함한 4개의 협의서를 공식 채택하고 두 기구간의 접촉을 정례화함으로써 양안간 교류·협력의 제도화 추진을 위한 協商通路의 확보라는 기본적인 목표는 달성하였으나, 중국과 대만이 내면적으로 의도하고 있던 정치적 관계개선을 위한 돌파구의 모색이라는 차원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汪辜會談」의 이러한 측면은 “성공도 실패도 아닌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라는 대만측 해기회 부회장 邱進益의 평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⁴⁴⁾ 그러나 「汪辜會談」은 그 동안 정치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접촉은 물론 교류·협력의 제도화와 관련된 공식적인 접촉이 없었던 中·臺灣關係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사건이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회담에 임하는 중국과 대만의 의도가 판이하게 다르고 특히 「汪辜會談」을 계기로 한 향후 양안의 공식적인 접촉·회담에 대한 대만내의 여론이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 양안의 공식적인 회담이 얼마만큼의 진전을 보일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최근 대만내에서는 양안의 관계발전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半官機構 會談을 포함한 향후 양안의 접촉·회담의 必要性, 推進方向에 대해 대략 세가지의 상이한 입장이 대두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汪辜會談」을 비롯한 양안의 회담자체를 지극히 否定的으로 인식하는 입장이다. 이

44) 李怡, “專訪邱進益談汪辜會談,” 「九十年代」(1993年 6月號), pp. 57~58.

러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주장은 ① 비록 공식적인 정부간 접촉이 아니라고 해도 「汪辜會談」과 같은 양안 회담은 중국에 대대적인 宣傳效果를 가져다 줄 뿐 대만에게는 별 이득이 없다. ② 중국과 협상테이블에 앉는 순간부터 대만은 國益을 상실한다. ③ 중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둘째, 海協會, 海基會와 같은 민간기구의 회담을 통해 우선 비정치·민간차원 교류·협력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이를 발판으로 政治的인 關係改善을 도모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현재 대만 정부의 政策方向으로서 ① 민간차원이라는 전제하에, ② 교류·협력의 제도화를 위한 양안의 회담이 불가피하며, ③ 이는 결국 양안의 관계개선, 대만의 政治的 地位 확보에 유리하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⁴⁵⁾ 셋째, 양안의 회담을 추진하되 대만정부가 중국에 대해 명확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보다 積極的 態度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대만의 야당인사들이 강조하는 것으로서 ① 현상황에서 양안의 회담이 必要 惡이라는 점은 인정하지만, ② 대만정부가 기존의 애매모호하고 수동적인 태도를 완전히 탈피하여, ③ 대만의 입장과 政策 意志를 강력하게 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⁴⁶⁾

이처럼 「汪辜會談」을 전후하여 대만내에서는 양안의 접촉

45) “以善意和務實態度看待汪辜會談,” 「中央日報」, 1993年 4月 28日.

46) 즉 民進黨의 주요 인사들은 회담에 임하는 대만정부의 애매모호한 태도 때문에 회담시작부터 중국이 戰術的 優位를 점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

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분분하게 제기되었으며, 이를 의식한 대만정부는 「汪辜會談」이 양안의 교류·협력과정에서 파생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순수한 民間次元의 접촉이라는 점과 대륙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自中之亂을 일으켜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李登輝 총통은 1993년 3월 30일 「汪辜會談」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논쟁을 피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대륙정책에 의구심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⁴⁷⁾ 또한 1993년 4월 26일 北美臺灣商會 대표단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李登輝 총통은 “양안관계의 개선은 전국민의 福利增進이라는 목표하에 朝野의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신중하고 자신감있게 추진되어야 하며 스스로 발목을

다. 또한 民進黨은 10명의 대만측 회담대표단에 민진당인사를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했으나 海基會측이 이를 거부했으며(중국측의 반대가 있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임), 결국 민진당은 비공식적으로 일부 의원을 싱가포르에 파견했다. 이에 대해 國民黨은 민진당이 대만주민의 權益을 수호한다는 구실하에 내부적인 政治紛糾를 양안회담에까지 연결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대만의 입장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했다. Julian Baum, “Tactical Manoeuvres: Participants differ over meaning of Singapore talks,” *Far Eastern Economic Review*, May 13, 1993, p. 12; “A dangerous warmth,” *The Economist*, May 1, 1993, p. 23.

- 47) 즉 李登輝 총통은 대만내 青年代表團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현단계의 對대륙 정책은 國家統一綱領의 원칙과 兩岸人民條例의 규범에 의거하여 양안교류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대륙당국·대륙동포들이 중화민국의 역사와 현실을 재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며, 「辜汪會談」은 對대륙정책의 전환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발언은 「汪辜會談」과 관련, 대만정부의 對대륙정책이 통일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中期政策에 이미 진입하여 중국과의 공식적인 접촉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中央日報」, 1993년 4월 1일.

뮈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⁴⁸⁾고 강조하였다.

이상의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양안의 半官機構 접촉은 쌍방의 회담이 비로소 定例化되는 초기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政治的 立場 조정과 內部 輿論을 결집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진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汪道涵 海協會 회장의 지적처럼 중·대만은 양안의 정치적인 문제가 한두차례의 회담이나 몇마디의 말로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關係改善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半官機構의 접촉을 적극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⁴⁹⁾

48) 그 밖에 李登輝 총통은 對대륙정책이 “대만의 근본적인 이익을 희생시킴으로써 결국 대만을 팔아 넘기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는 양안의 접촉과 관련된 대만내의 과열된 여론과 對대륙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진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李登輝, “推動兩岸關係, 勿自亂陣脚,” 「中央日報」, 1993年 4月 28日.

49) 汪道涵, “兩岸關係不是一次會談就可解決,” 「中央日報」, 1993年 5月 26日.

第IV章 中·臺灣關係의 發展方向

중·대만관계의 變化 推移 및 각 분야별 교류·협력 실태에서 나타나듯이 1979년 이후 중·대만관계의 변화는 쌍방의 國內政治的 變化와 經濟的 要求 및 주변 國際情勢 變化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즉 중국과 대만은 자신들의 대내외적 상황변화에 기초하여 兩岸關聯 정책을 전환하여 왔으며 이러한 정책전환은 결국 쌍방의 관계변화를 야기하였다.

앞으로의 중·대만관계 역시 대내외적 상황변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특히 중·대만의 정치·경제적 변화가능성 증대, 홍콩 반환일정의 可視化, 대만의 外交攻勢 강화와 미·일 등 주요 서방국가의 對臺灣政策 변화 움직임 등은 중·대만관계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작용할 것이다.

1. 影響要因

가. 對內的 要因

(1) 中國의 政治·經濟狀況

향후 중국의 정치·경제적 변화와 직결되는 핵심적인 문제는 중국지도부의 세대교체 특히 鄧小平 後繼體制로서 江澤民 體制의 안정 여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효율적인 운용 등이다.

지도부의 세대교체와 관련하여 중국은 이미 1980년대 중반부터 「幹部四化」¹⁾를 목표로 젊고 능력있는 新進幹部들의 영입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야기되었다. 왜냐하면 신진간부들의 영입은 당내 元老幹部들의 퇴진을 전제로 하였다는 점에서 원로간부들의 완강한 저항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黨內 派閥들이 서로 자신들이 지목한 인물을 우선적으로 영입시키려 했기 때문이다. 또한 능력과 관계없이 出身背景을 바탕으로 소위 「太子黨」으로 불리는 인물들이 부상함으로써 일반 당원들의 불만을 고조시켰다. 더욱이 세대교체과정에서의 부작용은 개혁·개방정책을 둘러싼 당지도부간의 대립·갈등을 더욱 촉진함으로써 당내의 保革葛藤을 심화시켰다.

이처럼 당내 元老의 퇴진과 신진간부의 영입으로 시작된 중국지도부의 세대교체는 추진과정에서 많은 난관에 직면했으며 鄧小平의 후계자로 지목되었던 胡耀邦과 趙紫陽의 잇다른 퇴진은 중국에 있어서 鄧小平 後繼體制의 확립이 결코 순탄치 않다는 점을 일깨워 준 대표적인 예다.

그러나 1992년 10월의 중국공산당 제14차 전국대표대회(14 全大會)와 1993년 3월의 제 8기 전국인민대표대회 1차회의(8

1) 「幹部四化」는 간부의 革命化·專門化·年輕化·知識化를 지칭한다. 이들 4개 기준중에서 보수세력은 간부의 革命化(사회주의를 확고하게 견지하는 政治的 態度와 思想의 함양)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강조한 반면, 개혁세력은 간부의 專門化·年輕化를 중시하였다. 이러한 인식차이는 결국 신진간부의 영입과정에서 보수세력과 개혁세력의 대립을 고조시키는 작용을 하였다.

기 全人大 1차회의)에서 나타난 중국지도부의 인사개편 상황을 분석해 보면 개혁지지 세력을 중심으로 한 중국지도부의 세대교체와 鄧小平 후계체제 확립을 위한 노력이 매듭단계에 진입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우선 鄧小平을 중심으로 한 개혁세력은 14全大會에서 등소평 후계체제 확립에 중요한 變數가 되는 중국공산당 中央委員會, 政治局, 政治局常務委員會, 書記處, 中央軍事委員會 등 주요 당조직에서 보수세력을 거세하고 신진개혁세력을 대거 영입시켰다. 특히 중국지도부의 최고 핵심인 정치국상무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보수원로들을 퇴진시키고 朱鎔基, 胡錦濤, 劉華清 등 개혁세력을 영입시킴으로써 江澤民體制의 黨·軍部 지지기반을 공고히 하였다.²⁾

14全大會가 당지도부의 세대교체를 가속화하였다면 8期 全人大 1차회의는 행정·국가기구의 세대교체를 일단락지었다고 할 수 있다. 즉 國家主席, 全人大 常務委員長·副委員長, 國務院 總理·副總理 및 각 부처의 책임자 등 당 이외의 조직에서 폭넓은 세대교체가 이루어졌다. 이는 행정부문에 잔존하던 보수원로들을 퇴진시키는 동시에 개혁지향적이고 젊은 實務型 官僚들을 영입함으로써 江澤民體制의 업무추진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2) 中國共產黨 14全大會에서의 인사변동과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文興鎬, “中國指導部の 保革葛藤 展開推移와 14全大會,” 「統一研究論議」, 第1卷 2號 (1992), pp. 107~135 참조.

한편 중국은 14全大會를 통해 鄧小平이 강조해 온 「하나의 중심」(經濟建設)과 「두개의 기본점」(改革·開放, 4個 基本原則)을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건설의 최고 지도방침으로 확정하고 이를 黨章에 명시함으로써 개혁·개방정책의 확대 및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³⁾

또한 8기 全人大 1차회의에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추진에 저촉되는 일부 憲法條項을 개정하고⁴⁾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확립을 위한 향후 경제체제 개혁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⁵⁾

-
- 3) 江澤民 총서기는 14全大會 政治報告를 통해 「社會主義 市場」의 주요 기능으로서 ① 국가의 거시적인 통제하에 자원분배상의 기초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② 제반 경제활동이 價值規律을 준수하고 需要供給 관계에 적응하도록 한다, ③ 가격과 경쟁메커니즘의 기능을 통해 자원배분상의 효율을 극대화하며 기업에 적자생존(優勝劣汰)의 원칙을 적용시킨다, ④ 각종 경제징후에 민감하게 작용하여 생산을 촉진하는 동시에 수요공급을 즉각적으로 조절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社會主義 市場」이 국가경제 운용의 주요 수단으로 확립된 경제체제가 곧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라고 강조했다. “加快改革開放和現代化建設步伐奪取有中國特色社會主義事業的更大勝利,”(14全大會 政治報告), 「人民日報」, 1992年 10月 13日.
- 4) 헌법개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분은 제15조의 「계획경제」, 제16조의 「국영기업」에 관한 조항이다. 우선 제15조에서 “국가는 社會主義 公有制의 기초위에서 계획경제를 실행한다”는 기존의 규정을 “국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실행한다”라는 것으로 수정했다. 또한 제16조에서는 기존의 “국영기업”이라는 표현을 “국유기업”으로 수정했는데, 이는 기업의 所有權과 經營權을 분리하여 기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영도”를 지양하고 기업의 자주권을 확대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그 밖에 “중국은 사회주의 初級段階에 처해 있으며 국가의 근본 임무는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이론에 근거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는 점을 헌법 서문에 새로이 삽입하였다. “中共中央建議修改憲法部分內容,”(중앙위원회의 헌법수정 건의안) 「人民日報」, 1993年 2月 16日.
- 5)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확립을 위해 제시된 경제체제개혁의 기본 방향은 경제성장률의 상향 조정(기존의 6%에서 8~9%로), 소유제 개혁, 소유권과 경영

이는 곧 중국이 11기 3中全會 이후 14년간의 改革·開放 성과를 바탕으로 제 2의 경제도약을 위한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이상의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국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江澤民을 중심으로 한 鄧小平 후계체제의 기반을 확립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개혁·개방 확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확립을 통한 經濟發展을 최우선적인 國策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중국이 政治的 安定과 經濟發展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우선 黨·政指導部 세대교체를 통해 江澤民이 黨·政·軍의 대권을 장악하고⁶⁾ 행정부처에 개혁지지 세력을 대거 포진시켰다고 해서 鄧小平 후계체제로서의 江澤民體制가 완벽하게 구축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이르다. 또한 江澤民 총서기가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확립을 위해서는 장기간의 노력이 요구되며, 이는 중국의 經濟基礎와 上部構造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① 사회주의 체제·이념과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不協和音, ② 중앙과 지방, 국가와 기업의 대립, ③ 階層間 葛藤 심화 등의 문제들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⁷⁾

권의 분리를 통한 국유기업의 자율권 확대 및 市場과의 연계 강화, 가격개혁,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여 축소(政企分離), 全方位 開放政策 추진 등이다. 李鵬, “政府工作報告”(8기 全人大 1차회의), 「人民日報」, 1993년 4월 2일; 江澤民, “當前的經濟工作,” 「人民日報」, 1993년 6월 2일.

6) 8기 全人大 1次會議 이후 江澤民은 중국공산당 總書記, 국가주석,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主席,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主席, 중국공산당 黨校 校長, 中央財經領導小組 組長 등 6개의 주요 직책을 겸직하고 있다.

7) 개혁·개방정책 추진 이후 중국에서 대두되고 있는 중앙과 지방의 갈등, 계층

그 밖에 최근 중국의 정치·경제상황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문제는 경제의 과열현상이다. 즉 중국은 1992년 1월 鄧小平의 「南巡講話」 이후 경제성장률의 상향조정, 物價改革, 소유제 개혁, 기업개혁 등을 통해 鄧小平이 강조한 바와 같이 「보다 빠르고 과감한」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적지 않은 부작용이 따르고 있다. 1993년 4월 19일 중국 國家統計局이 발표한 경제현황을 보면 1993년 분기의 國內總生産(GDP)은 전년 동기대비 14.1% 증가했으며 이는 1985년 이래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또한 같은 기간의 通貨增加率이 37%, 전국 소매물가 상승률이 평균 8.7%(上海 16.7%, 廣州 17.2% 등 대도시지역은 평균 상승률을 초과),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이 70.7%에 달하고 있다.⁸⁾ 이러한 경제과열 현상은 자연히 경제정책을 둘러싼 지도부의 의견대립, 財政赤字 확대, 외환보유고 감소, 일부 농민들의 騷擾, 농촌인구의 도시유입 증대 등 후유증을 유발하고 있다.⁹⁾

의 분화 및 상호갈등에 대해서는 陳碩, “論中國社會主義初級階段的社會分化和階級階層制度,” 「上海社會科學」(1988年 10月號), pp. 35~36; 朱慶芳, “十年來我國各階級, 階層結構演變的分析,” 「社會學研究」(中國社會科學院 社會學研究所, 1990年 3號), p. 1; 陸學藝, 張厚義, 張其存, “轉型時機農民的階層分化: 對大, 劉莊, 華西等13個村莊的實證研究,” 「中國社會科學」(1992年 第5期), pp. 137~151; David Kelly, He Baogang, “Emergent civil society and the intellectuals in China,” in Robert F. Miller, ed., *The Developments of Civil Society in Communist Systems* (North Sydney, Australia: Allen & Unwin, 1992), pp. 28~39 참조.

8) 1993년 분기 중국의 經濟指標에 대해서는 「人民日報」, 1993年 4月 20日 참조.

9) 중국의 경제과열로 인한 각종 후유증에 대해서는 *South China Morning Post*, May 12, 1993: “Why China’s people are getting out of control,” *The*

이처럼 중국은 정치·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들 문제들이 중국의 현지도체제나 經濟政策의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할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즉 중국은 “改革·開放의 확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문제들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금융정책, 조세정책 등 거시적인 統制手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경제과열의 후유증을 치유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다.¹⁰⁾ 또한 최근 鄧小平의 건강 악화, 李鵬총리의 정치적 지위 변화 등과 관련하여 중국의 권력변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 역시 江澤民體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결국 향후 중국의 정치·경제상황은 江澤民體制의 안정,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효율적인 추진여부에 밀접한 영향을 받을 것이지만 기존의 政策方向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국의 改革·開放政策,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확립을 위한 정책은 이미 어느 특정 지도자 혹은 특정 집단의 의사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단계를 벗어났다는 점에서 일부

Economist, June 12, 1993; “Revolt of the peasants,” *The Economist*, June 19, 1993; Carl Goldstein, “Get off our backs,” *Far Eastern Economic Review*, July 15, 1993, pp. 68~75; James Walsh, “Turning down the voltage,” *Time*, August 16, 1993, pp. 14~19 참조.

- 10) 1993년 5월 23일 江澤民 총서기는 미국 CNN과의 기자회견에서 “각종 문제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확립을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人民日報」, 1993년 5월 24일)임을 강조했으며, 국가경제체제개혁 위원회 王忠禹 주임은 “개혁·개방과정에서 야기된 문제는 개혁을 심화함으로써만이 해결할 수 있다”(「人民日報」, 1993년 5월 8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政治·經濟的 變化와 관계없이 기존의 臺灣政策을 포함한 대내외정책의 기본방향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다.

(2) 臺灣의 政治狀況

최근 대만정국 변화의 핵심은 ① 民進黨을 중심으로 한 재야세력의 급성장과 ② 국민당의 정치적 입지 약화, 국민당의 「臺灣化」에 따른 국민당내 主流·非主流의 대립·분열, ③ 대륙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意見의 對立 등이다.

대만의 在野勢力을 대표하는 民進黨은 1986년 창당 이후 급성장하여 1992년 12월 19일의 總選에서 50석을 확보함으로써 국민당의 獨走를 견제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확보하였다.¹¹⁾ 이는 야당의 단순한 정치적 입지 강화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향후 대만 政局變化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대만내 在野勢力의 성장과 함께 국민당지도부의 대립도 대만정국의 변화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당내 대립은 李登輝 총통 중심의 主流派와 前行政院長 郝柏村이

중국은 주식 및 각종 채권의 무질서한 발행규제(「人民日報」, 1993년 4월 28일), 金利引上 및 화폐발행량 축소, 토지·건물 사용권의 규제 강화, 기본 건설 규모의 축소, 三資企業의 규제강화, 농민들의 각종 부담금 경감(「人民日報」, 1993년 5월 27일) 등 경제과열 및 경제질서 혼란을 규제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11) 1993년 12월 총선거 결과 총의석 161석인 대만 立法院의 의석분포는 國民黨 102석, 民進黨 50석, 無所屬 8석, 社民黨 1석 등이다. 대만의 총선 결과에 대해서는 施華, “臺灣民主建構成型,” 「九十年代」(1993년 1월號), p. 58; Andrew J. Nathan, “The Legislative Yuan Elections in Taiwan,” *Asian Survey*, vol. XXXIII, no. 4 (April 1993), pp. 424~438 참조.

주도하는 非主流間의 알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민당 주류파의 구성원은 주로 臺灣省 출신자들이며 이들은 외면적으로 양안의 통일을 표방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중국과 하나의 대만」(一中一臺) 방식을 통한 대만의 독립을 추구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반면에 국민당 비주류파는 주로 대륙출신의 國民黨 元老, 軍部出身으로서 「하나의 중국」을 추구하며 李登輝정부의 대륙정책과 민진당의 대만독립 움직임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민당내의 대립은 1993년 1월 30일 郝柏村 行政院長의 사임과 連戰 신임 행정원장의 취임을 전후하여 더욱 고조되었다. 郝柏村 행정원장의 사임은 그동안 누적된 국민당내 주류·비주류간의 대립이 1992년 12월의 총선 결과를 놓고 폭발한 것이다. 즉 총선 이후 국민당 주류는 국민당이 총선에서 부진했던 주요 원인이 국민당 비주류의 害黨行爲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郝柏村의 사임을 증용하자 국민당 비주류가 더욱 반발하게 된 것이다.¹²⁾ 국민당 비주류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결국 郝柏村 행정원장은 李登輝 총통의

12) 李登輝 총통을 중심으로 한 國民黨 主流는 비주류가 국민당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에 비판을 제기함에 따라 대만주민들에게 국민당의 분열된 모습을 보였고 결과적으로 지지기반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國民黨 非主流는 李登輝 총통이 자신들에게 총선패배의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자신의 권력기반을 유지·강화하려 한다고 반발하였다. 사실 선거결과를 보면 국민당 비주류에 속한 약 30명의 후보들이 예상외로 많은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으며 高得標 당선자의 1, 2, 4위를 비주류 후보들이 차지했다. 국민당 비주류의 선거결과에 대해서는 林瑞, “李登輝神話的終結：臺灣立委選舉啓示錄,” 「九十年代」(1993년 1월號), pp. 59~61 참조.

압력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그에 대한 강한 불만의 표시로 행정원장직을 사임했으며 李登輝 총통은 連戰 臺灣省主席을 신임 행정원장으로 등용하였다.¹³⁾ 이처럼 현재 대만의 국민당은 이미 蔣介石, 蔣經國으로 이어진 蔣氏一家 집권하의 국민당이 아니며 실질적인 측면에서 「臺灣國民黨」(主流)과 「中國國民黨」(非主流)으로 분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國民黨의 이러한 대립·분열 양상은 1993년 8월 10일 前 環境保護處長 趙少康을 중심으로 한 국민당 비주류의 일부 소장파 의원들이 국민당을 탈당하여 新黨을 설립하면서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들 국민당 비주류 소장파 의원들은 대부분이 대륙출신 원로들의 2세대로서 李登輝가 주도하는 국민당의 제반 정책방향에 불만을 갖고 있었다. 즉 이들은 국민당이 財力家들을 대거 유입함으로써 金權政治 및 부정부패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을 비난하는 한편 총통의 直選制, 양안의 直航路 개설 등을 주장하여 왔다.¹⁴⁾ 결국 국민당은 일부 의원의 탈당과 新黨 창당으로 1949년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으

13) 郝柏村的 사임과 連戰의 行政院長 취임은 향후 대만의 政局變化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만 군부의 최고 실력자이자 大陸出身의 대변자역할을 해 온 郝柏村의 사임은 대륙출신 黨, 軍部 元老들의 정치일선 퇴진을 의미하며, 대만출신이자 李登輝의 측근인 連戰의 행정원장 취임은 「대만인에 의한 대만통치」가 가속화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Julian Baum, "President's Choice: New premier is first ever non-mainlander," *Far Eastern Economic Review*, February 18, 1993, p. 13; Julian Baum, "Trial by democracy: Nomination hearings put premier to the test," *Far Eastern Economic Review*, March 4, 1993, p. 12.

14) 또한 이들은 民進黨과의 연합을 통해 1993년 6월 대만의 「公職者 財產公開法案」(일명 陽光法)을 통과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며, 1993년 8월 16일 개막된 국민당 제14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李登輝 총통의 정책방향, 郝柏村 등 李登輝 총통에 반감을 갖고 있는 국민당 비주류 원로들의 新黨에 대한 태도여하에 따라 權力構造 개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¹⁵⁾

국민당, 민진당 등 대만 정치권의 권력 변동과 함께 향후 대만정국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요인은 兩岸의 統一, 大陸政策과 관련된 다양한 입장의 대립이다. 과거 대만정부는 각종 정치적 규제를 통하여 兩岸關係와 관련된 정책결정·추진과정에서 一般住民의 의견이나 입장이 개재될 수 있는 여지를 철저히 봉쇄해 왔다. 즉 대만정부는 兩岸關係가 국가의 存亡과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이와 관련된 정책결정은 최고수뇌부의 독점적인 소관사항으로 제한하여 왔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 대만의 大陸政策 변화 및 政治民主化가 가속화되면서 양안관련 정책에 대한 대만정부의 독점적인 영역이 점차 축소되었다. 따라서 최근에는 제반 정책추진과정에서 국민당과 대립하고 있는 民進黨, 진보적인 在野 政治勢力은 물론 兩岸의 경제교류 확대를 추구하는 기업계, 지식인·학생, 일반주민들에 이르기까지 兩岸關係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15) 新黨이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민당내 非主流 元老들의 지지 이외에 國民黨, 民進黨과 구별되는 대내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만주민들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즉 新黨은 국민당의 不鮮明性, 민진당의 非現實性·過激性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대만주민들을 중심으로 지지기반을 확대하지 못할 경우 정치적 존립이 어려울 것이다. Julian Baum, "Dissent and Depart: Young KMT leaders poised to form their own party," *Far Eastern Economic Review*, August 12, 1993, p. 22.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兩岸關係, 統一政策에 대한 대만내의 다양한 관점은 각자의 정치·경제적 입장 차이, 세대간의 인식차이, 출신지역(臺灣出身과 大陸出身)에 따른 인식차이 등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대체로 ① 급진적인 통일지향 세력, ② 급진적인 대만독립지향 세력, ③ 온건한 통일지향 세력, ④ 온건한 독립지향 세력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중에서 급진적인 통일지향 세력과 급진적인 대만독립지향 세력은 소수에 불과하며, 온건한 統一指向 세력과 온건한 獨立指向 세력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¹⁶⁾ 온건한 통일지향 세력의 주장은 「하나의 중국」 원칙하에 두 개의 政治的 實體를 유지하되 점진적으로 體制競爭과 양안주민의 선택에 의해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온건한 대만독립지향 세력은 일단 대만의 정치적 입지강화를 통해 두개의 정치적 실체를 확립하고 對內外 狀況의 변화를 기다려 대만의 독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이들은 궁극적인 목표가 상이하지만 우선 대만의 정치적 실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당분간 兩岸關係의 현상을 유지한다는 데에는 일치된 견해를 갖고 있다. 이상의 두 입장은 중·대만의 정치적인 관계에 대한 臺灣住民들

16) 대만내의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는 楊力宇, “海峽兩岸關係座談會,” 「爭鳴」(1992年 11月號), p. 86; 殷惠民, “外省人的臺獨,” 「九十年代」(1992年 11月號), p. 79; Julian Baum, “Mainlanders adrift: Premier’s resignation weakens KMT’s China faction,” *Far Eastern Economic Review*, February 11, 1993, p. 17.

의 일반적인 관심을 대변해 주는 것이다. 즉 대부분의 대만주민들은 양안의三通 실현, 대만의 정치적 실체 인정 등 兩岸關係의 현실화를 바탕으로 한 대만의 安定·現狀維持를 추구하고 있다.

이상의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만은 民進黨을 중심으로 한 野圈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 국민당지도부의 대립·분열 등 政治圈의變動 요인을 갖고 있다. 또한 정치권이 兩岸關係와 관련하여 분출되고 있는 다양한 입장들을 어떠한 식으로 수렴하느냐에 따라 대만정국 및 대륙정책의 방향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國民黨이 주도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민진당이 국민당의 獨走를 견제하는 상태에서 국민당·민진당의 兩黨體制가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대만정국, 대륙정책의 급격한 변화는 야기되지 않을 것이다.¹⁷⁾ 다만

17) 물론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요구된다. 즉 國民黨의 경우 主流가 非主流의 반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李登輝를 정점으로 한 국민당 지도체제를 강화해야 하며, 民進黨 역시 단순히 국민당에 대한 本省人들의 거부 정서에 편승하여 지지를 얻기 보다는 독자적인 정책목표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지기반을 확대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당은 連戰의 行政院長기용, 제14차 全國代表大會를 계기로 人事·組織整備는 물론 1996년으로 예정된 總統選舉의 조기실시를 검토하고 있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국민당의 정통성 확보, 민진당의 견제, 李登輝의 親政體制 강화를 염두에 둔 것이다. 또한 民進黨도 지지기반이 취약한 軍部, 大陸出身者들과의 관계강화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 국민당과 민진당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는 “彭明民預計國民黨將分裂瓦解, 民進黨要有計劃加快臺獨進程,”(대만독립운동의 대부 彭明民과의 대담) 「廣角鏡」(1993년 2월號), pp. 32~38; 林瑞, “李登輝重組權力, 非主流挾勢反彈,” 「九十年代」(1993년 2월號), pp. 68~70; 司馬路, “國民黨的李登輝路線,” 「鏡報月刊」(1993년 4월號), p. 90; Julian Baum, “Up and Running: Opposition defines the style of the new legislature,” *Far Eastern Economic Review*, June 17, 1993, p. 15.

국민당은 자신들의 政治的 基盤 유지, 대만내의 여론을 의식하여 대만의 정치적 실체 확보, 국제적 지위 강화를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三通의 허용, 三不政策의 부분적 수정 등 기존의 대륙정책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자 할 것이다.

나. 對外的 要因

(1) 中·美關係

중·대만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적 요인중에서도 中·美關係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1989년 6.4 天安門事件 이후 중·미관계는 중국의 人權狀況, 불공정 무역 관행, 제 3국에 대한 核技術 지원 및 무기수출에 대한 미국의 비판과 중국의 반발로 인해 불안정한 관계를 지속하여 왔다. 또한 중·미관계는 이러한 표면적인 이유 이외에도 1990년대 이후 國際情勢의 변화와 함께 양국의 정책방향이 크게 전환되면서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못하였다. 즉 소련의 붕괴 이후 미국은 對中政策에서 중국에 대한 기존의 「特惠」보다는 實利를 강조하기 시작하였고 중국은 정치·경제적으로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절실히 필요로 하면서도 사회주의 권 변화에 따른 「和平演變」의 위기감 때문에 미국의 각종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였다. 특히 양국관계가 회복조짐을 보이던 1992년 9월 미국이 대만에 대한 150대의 F16 전투기 판매를 결정하면서 중·미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양상마저

보였다.

중·미간의 대립을 야기했던 이상의 문제들은 여전히 양국 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중국과 미국 공히 關係改善의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미관계가 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재정립될 가능성이 높다. 즉 중국과 미국은 과거 對蘇戰略 차원에서 유지했던 友好關係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의 신국제질서하에서 쌍방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양국관계 형성을 도모하고 있다.¹⁸⁾

중·미관계의 새로운 변화 움직임은 기존 懸案에 대한 양국의 태도변화에서 엿볼 수 있다. 우선 중국의 인권상황과 관련, 미국의 비판과 중국의 반발이 지속되고는 있지만 과거에 비해 상호이해의 폭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은 人權狀況에 대한 미국의 비난을 內政干涉으로 인식하면서도 6.4 천안문 사건 主動者의 일부 석방 등 부분적으로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政治犯의 전원 석방과 같은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조건을 무리하게 요구하기보다는 선별적인 제재조치 등을 통하여 정책의 實效

18) 이는 중·미 양국이 현안을 둘러싼 대립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신국제질서의 기본 구도속에서 양국관계를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기본적인 우호관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미의 상호협력 필요성에 대해서는 Nancy Bernkopf Tucker, "China and America: 1941~1991," *Foreign Affairs*, vol. 70, no. 5 (Winter 1991/92), pp. 90~92 참조.

性を 提高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¹⁹⁾

이러한 맥락에서 1993년 5월 27일 미국은 정치범 석방, 收監者의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對美輸出 금지, 世界人權宣言의 준수 등 중국의 인권상황 개선을 전제로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MFN)를 1년간 연장하였다.²⁰⁾ 이는 비록 人權狀況 개선이라는 조건을 부가하고 있는 것이기는 하나 미국이 양국 간 상호협력 필요성을 감안하여 중국에 대한 經濟的 特惠를 연장해 준 것이다.²¹⁾ 중국은 미국의 조건부 최혜국대우 연장 조치와 관련된 외교부성명에서 ① 중·미간의 3개 公報²²⁾ 및 무역관련 협정에 위배되고, ② 미국이 무역문제를 정치화한 것으로 엄연한 內政干涉이며, ③ 최혜국대우는 중·미 양국의

19) *South China Morning Post*, May 12, 1993.

20) 美國은 最惠國待遇 연장 조건으로 2개항의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must-meet) 조건과 5개항의 개선요구 조건을 제시하였다. 반드시 준수해야 할 조건은 중국 국민에게 移住의 自由를 부여할 것, 收監者들의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對美輸出 금지이며, 개선요구 조건은 世界人權宣言의 준수, 정치범의 석방, 收監者들의 인간적 대우 보장, 티베트의 종교와 문화적 유산 보호, 중국내 국제 라디오·TV 방송 허가 등이다. 그 밖에 미국은 강제 落胎의 금지, 종교탄압의 중단, 달라이 라마와의 대화 재개,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전파방해 중단 등의 개선상황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Susumu Awanohara, "Breathing Space: Clinton delays on conditions to China's MFN renewal," *Far Eastern Economic Review*, June 10, 1993, p. 13.

21) *The New York Times*, *The Washington Post* 등 미국의 주요 言論媒體들도 클린턴행정부의 조건부 최혜국대우 연장 조치를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앞으로 미국정부는 중국에 제시한 조건이 형식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고 성실히 준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May 31, 1993.

22) 1972년의 「上海公報」, 1979년의 「修交公報」, 1982년의 「8.17 公報」를 지칭한다.

무역관련협정에 근거한 것이며 양국간 무역의 기초이고, ④人權問題를 둘러싼 양국의 대립은 國際準則에 기초하여 평등한 대화, 「求同存異」의 방식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중국은 미국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불만을 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최악의 상태는 면하였다는 일종의 안도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²³⁾

중·미간의 관계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온 通商摩擦 역시 점차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미국은 대중국 貿易赤字가 심화되면서 수입관세 인하, 수입할당제 철폐, 무역관계법 개선 등 중국의 市場開放을 요구하여 왔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²⁴⁾ 그러나 최근 중국은 최혜국대우 연장, GATT 가입, 2000년 北京 올림픽 유치를 위한 미국의 지지를 의식하여 대규모 구매사절단을 파견하는 등 양국간 통상마찰 타개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 역시 중국이 개혁·개방 확대 및 社會主義 市場經濟體制로의 전환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나친 경제적 압력을

23) “抗議美方將貿易問題政治化，嚴重干涉中國內政，” 「人民日報」，1993年 5月 29日。

24) 貿易不均衡 문제와 관련 양국이 합의점을 얻지 못한 요인의 하나는 양국간의 경제문제가 經濟外的인 문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즉 미국의 시장개방 요구는 사실상 중국의 人權問題，武器輸出 등에 대한 制裁措置의 성격을 띠어 왔고, 중국 역시 이를 경제외적인 압력, 내정간섭 차원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양국의 노력이 성과를 얻지 못하였다.

가하는 것이 장기적인 차원에서 國益에 이롭지 못하다는 戰略的 考慮와 미국의 對中國 수출이 급성장하고 있고 미국내 대기업들의 중국진출이 확대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신축성있는 對中國 經濟政策을 추진하고 있다. 1992년의 경우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190억달러에 달했으나, 對中國 輸出量은 1991년에 비해 27%가 증가한 80억달러였다. 따라서 미국정부는 대중국 무역적자에도 불구하고 대중국 수출량의 대폭적인 신장 추세를 고무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中國에 진출하고 있거나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미국내 대기업들은 클린턴 행정부에 중국의 最惠國 대우를 연장하도록 압력을 가하기도 하였다.²⁵⁾

대만에 대한 미국의 F16 전투기 판매결정 이후 중·미간의 최대 갈등요인으로 부각된 대만문제는 兩岸關係의 합리적인 해결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근원적인 타결이 불가능한 문제이다. 다만 클린턴 행정부 출범 이후 양국은 대만문제와 관련하여 상대방을 자극하는 정책을 최대한 회피하고 일단 潛在的 懸案으로 묻어 두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현단계의 중·미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다.

중국은 미국이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의 궁극적인 철폐를 규정한 1982년 「8.17 公報」를 위반하여 대만에 대한

25) Barbara Rudolph, "Status Seeking," *Time*, May 31, 1993, pp. 14~16 참조.

첨단무기 판매를 결정한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背反行爲라는 인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對美關係의 전반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²⁶⁾ 또한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 자체 보다는 이를 계기로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서방국가의 對臺灣 무기판매가 확산되고, 이러한 추세가 국제적인 지위 확보를 위한 대만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을 더욱 우려하였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의 對臺灣 무기판매의 재발, 미·대만의 정치적 관계발전 여지를 차단 하되 이를 다른 분야에서의 對美政策에 연계시키지 않았다.²⁷⁾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가 중·대만의 軍事的 均衡 유지를 위한 것으로서 「8.17 공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여 왔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論理는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승인하고 있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려우며, 미국내 일부 언론에서도 미국의 對臺灣 무기판매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평가하였다.²⁸⁾ 또한 미국은 기본적으로 대규모의 무기판매 등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할 경우 중·미관계

26) 미국의 對臺灣 F16 전투기 판매 결정에 대한 중국의 불만은 徐林興, “向臺售武嚴重損壞中美關係,” 「文匯報」, 1992年 9月 4日; “布什政府的決定嚴重損壞中美關係,” 「人民日報」, 1992年 9月 4日; “惡化中美關係的嚴重步驟,” 「人民日報」, 1992年 9月 5日.

27) 이와 관련된 중국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宦國蒼, “克林頓對華政策的多個層面,” 「九十年代」(1993年 2月號), pp. 76~77.

28) *The Washington Post*, September 4, 1992.

의 악화, 臺灣海峽의 긴장상태가 불가피하고 이는 결국 미국의 國益에 이롭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중·대만관계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기보다 다소 애매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中·臺灣의 現狀維持 및 미국의 정치·경제·군사적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²⁹⁾

이처럼 6.4 천안문사건 이후 생각되었던 중·미관계가 점차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러한 관계개선 추세는 양국간 현안의 근본적인 해결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며, 각자의 利害關係에 대한 현실적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³⁰⁾ 따라서 對內外 情勢 變化 및 사안의 성격에 따라 또 다른 대립이 야기될 가능성을 안고 있으며, 대만문제는 중·미관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민한 문제로 남아 있다. 그러나 최근 중·미관계가 대립보다는 상호이해·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국간에 극도의 대립상

29) 中·臺灣關係에 대한 미국의 정치·경제·군사전략적 고려에 대해서는 Robert G. Sutter, "Taiwan-Mainland China Relation: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CRS Report for Congress*, August 6, 1992, pp. 19~21 참조.

30) 上海 國際問題研究所 소장을 역임했던 陳啓懋는 중·미관계에 있어서 과거의 낭만적인 밀월관계는 영원히 사라졌으며 상호 이해관계에 기초한 합리적·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中國과 美國이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양국 모두가 손실을 입게 될 뿐만 아니라 제 3국이 그 이득을 얻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Qimao Chen, "New Approaches in China's Foreign Policy: The Post-Cold War Era," *Asian Survey*, vol. XXXIII, no. 3 (March 1993), pp. 248~251 참조.

태가 야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특히 臺灣問題에 대한 미국의 기본정책이 現狀維持이고 중국 역시 미국이 정치·군사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근본적으로 위배하지 않는 한 대만문제로 인한 미국과의 마찰을 피하고자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만문제와 관련된 중·미간의 첨예한 대립이나 그로 인한 兩岸關係의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³¹⁾

(2) 홍콩반환 문제

중·대만관계의 발전과정에서 홍콩이 수행한 政治·經濟的 役割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홍콩의 반환에 따른 政治的 地位 변화는 향후 중·대만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31) 다만 중국의 政治民主化, 제3국에 대한 武器販賣 등의 문제는 계속해서 중·미간의 대립요인으로 상존할 것이다. 즉 미국은 중국의 政治民主化가 진전되지 않고서는 중·미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駐中大使를 역임한 바 있는 미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로드(Winston Lord)는 “중국이 經濟改革에 상응하는 政治改革을 추진하지 않는 한, 중·미관계가 6. 4 천안문 사건 이전의 우호적인 관계로 회복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Jim Hoagland, “China: Economic Growth Doesn't Guarantee Political Chang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une 2, 1993; “U. S. Calls Reforms Key to China Thaw,”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une 10, 1993. 그 밖에 중국의 무기판매와 관련된 중·미간의 갈등 역시 양국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다. 즉 미국이 1993년 8월 25일 중국의 對파키스탄 M11 미사일 판매에 대한 制裁의 일환으로 향후 2년간 첨단기술의 對中國 수출금지를 결정한 것처럼 중국의 무기판매가 미국의 對中國 경제제재, 「臺灣關係法」(The Taiwan Relations Act) 개정을 통한 미국의 對臺灣 무기판매를 확대 등으로 발전될 경우 중·미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Melana Zyla, “Socking it to China: US Senate acts on arms sales to Taiwan,” *Far Eastern Economic Review*, August 5, 1993, p. 15.

중국은 홍콩의 반환이 臺灣問題 해결의 先例가 된다는 인식하에 홍콩문제 처리에 있어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臺灣 역시 자신들의 정치적 장래와 관련하여 홍콩의 정치·경제적 변화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중국과 영국은 1984년 12월 19일 당시 趙紫陽 총서기와 대처 수상간에 홍콩 반환 시일을 1997년 7월 1일로 명시한 「中·英共同聲明」을 공식 채택한 이래 1997년 7월 1일 이후 홍콩에서 시행될 「홍콩기본법」(中和人民共和國香港特別行政區基本法)을 제정(1990. 3)하는 등 홍콩반환 협상을 비교적 순조롭게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1992년 10월 패튼(Chris Patten) 홍콩총독이 홍콩의 政治改革案을 제시하면서 양국간의 협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패튼 홍콩총독이 제시한 정치개혁안의 골자는 홍콩議會(Legco)의 選舉方式 및 의원의 任期와 관련된 것이다. 우선 중·영 양국은 1995년 홍콩 의회 선거와 관련하여 직선의원 20명, 직능대표 30명, 선거인단(election committee)이 선출하는 의원 10명 등 총60명으로 홍콩 의회를 구성한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패튼 총독은 ①直選議員의 확대, ②職能代表 범위의 확대, ③ 선거인단의 直選 등을 주장함으로써 중국의 심한 반발을 야기하였다. 또한 패튼 총독은 의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1995년에 선출되는 의원은 1997년 홍콩 반환 이후에도 「홍콩특별행정구」 초대 의원으로서 1999년까지의 임기를 보장해야 하며, 홍콩반환과 관련된 모든 조치는 “공정하고 공개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홍콩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³²⁾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패튼총독의 政治改革案에 대해 식민통치자가 통치지역의 民主化를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矛盾이라는 비난과 함께 1992년 10월 이후 영국과의 홍콩반환 협상을 거부하였다. 즉 중국은 홍콩당국이 영국의 지지하에 새삼스럽게 정치개혁안을 제기하는 것은 ①「중·영공동성명」, 「홍콩기본법」 및 기존 협의에 위배되고, ② 民主問題를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홍콩의 政權交替에 人爲的 障礙를 부가함으로써 홍콩문제의 순조로운 해결을 저해하려는 것이며, ③ 홍콩문제와 관련하여 결코 원칙상의 타협이나 양보를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³³⁾

이처럼 중국과 영국은 홍콩반환에 관한 기존의 원칙적인 합의에도 불구하고 홍콩의회, 행정부의 구성·기능과 관련된 패튼 총독의 政治改革案 제기로 인해 첨예한 대립을 지속하고 있다. 사실 중국과 영국이 대립하는 문제의 핵심은 홍콩의회 의원의 선거방식, 임기 등 표면적인 문제보다는 중국이 1997년 이후 홍콩의회, 행정부(Exco)를 中央統制하는 전제하에 홍콩의 자본주의체제를 유지함으로써 一國兩制를 시범적으로

32) 패튼 총독이 제시한 政治改革案의 구체적인 내용은 “New medicine for Hong Kong,” *The Economist*, February 20, 1993, pp. 27~28 참조.

33) 이와 관련된 중국의 입장은 江澤民총서기의 「全國政協新年茶話會」 연설(「人民日報」, 1993년 1월 2일) 및 홍콩 「中華總商會」 대표단과의 회견(「人民日報」, 1993년 1월 9일); 李鵬 총리의 8기 全人大 1次會議 「政府工作報告」(「人民日報」, 1993년 4월 2일) 참조.

실천하려고 하는 반면, 영국은 1997년 7월 이후에도 홍콩의회, 행정부를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 자율적인 기관으로 존속시켜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³⁴⁾

그러나 중국과 영국은 근본적인 立場差異와 이로 인한 대립을 지속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홍콩문제와 관련하여 대립을 지속하는 것이 쌍방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양국은 1992년 10월 이후 중단된 홍콩반환 협상을 재개하였으며, 1993년 4월 22일 北京에서 중국의 姜恩柱 외교부 부부장과 駐中 英國大使 맥라렌(Robin McLaren)간의 제 2차 협상을 개최한 이래 7월 21~22일의 8차회담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

중·영 양국이 홍콩반환 협상을 재개하게 된 요인을 보면 우선 중국은 홍콩반환 협상이 계속 결렬되고 쌍방의 대립이 심화될 경우 홍콩문제가 國際問題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우려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즉 중국은 홍콩문제가 중·영 간의 고유한 論議事項에서 벗어나 제 3국이 개입하게 될 가능성을 크게 염려하였다. 특히 중국을 당혹시킨 것은 패튼 총독이 자신의 政治改革案에 대한 미국, 일본, 캐나다, EC 등의 지지를 촉구하고 대부분의 국가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는 사실이다. 중국의 이러한 입장은 국무원 港澳辦公室

34) "Patten plays St. George," *The Economist*, March 20, 1993, pp. 29~30; 蔣一樵, "英對華已制訂全面政策: 中英重開談判的臺前幕後," 「明報月刊」(1993年 5月號), pp. 49~52; "In the Shadows," *The Economist*, June 26, 1993, pp. 29~30.

주임 魯平이 1993년 5월 마카오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홍콩 문제의 國際化는 중·영간의 협상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며 중국은 홍콩이 國際政治의 중심으로 부상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³⁵⁾라고 강조한 점에서도 잘 나타난다.

英國 역시 홍콩문제로 인한 중국과의 대립을 지속하기 어려운 요인들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은 중국과의 대립이 長期化될 경우 홍콩의 정치·경제적 안정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과 대다수의 홍콩주민들도 이러한 가능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³⁶⁾ 또한 영국은 中·英간의 대립이 고조되면서 중국이 홍콩내 親中國 人士들을 중심으로 중국의 통제를 받는 정치·경제조직을 확대하고 이를 홍콩정부의 對抗勢力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³⁷⁾

35) 「中央人民廣播電臺」(北京), 1993年 5月 15日 09:30 뉴스; 杜學魁, “中方 舉起主權狀, 英方應以國際牌,” 「明報月刊」(1993年 5月號), pp. 53~55; *South China Morning Post*, May 14, 1993.

36) 홍콩의 政治·經濟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이미 절대적이다. 一例로 홍콩의 株式市場은 중국의 정치변화, 중·영회담의 진전상황에 지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최근 홍콩의 한 輿論調查에 따르면 대다수의 홍콩주민들은 정치·경제적 안정을 위해 中·英間의 협상이 조속히 타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i Ming Cheung, “Stalling for Success: Chinese try Britain’s patience on Hongkong talks” *Far Eastern Economic Review*, July 1, 1993, p. 22.

37) 중국은 1980년대 초반부터 홍콩내 親中國 政治·經濟組織의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최근 이와 관련된 작업 더욱 강화하고 있다. 현재 중국과 관련이 있는 홍콩의 각종 조직·기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中國 共產黨員이 약 4만 8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홍콩 永住權을 갖고 있는 홍콩주민중에도 약 8천명정도가 중국공산당 조직에 참여하고 있다. 더욱이 중

이상의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홍콩반환을 둘러싼 중·영간의 대립은 쌍방의 政治·經濟的 意圖와 맞물려 쉽게 타결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1997년 7월 1일 반환이라는 大原則은 이미 합의된 사항이고, 양국 모두 대립을 장기화할 입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극도의 대립이 야기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따라서 홍콩반환문제는 결국 중국이 주장하는 「三符合原則」, 즉 중·영공동성명, 기본법, 기존의 합의·양해사항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해결점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³⁸⁾

이처럼 홍콩반환과 관련된 中·英間의 대립이 해소되고 返還日程이 구체화될 경우 兩岸關係에 미치게 될 영향은 우선 정치적으로 一國兩制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강화됨으로써 統一方式에 대한 중·대만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홍콩이 양안교류 仲介地로서의 중립적인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국은 영국과의 반환협상이 어려움을 겪자 1996년으로 예정된 「홍콩반환준비위원회」의 事前組織으로 57인으로 구성된 「홍콩반환준비위원회 예비공작위원회」(주임: 錢其琛, 부주임: 魯平)를 설립하였다 (1993. 7. 2). 1993년 7월 16일에 열린 豫備工作委員 全體會議에서 錢其琛은 예비공작위원회의 성격과 관련하여 ① 全人大 常務委員會 산하기구로서, ② 1996년 홍콩반환준비위원회가 설립될 때까지 존재하며, ③ 全人大 常務委員會, 國務院 등에 홍콩반환과 관련된 각종 연구성과, 의견을 제공하는 임무를 띤다고 강조했다. 范雪君, “在港中共黨員將逾六萬,” 「爭鳴」(1993年 6月號), pp. 7~8; 張虎, “中共在香港的組織工作,” 「中國大陸研究」, 第36卷 第5期 (1993年 5月), pp. 92~103; 「文匯報」(홍콩), 1993年 6月 23日; Jonathan Karp, “The New Insiders,” *Far Eastern Economic Review*, May 27, 1993, pp. 62~66; 「中央人民廣播電臺」(北京), 1993年 7月 17日 13:30 뉴스 참조.

38) 江澤民 總書記는 1993년 5월 17일 켈러헌 前영국총리를 접견하는 자리에서 “中·英 양국이 공동성명, 기본법, 기존의 合議·諒解事項을 준수한다면 1995년 홍콩의회 선거와 관련된 회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中央人民廣播電臺」(北京), 1993年 5月 18日 09:30 뉴스.

양안간 교류·협력 방식이 재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즉 대만은 홍콩을 경유한 기존의 간접적인 교류방식이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중국과의 직접적인三通 추진을 적극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3) 주요 서방국의 對中, 對臺灣關係

최근 대만정부가 「彈性外交」, 「雙重承認」 등 국제적 지위 강화를 목표로 한 공세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서방국의 對中, 對臺灣關係 변화여부 역시 중·대만관계에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외적 요인이다.

각국의 對中, 對臺灣關係 변화가능성을 검토해 보면 우선 中·日關係는 중·대만관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중·일관계는 기본적으로 정치·군사적인 측면에서의 對立要因과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協力要因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양국관계의 최대 과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교류·협력과 잠재되어 있는 정치·군사적인 측면에서의 대립가능성을 조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1980년대 이후 中·日 양국은 과거역사 청산문제, 영토분규, 對臺灣關係, 동북아 지역에서의 영향력 경쟁 등 대립소지가 있는 문제보다는 협조가능한 부분에 主眼點을 두면서 양국관계를 재정립하여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일관계가 양국이 의도하는 것처럼 對立要因을 묻어둔 채 상호협력만을 부각시

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과 일본은 한결같이 신국제질서하에서 정치·군사적 영향력의 極大化를 추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相互牽制와 대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중·일간의 이러한 대립가능성은 최근 중국의 軍事力 強化 움직임과 관련하여 점차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³⁹⁾ 일본은 그 동안 중국의 군사력 팽창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으면서도 자신들 역시 유엔 安保理 常任理事國 지위 확보, 유엔 平和維持活動(PKO) 파병 등 정치·군사적인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중국의 목인 내지는 지지가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중국에 대한 불만을 자제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일본내에서 중국의 군사력 강화에 대한 경계 및 對中政策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輿論이 고조되고 있다.⁴⁰⁾ 물론 단

39) 중국은 자신들의 軍事力 增強 움직임과 관련된 「中國威脅論」이 전혀 근거없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즉 중국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중국위협론이 사실무근임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중국의 國防費가 1983년의 180億元(약 73억 달러)에서 1993년에는 425億元으로 증액되었다고 하나 이 기간의 물가상승률 130%를 감안하면 실제 購買力은 증가하지 않았다. 둘째, 국민총생산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1985년의 2.2%에서 1992년 1.6%, 1993년 1.5%로 감소). 또한 주요 국가와 비교할 때(1993년 국방비의 경우 美國 2,743억달러, 日本 377억 3천만달러, 英·獨·佛 300억달러) 중국의 국방비는 극히 낮은 수준이다. 셋째, 중국의 현 국방비수준으로는 대량의 무기를 구입할 수가 없으며 중국의 國防現代化는 自力更生을 위주로 한다. 넷째, 중국은 무기수출 및 군사기술 移轉과 관련, ① 輸入國의 自衛力제고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② 지역의 평화·안전·안정을 해쳐서는 안된다, ③ 內政干涉 수단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人民日報」, 1993年 3月 24日(錢其琛 外交部長의 내외신 기자회견); 穆惠民, “中國軍事威脅論毫無事實根據,” 「人民日報」, 1993年 4月 17日.

40) 한편 일본정부는 중·일 양국의 군사력 및 군사정책의 透明性을 제고한다는

기적인 측면에서는 상호협력에 대한 현실적 필요성 때문에 일본이 對中政策을 급격히 전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러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中·日間の 정치·군사적 대립 요인이 지속적으로 증대될 경우에는 양국관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또한 중·일관계가 악화될 경우 대만문제가 양국간의 민감한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일본은 중국의 정치·군사적 팽창을 억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臺灣問題를 활용하고자 할 것이기 때문이다.⁴¹⁾

일본에 비해 독일, 프랑스가 중·대만관계에 미칠 영향은 비교적 적다고 할 수 있으나, 최근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와 高速電鐵, 원자력 발전소 건설 등 대만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문제 등과 결부되어 이들 국가의 對中, 對臺灣關係가 다소 변화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즉 그동안 독일, 프랑스는 중국과의 관계발전에 주력하고 대만과의 관계는 民間次元의 경제·문화 교류에 국한시켰으나, 自國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대만과의 관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차원에서 1989년 天安門事件 이후 단절되었던 「中·日安保協議」를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일본정부의 이러한 방침 역시 중국의 군사력 강화 움직임에 대한 경계심리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平松茂雄, “中國海軍と中華世界の再興,” 「新防衛論集」 第20卷 第3號 (1992年 12月), pp. 16~37; “日中防衛對話再開へ,” 「朝日新聞」, 1993年 5月 26日.

41) 최근 대만정부는 일본과의 관계발전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1993년 5월 2일에는 臺灣大學校 「日本綜合研究中心」과 행정원 「國家政策研究中心」의 공동주최로 「中日思惟差異研討會」가 개최되었으며 李登輝 총통은 치사를 통하여 “일본은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도 兩岸關係에 대한 기본인식을 전환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상호관계 발전 뿐만 아니라 亞太地域의 단결

중국은 독일, 프랑스 등의 對臺灣政策 변화 조짐에 대해 지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 국가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과 함께 대만의 外交攻勢를 신랄히 비난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에 대해서는 對臺灣 무기판매교섭 창구 역할을 해 온 廣州駐在 프랑스 영사관 철폐를 요구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⁴²⁾

이상의 분석을 종합할 때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 西方國들은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고, 臺灣政府 역시 이들 국가와의 관계강화를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여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즉 주요 서방국가들은 중국이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고 중국의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며, 특히 대만과의 政治·軍事的 關係 강화를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대만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주요 서방국들의 政治·經濟的 意圖와 결합되어 대만과 주요 서방국들의 정치적 관계 강화, 대만의 국제적지위·역할 증대, 중·대만관계의 긴장 고조 등의 결과를 초래할 가

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다”라고 강조하였다. 李登輝, “日對兩岸關係思考模式影響亞太整合,” 「中央日報」, 1993年 5月 4日.

42) 독일, 프랑스 등의 對臺灣 무기판매 움직임에 대한 중국의 비난은 미국의 對 대만 무기판매에 대한 비난에 비해 훨씬 노골적이고 강경하다. 즉 중국은 독일, 프랑스 등이 대만에 대해 무기를 판매할 경우 外交關係의 격하, 무역보복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993년 1월 7일 중국외교부 吳建民 대변인은 “프랑스의 對臺灣 武器販賣는 中·佛關係를 심각하게 악화시켰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프랑스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人民日報」, 1993年 1月 8日.

능성은 희박하다.

2. 展望

중·대만관계의 향후 과제는 기존의 非政治·民間次元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그 성과를 바탕으로 양안의 政治的 關係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또한 이들 과제 의 극복여부는 향후 중·대만관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兩岸間 교류·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은 兩岸의 전면적인 三通 추진여부와 직결된다. 즉 대만정부가 기존 입장을 전환하여 중국과의 직접적인 通商, 通郵, 通航을 추진할 경우 兩岸의 교류·협력은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교류·협력의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중·대만의 정치적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兩岸의 政治的 關係設定 및 대만의 국제적 지위, 平和定着 등의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상의 현안에 대한 쌍방의 기본인식, 정책방향 등을 대내외적 요인들과 관련하여 검토함으로써 중·대만관계 의 향후 發展方向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가. 兩岸의 三通

중국과 대만은 兩岸의 교류·협력이 확대일로에 있는 상황에서 전면적인 三通的 추진에 관해서는 아직도 근원적인 타 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물론 현재 중·대만의 교류·협력 수

준에 비추어 볼 때, 중국과의 三通을 불허하는 대만의 정책은 그 실효성보다는 다분히 政治的·象徴的 意味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즉 중·대만관계의 분야별 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양안의 경제교류는 대만정부의 직접적인 通商 불허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대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여지가 점점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兩岸의 通郵問題에 있어서도 대만정부의 제한조치가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더욱이 1993년 4월의 「汪辜會談」에서 중·대만이 합의한 「양안 등기 우편물 조회와 유실물 보상 협의」에 따라 양안의 우편물이 직접 전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三通중에서 通商과 通郵는 실질적인 측면에서 상당부분이 이미 실현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기본적인 制度化만 뒷받침된다면 양안간 교류·협력의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향후 兩岸間 교류·협력의 진일보 확대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양안의 通航과 관련된 문제이다. 중국은 通商, 通郵問題가 상당부분 해결되었다는 인식하에 通航을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만정부의 정책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양안의 通航問題와 관련하여, 1993년 4월 19일 「海峽兩岸航運交流協會籌備處」를 설치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첫째, 국무원 臺灣事務辦公室, 交通部, 口岸(港灣)판공실, 公安部, 海關總署(關稅廳) 등의 관련자들로 구성된 「兩岸海上直航考察組」를 조직하여 중국 동남연안의 각 항만·공항을 직

접 시찰하도록 하였다. 둘째, 上海市, 福建省, 廣東省 등의 省級 대만사무관공실에 兩岸의 직항로 개설에 대한 방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셋째, 港灣, 港口의 시설확장과 관련하여 ①福建省의 福州, ②厦門, 泉州, 東山, 湄州灣의 島嶼에 12개소의 선박 정박지를 지정하여 海上直航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고, 厦門의 高崎 국제공항의 확장, 長樂 국제공항의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⁴³⁾

중국이 양안의 通航에 대비하여 나름대로의 조치와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대만의 반응은 아직도 부정적이다. 즉 중국의 三通 요구에 대해 대만정부는 ① 중국은 三통을 구실로 「國家統一綱領」에서 설정한 대륙정책 추진 단계의 혼선을 야기하고자 하고, ② 민간차원의 교류를 정부차원의 교류로 확대하고, 三통을 통해 통일을 촉진하고자 하는 소위 「以民逼官」, 「以通促統」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③ 중국이 양안의 직항에 외국의 참여를 금지하는 것은 경제적인 요인 이외에 직항문제를 국내문제로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대만정부는 중국이 대만의 정치적 실체, 국

43) 兩岸의 通航과 관련하여 중국의 省級 대만사무관공실이 제출한 방안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안의 直航은 雙方交流, 平等互利를 원칙으로 하되, 외국 혹은 제3국의 참여를 금지해야 한다. 둘째, ① 양안의 직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양안의 협상을 통해 항로, 운수수단, 사무처의 상호 설치를 협의하고, ② 福州, 厦門, 湄州島를 일차 직항지역으로 개방하고 항만시설을 확대하며, ③ 대만주민, 화물, 운수수단에 대한 검사는 중국의 현행 「口岸管理規定」에 따라야 한다. 黃昆輝(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 주임), “中共急於三通, 研擬兩岸直航方案,” 「中央日報」, 1993年 5月 8日.

제적 지위, 武力使用 포기, 대만의 각종 法律을 승인하는 조건하에서만 兩岸의 통항문제를 협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⁴⁴⁾

이처럼 兩岸의 통항문제는 중국의 적극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정치적 고려 때문에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대만정부가 條件附 通航 허용의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한다고 해서 兩岸의 통항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즉 대만정부는 통항과 관련된 중국의 각종 요구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대만내의 輿論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양안의 通航에 대한 대만내의 여론은 대략 다음의 세가지로 나뉘어진다. 첫째, 현재의 간접적인 通航을 계속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의 論旨은 ① 중국은 경제적인 고려보다는 政治的 動機에서 양안의 직항을 주장하고 있고, ② 현재 중국의 각종 조치, 항만설비 등은 양안의 직항을 수용할 능력이 없으며, ③ 현재의 상황에서는 직항을 위해 필요한 쌍방의 합의·양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⁴⁵⁾ 둘째, 條件附 直航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현재 대만정부의 입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나 條件의 범위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⁴⁶⁾ 셋째, 無條件 直航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

44) 「中央日報」(대만), 1993年 5月 8日.

45) 高長, “兩岸直航短期內乃難突破,” 「聯合報」, 1992年 6月 7日.

46) 즉 대만정부와 같이 대만의 정치적 실체, 국제적 지위, 무력사용 포기 등을 直航의 條件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기존의 조건을 보다 축소해야

한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중국과의 무역·투자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중에서도 두번째의 의견이 비교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대만내에서는 條件附 直航을 추진하되 조건의 범위를 융통성있게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상의 분석에서 나타나듯이 양안의 통항문제는 대만정부가 제시하는 先決條件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중·대만 모두 통항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각자가 이에 대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록 直航形態는 아니더라도 이와 유사한 방식의 通航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중·대만은 1993년 5월 25~26일 양일간 上海에서 쌍방의 항공·운수 관련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안 민항·운수 토론회」(兩岸民航運輸研討會)를 개최하였는데 양안의 통항과 관련된 많은 방안들이 제기되었다. 물론 여기에서도 양안의 직항을 위한 항공기의 國籍標識, 航路, 비행 정보구역, 항공 관제선, 통관절차 등에서 상당한 이견을 보였으나, 직항 실현 이전에 우선 대만측에 부정기 專賞機 就航을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쌍방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중국의 「中國民用航空協會」와 대만의 민간항공사를 중심으로 直航路 開設과 관련된 사안을 계속 협의한다는 데 합의하였다.⁴⁷⁾

한다는 점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趙建民, “從直航的爭議看當前兩岸交流問題,” 「中國大陸研究」, 第36卷 第3期 (1993年 3月), pp. 16~17 참조
47) “中共提臺灣包機不定期飛大陸方案,” 「中央日報」, 1993年 5月 28日.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양안의 통항은 현실적인 장애요인을 극복하는 便法으로 우선 간접적인 통항의 수준을 점차 제고함으로써 直航에 접근해가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만정부는 國民黨 소장파들이 창당한 新黨이 양안의 直航路 開設을 표방한 바와 같이 대만내의 여론이 전면적인 三通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모아지고 있고, 兩岸의 간접적인 교류·협력을 가능하게 했던 홍콩의 반환시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대내외적인 요인들을 감안하여 양안의 三通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나. 兩岸의 政治的 關係設定

양안의 정치적 관계설정 에 대한 중·대만의 대립은 兩岸關係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로 규정하고자 하는 중국과 대등한 정부간의 관계로 설정하려는 대만의 근본적인 인식차이에서 비롯된다. 또한 兩岸의 정치적 관계설정은 대만의 國際的 地位와 직결되는 문제로서 이에 대한 중·대만의 정책전환이 없는 한 양안의 정치적 관계개선은 큰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대만정부는 기존의 수세적·피동적인 외교정책이 국제무대에서의 外交的 孤立과 외교정책상의 행동반경을 스스로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인식하에 對外政策의 전환을 모색하였다. 이는 대만정부가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를 포함한 각국과의 다각적인 접촉을 시도

하고(소위 雙重承認 유도) 각종 국제조직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대만의 정치적 실체, 국제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彈性外交 정책을 의미한다.

1988년 당시 대만의 외교부장으로서 彈性外交 필요성을 역설한 대표적인 인물인 連戰이 1993년 3월 1일 대만 행정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최근 대만정부의 彈性外交 정책이 더욱 가속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連戰은 1993년 2월 20일 행정원장 임명과 관련된 대만 立法院에서의 청문회를 통해 “중국을 공식 승인한 국가와도 외교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는 「雙重承認」 정책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였으며, 李登輝 총통 역시 1993년 4월 9일 國民大會에서의 연설을 통해 유엔을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의 가입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임을 강조하였다.⁴⁸⁾ 또한 李登輝 총통은 1993년 5월 20일의 기자회견을 통해 유엔가입 문제와 관련하여 “대만의 유엔가입이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결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自信感을 가져야 한다”라고 역설하였다.⁴⁹⁾

48) “李總統：要積極爭取參與聯合國,” 「中央日報」, 1993年 4月 10日; “Twixt handshake and armlock,” *The Economist*, May 22, 1993, pp. 29~30 참조.

49) 대만지도부의 유엔가입 의지 천명과 함께 대만외교부는 「中華民國參與聯合國」이라는 小冊子를 발간하여 대만주민들에게 유엔가입의 필요성을 弘報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즉 대만외교부는 대만의 유엔가입 필요성, 가입절차, 문제점 등을 홍보하는 동시에 대만국민들이 각종 기회를 통하여 대만의 유엔가입 의지와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전달해 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 “「中華民國參與聯合國」說明書,” 「中央日報」, 1993年 5月 19日; 施若彬, “臺灣重

그밖에 최근 대만정부는 대만의 外交的 立地 강화와 관련 하여 달라이 라마(Dalai Lama)가 이끄는 티베트 망명정부와 관계를 강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즉 1993년 5월 티베트 망명정부의 각료들이 대만을 방문한 바 있으며, 李登輝 총통은 5월 20일의 기자회견을 통해 달라이 라마가 대만방문을 원한다면 이를 환영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티베트 망명정부는 대만정부가 티베트의 自決權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조건하에서 달라이 라마의 대만방문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대만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⁵⁰⁾

정치적 실체 확보 및 국제적 지위 강화를 위한 대만의 적극적인 外交攻勢에 대한 중국의 반응은 당연히 부정적이다. 특히 중국은 대만정부의 유엔가입 및 티베트 망명정부와의 관계강화 움직임에 대해 “대만정부의 최근 外交行態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배하여 궁극적으로 독립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默過할 수 없다”⁵¹⁾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返聯合國的實際行動,” 「爭鳴」, 1993年 6月號, pp. 87~88; Julian Baum, “Virtual Reality: Moves to rejoin UN, recognise Mongolia,” *Far Eastern Economic Review*, June 3, 1993, p.15.

50) Hamish McDonald, “The Tibetan Connection: Taipei finds an ally in the Dalai Lama,” *Far Eastern Economic Review*, June 10, 1993, p.12.

51) 대만의 유엔가입 문제와 관련, 중국외교부 吳建民 대변인은 1993년 4월 29일 중국의 공식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① 유엔은 主權國들의 조직으로서 중국의 일부자인 ② 대만은 가입자격이 없다. 대만이 유엔에 가입하고자 하는 것은 「一中一臺」를 조장하여 중국의 분열상태를 장기화하려는 것이다. ③ 이는 中華民族의 근본이익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대만동포를 포함한 中國人民 모두가 결사 반대하는 것이다. 「人民日報」, 1993年 4月 30日. 또한 중국은 라사(拉薩, Lhasa)를 중심으로 티베트 독립시위가 고조되고, 달라이 라마가

한편 대만의 유엔가입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 「海協會」汪道涵 회장과 唐樹備 부회장은 1993년 6월초 캐나다 오타와를 방문한 자리에서 대만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한다면 유엔에서의 지위를 중국과 함께 公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는데, 이 역시 대만의 의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왜냐하면 중·대만이 유엔에서의 지위를 공유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만이 유엔에 가입하고자 하는 근본 목적은 國際社會로부터 대만의 政治的 實體를 인정받음으로써 독립된 國際的 地位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안관계를 대등한 정부간의 관계로 설정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⁵²⁾

이처럼 정치적 실체 확보 및 국제적 지위 강화를 위한 대만정부의 노력은 중국의 초강경 반대에 직면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만 자신도 國際的인 輿論의 환기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다. 우선 중국의 반발은 대만이 정치적 실체를 확보하고 국제적 지위를 강화하는 데 가장 큰 저해요인이다. 중국은 1993년 8월 31일 발표한 「統一白書」(臺灣問題與中國統一)에서도 밝혔듯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兩岸關係를 규정

클린턴 미대통령, 허드(Douglas Hurd) 영국의상을 방문하는 등 티베트 독립에 대한 국제적 지지 확보를 도모하는 상황에서 대만이 티베트 망명정부와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은 중국의 분열을 획책하는 행위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Lincoln Kaye, "Raging Inflation: Lhasa price protests escalate into anti-Chinese riot," *Far Eastern Economic Review*, June 3, 1993, p. 13.

52) 「明報」(홍콩), 1993年 6月 7日.

하는 鐵則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만은 물론 관련 국가들이 이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對臺灣 武力使用, 외교단절 등의 강경조치를 불사하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이러한 입장이 변화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그밖에 대만의 정치적 실체 확보 노력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 역시 한계를 갖고 있다. 즉 중·대만관계의 對外的 影響要因에서 분석하였듯이 미국과 주요 서방국들의 對臺灣政策이 다소 변화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기존의 對中關係 불변을 기본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대만이 의도하는 정책목표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이상의 제약요인으로 인해 적어도 단기적으로 대만이 유엔 가입을 통하여 중국 및 國際社會로부터 독자적인 정치적 실체, 국제적 지위를 확보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따라서 대만이 독립된 정치적 실체, 국제적 지위 확보를 추구하고 이에 대한 중국의 반발이 계속되는 한 政治的 關係 설정문제는 兩岸의 정치적 관계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상존할 것이다. 다만 대만정부가 유엔가입 추진으로 중국을 극도로 자극하기 보다는 우선 GATT, OECD 등 주요 국제조직에의 능동적인 참여, 관련국가들과의 비정치적 교류·협력 확대를 도모하고⁵³⁾

53) 중국은 대만이 유엔을 제외한 주요 국제조직에 참여하고 관련국가들과의 비정치적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①「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②「두개의 중국」 실현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고, ③ 적절한 名稱을 사용한다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中國外交部聲明, 「中央人民廣播電臺」(北京), 1993年 6月 1日 12:00 뉴스 참조.

海協會·海基會의 半官機構 접촉 확대, 黨對黨會談의 제한적 수용 등을 통하여 정치적 현안에 대한 쌍방의 입장을 조정할 경우에는 양안의 정치적 관계설정을 둘러싼 중·대만의 대립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⁵⁴⁾

다. 兩岸의 平和定着

중·대만의 平和定着 문제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사용 포기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만정부의 지속적인 무력사용 포기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를 회피하고 있다.

중국은 등소평체제 출범 이후 대만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1979년 1월 당시 중국의 국방부장 徐向前이 金門島·馬祖島 등 대만이 점유하고 있는 대륙인점 島嶼에 대한 포격 중지를 선언했을 뿐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았다. 중국은 李登輝 총통이 1991년 연두회견을 통해 대만과 인접한 福建省의 병력 철수를 요구하자 福建省 지역에는 치안유지를 위한 소수의 병력을 제외하고 戰鬥兵力이

54) 대만정부는 유엔가입과 관련, 外交部의 특별예산을 편성하고 北美事務協調委員會의 「聯合國工作小組」, 행정원의 「行政院聯合國工作小組」, 總統府 산하의 「聯合國工作委員會」를 신설하는 등 유엔가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장기적인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며 단기적인 정책목표는 우선 「명칭에 구애되지 않고」 각종 국제기구에 가입하여 국제적 지위를 신장시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만 外交部長 錢復도 미국 방문중 1993년 5월 24일 시카고 外交關係協會에서 행한 연설에서 “대만이 확고한 의지와 목표를 가지고 유엔가입을 추진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단기내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錢復, “中華民國快速民主化下外交事務發展的經驗,” 「中央日報」, 1993년 5월 27일.

주둔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을 뿐이다.⁵⁵⁾

이처럼 중국이 대만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 가능성을 계속 유보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대만에 대한 무력적 위협을 대만의 獨立 움직임을 견제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즉 중국은 최근 대만정부의 외교행태가 단순히 對外的 活動을 강화하고 국제적 지위를 제고하는 수준을 넘어서 유엔가입 추진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대만의 독립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 가능성마저 포기할 경우 대만의 外交攻勢를 제어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대만문제의 해결이 더욱 난관에 봉착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 때문에 중국의 대만정책이 획기적으로 전환되거나 대만이 중국의 「하나의 중국」, 「一國兩制」 원칙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한 현상황에서 중국의 무력사용 포기 선언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중국의 무력사용 포기 선언과는 별개로 중·대만의 평화정착 문제가 진전을 보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즉 중국이 지도부의 聲明 혹은 決議文을 통해 대만에 대한 무력포기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지는 않더라도 다른 형식을 통해 양안의 평화정착 문제에 대해 융통성을 보일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요인들로서는 다음과 같은

55) 1991년 9월 24일 楊尙昆의 대만 「中國時報」 기자회견, “海峽兩岸關係座談會,” 「爭鳴」(1992年 11月號), p. 86.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중·대만 공히 양안의 敵對關係가 해소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대만은 1991년 5월 「動員勸亂時期」의 종식을 선언하고, 1993년 8월 국민당 제14차 전국대표대회에서의 黨憲改正을 통해 「對敵鬪爭工作」 등의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중국과의 敵對關係가 해소되었다는 점을 표명했으며 중국 역시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다.⁵⁶⁾ 둘째, 중국이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을 감행할 경우 중국 역시 막대한 정치·경제적 손실과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⁵⁷⁾ 또한 중국은 홍콩반환협상을 둘러싼 英國과의 대립으로 인해 홍콩의 경제가 퇴보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처럼 대만에 대한 軍事的 威脅으로 인해 대만의 경제가 침체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셋째,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강화할 경우 중국에 대한 주변국가들의 경계심이 고조되고, 결과적으로 중국과 이들 국가의 관계발전이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은 최근 日本, 美國 등이 중국의 군사력 강화 추세를 겨냥하여 「中國威脅論」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킬 경우 중국 스스로 「중국위협

56) 중국의 「海協會」汪道涵회장은 1993년 5월 2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양안의 敵對關係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대대적으로 감소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汪道涵은 양안의 相互不可侵條約의 체결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이는 정치적인 과제이며 중국은 이 문제와 관련 정치협상·회담을 추진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汪道涵, “兩岸敵對關係幾可稱爲「已不存在」,” 「中央日報」, 1993년 5월 30일.

57) 이에 대한 중국지도부의 우려에 대해서는 岳賽, “加入聯合國的奇想: 臺灣外交活動向觀察,” 「開放雜誌」(1993년 5월號), pp. 86~87.

론」을 정당화시키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넷째,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주변 국가들의 우려에 그치지 않고 域內 集團安全保障體制 구성을 통해 대만의 안보를 확보하고자 하는 최근 대만정부의 입장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美·佛·獨 등 주요 서방국가의 대만에 대한 武器販賣 구실을 제공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⁵⁸⁾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볼 때 양안의 평화정착문제는 중·대만의 相互不可侵條約 체결 혹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공식적인 武力使用 拋棄 宣言과 같은 제도적인 방식을 통해 해결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행사 역시 현실적으로 적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양안의 평화정착 문제는 중국이 間接的·非公式的으로 무력사용 포기를 선언하거나 무력사용 포기에 조건을 부가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보다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중국 「海協會」汪道涵 회장은 1993년 5월 30일 미국 와싱턴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사용 가능성과 관련, “중국은

58) 李登輝 총통은 1993년 3월 26일 미국 CNN과의 회견에서 “아태지역 국가들은 「假想敵이 없는 集團安全保障體制」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中央日報」, 1993년 4월 2日)는 점을 강조했는데 이는 대만의 안보를 아태지역의 집단안전보장체제와 연계시키려는 대만정부의 의도를 담고 있다. 중·대만관계의 현실상 대만정부의 이러한 구상은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국으로서의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아태지역의 集團安保協力 문제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고 주요 서방국가들의 對臺灣 武器販賣 가능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다.

一國兩制에 의한 평화통일을 추구하며 대만에 대한 武力使用은 ① 대만의 獨立 추구, ② 대만문제에 대한 外勢 介入 등의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⁵⁹⁾

59) 「中央人民廣播電臺」(北京), 1993년 6월 1일 06:30 뉴스 참조.

第V章 南北韓關係에 대한 示唆點

중·대만관계와 남북한관계는 분단의 역사적 배경, 쌍방의 정치·경제적 조건, 統一에 대한 상호인식, 國際的 地位 등의 측면에서 매우 상이한 요인을 갖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중·대만관계 변화 추이가 남북한관계 변화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밖에 없었고, 향후 변화 역시 남북한관계와 다른 방향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중·대만 공히 이념·체제의 대립을 장기간 경험하였고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交流·協力の 확대를 통한 民族和解, 民族統一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유사한 측면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남북한과 중·대만은 이념·체제의 대립을 완화하고 상호교류·협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경험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대만은 쌍방의 政治的 對立을 지속하는 가운데에서도 非政治·民間次元의 교류·협력에 있어서는 남북한의 교류·협력 수준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만이 교류·협력을 확대할 수 있었던 주요 요인 및 교류·협력과정에서 야기된 문제점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南北韓의 교류·협력에 활용할 수 있는 示唆點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1. 北韓의 改革·開放政策 誘導

중·대만관계의 발전은 兩岸關係와 관련된 중·대만의 현실적·이성적 정책전환에서 비롯된다. 즉 鄧小平 체제 출범 이후 중국이 臺灣政策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대만이 이에 상응하는 정책전환을 추진함으로써 兩岸關係의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중국의 경우 대만정책의 현실적인 전환은 改革·開放政策의 추진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을 통한 經濟發展을 최우선적인 정책목표로 설정하면서 대내외정책의 혁신적인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하였고 이러한 인식변화에 따라 臺灣政策 역시 자연스럽게 전환될 수 있었다. 따라서 중국은 武力使用을 통한 대만의 조속한 해방이란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우선 兩岸의 교류·협력 확대를 통해 자신들의 改革·開放政策을 지원하는 동시에 양안관계를 새롭게 정립한다는 현실적인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대만은 중국에 대한 뿌리깊은 不信感 때문에 초기에는 중국의 각종 제의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였으나 점차 비정치·민간차원에서의 양안교류·협력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대만정부가 이처럼 大陸政策을 전환하기 시작한 것은 중국의 改革·開放政策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중국과의 對立關係를 지속하는 것이 대만의 정치·경제적 발전에 유리하지 않다는 인식의 전환이 있었기 때문이다.

중·대만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장기간의 이념적 대립을 지속해 온 두체제의 관계변화가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비록 이념·체제의 근본적인 전환은 불가능하더라도 최소한 상대방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에서 理念的 要因보다 대내외 환경변화와 관련된 現實的 要因을 중시하는 인식변화가 불가결하다. 바로 이러한 측면은 남북한의 관계발전을 위해서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다. 특히 북한지도부가 여전히 政治·理念的 要因에 집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관계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지도부의 대내외정책의 현실적 전환, 특히 개혁·개방정책을 적극 유도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을 유도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중·대만관계가 示唆하고 있는 점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화적 이행」(和平演變) 및 經濟統合에 대한 북한의 위기의식을 불식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대만을 포함한 자본주의권과의 교류·협력과정에서도 자신들의 정치·경제체제를 고수할 수 있다는 自信感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대만 역시 大陸政策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統一戰線 기도에 대한 불안감은 갖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정치·경제적 기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해 갈 수 있었다. 즉 중·대만의 정책전환과 관계변화는 쌍방의 관계개선 및 교류·협력확대가 각자의 政治·經濟的 存立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共

通認識으로부터 출발하였다.¹⁾

이러한 요인들을 감안할 때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지도부에 대해 남북한간 교류·협력 확대가 결코 북한의 政治·經濟體制에 危害要因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신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이 다른 西方國家들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適應力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평화적 이행, 남한의 經濟統合 의도에 대한 북한의 危機意識 내지는 의구심을 완화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南北韓 人的 交流의 活性化

중·대만의 인적 교류는 兩岸關係의 질적인 변화를 초래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대만정부가 1987년 10월 대륙내 친척

1) 이와 관련하여 남북한관계와 중·대만관계는 기본적으로 상이한 측면을 갖고 있다. 즉 중국은 서방세계로부터의 和平演變에 대한 경계심에도 불구하고 중·대만의 政治·經濟的 力量 차이에 대한 자신감, 개혁·개방정책을 통해 이미 자본주의체제에 대한 適應力을 키워왔다는 확신 때문에 대만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문제에서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 따라서 중·대만관계에서는 오히려 중국이 대만에 대한 각종 提案·特惠措置를 통해 대만의 對大陸 開放政策을 적극 유도하는 입장이었다. 반면에 남북한관계에서 북한은 閉鎖的인 政治體制의 속성과 남북한 경제력의 현격한 차이 때문에 남한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할 경우 자신들의 정치·경제적 기반이 와해될 수 있다는 不安感을 갖고 있다. 남한을 포함한 資本主義圈의 「평화적 이행」 전략에 대한 북한의 정치·경제적 위기의식은 김일성의 1991년 「신년사」(「로동신문」, 1991년 1월 1일), 1992년 「신년사」(「로동신문」, 1992년 1월 1일) 및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로동신문」, 1993년 4월 8일)에서도 잘 나타난다.

방문(探親)을 허용하면서 활성화된 양안의 인적 교류는 단순한 인적 왕래에 그치지 않고 경제교류, 사회·문화교류 등 民間次元의 다양한 양안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데 橋梁的 役割을 수행하였다. 즉 양안의 인적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비로소 양안의 교류·협력이 加速化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兩岸關係의 전반적인 발전이 가능하였다.

중·대만관계의 발전과정에서 인적 교류가 수행했던 역할의 중요성은 인적 교류가 活性化된 1988년 이후와 그 이전의 중·대만관계가 확연하게 구분된다는 점에서도 잘 나타난다. 중·대만관계에서 兩岸의 인적 교류가 수행했던 주요 역할들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안의 인적 교류는 대만정부가 1949년 國民黨 정부를 따라 대만에 이주한 국민당 군인(國府軍)중에서 일부 퇴역자들의 친척방문을 허용하는 극히 제한된 형식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그러나 대만정부의 친척방문 허용조치는 離散家族 당사자들에 대한 인도적 배려라는 구체적인 성과 뿐만 아니라 양안주민의 敵對感 완화, 양안간의 긴장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양안관계 변화의 기반을 조성해 주었다.

둘째, 친척방문에 대한 각종 제한이 완화되고 친척방문자의 수가 급증하면서 兩岸의 인적 교류가 단순한 친척방문 차원에 그치지 않고 부수적으로 다른 분야의 교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였다. 즉 친척방문자들은 상호방문을 경제교류, 사회·문화 교류의 기회로 폭넓게 활용함으로써 兩岸交流·協力を 확대·발

전시기는 역할을 하였다. 특히 대만에서는 친척방문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이 친척방문 형식을 빌어 대륙을 방문하고 이 기회를 통해 取材, 學術, 貿易, 投資 등 친척방문의 기본취지와 관련없는 목적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셋째, 양안의 인적 교류는 대만정부의 三不政策, 三通 不許 등이 양안교류·협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最小化하는 기능을 하였다. 즉 대만정부의 각종 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양안교류·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은 인적 교류가 각종 교류·협력의 교량적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대만의 인적 교류는 양안교류·협력의 시발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류·협력의 擴大要因으로 작용함으로써 양안관계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南北韓의 人的 交流 역시 남북한 주민의 상호이해 촉진, 각종 교류·협력의 확대요인으로 작용하여 남북한관계 변화의 새로운 계기를 조성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북한의 改革·開放을 유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북한의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문제 역시 중·대만관계와 南北韓關係의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남북한관계의 현실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즉 중국은 대만정부의 대륙내 친척방문 허용을 아무런 조건없이 수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한데 반해, 북한은 자신들의 政治·經濟體制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여 남북한 인적 교류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서는 중·대만의 경우에서 볼 수 있었던 인적 교류의 급속한 확대는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남북한의 인적 교류 活性化를 위해서는 우선 인적 교류에 대한 북한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동시에 북한의 改革·開放 推移에 부합하는 점진적인 인적 교류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최근 중국, 일본의 교포단체들이 추진하는 제3국에서의 離散家族 면회소 설립을 적극 지원하는 것도 북한의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남북한 인적 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 海外僑胞의 橋梁的 役割 擴大

중·대만관계의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한 요인중에서 남북한 관계발전과 관련하여 의미를 갖는 또 다른 문제는 중·대만이 상호간의 政治的 接觸이 단절된 상황에서 각자의 입장과 정책을 전달하는 효율적인 수단으로 해외교포들을 적극 활용하였다는 점이다. 즉 중국의 「一國兩制」 방침이 鄧小平과 在美 중국계학자 楊力宇 교수와의 접견석상에서 비로소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처럼 중·대만은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3국 국적의 學者·政治人·企業人들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政策方向과 자신들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이와 함께 중·대만관계의 발전과정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홍콩, 싱가포르 등 華僑가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지역

또는 국가가 양안교류·협력의 伸介地, 대립·갈등의 緩衝地帶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것이다. 특히 홍콩의 존재는 중·대만의 정치적 교류·협력 부재, 대만의 三通 拒否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民間次元의 양안교류·협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이다. 즉 홍콩은 대륙주민의 대만방문 및 대만주민의 대륙방문을 위한 중간 경유지, 양안의 교역 중개지, 兩岸의 사회·문화교류지, 쌍방의 정치·경제상황 변화와 관련된 정보 수집지로서의 활동공간을 폭넓게 제공함으로써 중·대만의 직접적인 마찰을 최소화시켰다.

물론 중·대만의 직접적인 교류·협력이 확대되면서 중국의 해외교포 및 홍콩·싱가포르의 伸介者 역할은 축소될 것이다. 특히 홍콩의 경우 중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 때문에 兩岸의 완충지대로서의 의미가 감소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중·대만의 政治的 懸案이 타결되고 兩岸關係가 합리적으로 해결되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시일이 필요하고, 더욱이 비록 형식적이라 할지라도 대만이 중국과의 전면적인 三通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해외교포, 홍콩·싱가포르 등의 교량적 역할이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1993년 4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중국 海協會와 대만 海基會의 「汪辜會談」이 성사되기까지 싱가포르의 李光耀 前總理가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중·대만관계의 발전과정에서 중국의 해외교포, 홍콩·싱가포르가 橋梁的 役割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남북

한관계 개선과정에서도 한국의 海外僑胞를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안은 각국의 해외교포들이 한국의 정책과 입장을 일방적으로 支持·擁護하도록 설득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남북한의 입장과 정책방향을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고 남북한관계 개선의 바람직한 방향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民族和合을 위한 동반자로서의 僑胞社會 형성이라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해외교포들에게 남북한관계 현황, 통일정책의 基本方向 등을 정확하게 인식시키는 동시에 이에 대한 교포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각국 僑胞團體, 주요 인사들의 親南韓, 親北韓性向을 지나치게 구분하지 말고 이들로 하여금 남북한 학자,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각종 행사를 주관하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남북한 교류·협력의 橋梁的 役割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先政治·非政治分野 分離, 後均衡的 發展 推進

중국과 대만은 兩岸의 관계발전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정치·비정치분야, 정부·민간차원을 철저하게 분리한 바탕위에서 兩岸間 交流·協力を 비정치·민간차원에 국한시켜 왔다. 정치·비정치분야를 분리한 이러한 정책은 양안의 정치적 관계가 不透明하고 쌍방의 정치적 접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불가피

했던 조치이며, 만약 대만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다면 중·대만관계는 對立 一邊倒의 기존 관계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중·대만의 事例에 비추어 남북한 역시 정치·비정치분야의 분리를 통해 남북한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남북한이 政治的 懸案에 집착하여 비정치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단절시키기 보다는 정치·비정치분야의 분리를 통해 우선 非政治分野의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남북한의 정치적 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은 남북한 교류·협력을 일정한 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한 交流·協力の 初期段階에서 매우 효과적이지만, 교류·협력이 본격화된 이후에는 정치·비정치분야의 균형적인 관계발전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부작용이 야기된다는 약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예는 중·대만관계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兩岸交流·協力が 본격화된 이후 정치·비정치분야의 不均衡的 發展에 따른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차원의 兩岸交流·協力が 범위·규모의 측면에서 급속하게 확대되면서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호장치가 절실히 요구되나, 중·대만정부의 정치적 접촉 부재로 인해 교류·협력의 制度化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교류·협력과정에서 야기되는 각종 분규·마찰의 처리, 중국에 진출한 대만기업의 投資保障 등을 위한 政府次元

의 협의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중·대만정부는 海協會, 海基會와 같은 半官機構의 협상을 통해 정치적 접촉 부재에 따른 공백을 만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

둘째, 민간차원의 양안교류·협력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대만의 경우에 더욱 심각하다. 즉 각 분야의 양안교류·협력이 대만정부의 기본적인 大陸政策과 무관하게 추진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양안간 경제교류에서 대륙내 不動產, 株式 등에 대한 대만주민·기업들의 非公式 投資가 확대되면서 대만정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중·대만의 경우 정치·비정치, 정부·민간차원을 구분한 兩岸交流·協力은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남한이 남북한 교류·협력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정치·비정치분야를 구분한 교류·협력방안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교류·협력이 본격화된 이후 야기될 수 있는 일부 문제점에 대한 對備策을 함께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5. 對北 經濟交流의 政府·企業間 共同步調 維持

중·대만관계의 주요 특징이자 점차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양안교류·협력이 지나치게 經濟交流에 偏重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양안교류·협력에서 경제교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확대됨으로써 兩岸關係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 경제문제에 집중되고, 특히 대만의 각 기업들이 경제적 이해관계에 집착하여 무분별한 經濟交流를 추진함으로써 정부와 기업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은 남북한의 경제교류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유의하여야 할 부분이다.

중국은 대만에 비해 경제교류의 편중에 따른 부작용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으나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중국의 경우 改革·開放政策의 일환으로 지방정부 및 기업의 自律性이 확대되면서 中央政府 차원만이 아닌 지방정부, 기업, 개인차원에서 양안간 경제교류 확대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양안관계에 대한 관심이 주로 北京·上海·天津과 같은 대도시나 廣東省, 福建省, 浙江省 등과 같이 대만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면서 개혁·개방정책의 혜택을 비교적 많이 누리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편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향은 최근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地域間·階層間 葛藤과 맞물려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兩岸關係가 경제교류에 편중된 데 따른 문제점은 대만의 경우에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중국과의 경제교류에 참여하고 있는 대만주민, 기업들이 정부의 정책방향이나 兩岸關係의 균형적인 발전에 대한 고려보다는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대만기업들은 중

국이 대만기업의 중국진출에 각종 特惠를 부여하는 등 兩岸의 경제교류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정부가 三通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경제교류 확대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에 대만정부는 전면적인 三通 요구에 대해 소위 「大陸熱」이 대만사회의 각계 각층에 과급됨으로써 대다수의 대만기업들이 중국이 대만의 흡수를 기도하고 있는 敵對勢力이라는 점을 점차 망각하고, 開放優先主義(開放掛師)를 주장하며, 중국이 대만의 대중국 경제의존도를 높혀 압력수단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以商圍攻」전략을 경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²⁾ 이처럼 대만정부가 설정하고 있는 대륙정책과 대만기업들의 요구가 상충됨으로써 대만의 많은 기업들이 便法을 통해 중국과의 경제교류를 확대하는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은 대만정부가 政治·非政治 分野를 구분하여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관심·참여 영역을 엄격히 제한한 반면, 비정치적인 분야 특히 經濟分野에서는 매우 융통성있는 정책을 취한 데 따른 불가피한 결과이다. 또한 대만정부가 추진한 경제교류 위주의 대륙정책은 兩岸住民들의 공통관심사인 經濟交流를 매개로 그동안 단절되었던 상호교류 및 이해의 폭을 넓혔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결코 과소평가할

2) 隔岸人, “中共統一緊迫感令臺灣不安,” 「爭鳴」(1992年 11月號), p. 53; 丁樹範, “開放探親以來中華民國大陸政策的發展,” 「中國大陸研究」, 第35卷 8期(1992年 8月), pp. 7~8.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대만정부가 각 기업들과의 협의를 거쳐 경제교류의 段階別 推進 및 각 단계에 부합하는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부와 주민·기업의 새로운 갈등을 야기하고, 大陸政策에 대한 국민적 지지기반을 약화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수반하였다.³⁾

중·대만의 교류·협력이 경제교류에 편중됨으로써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남한이 對北 經濟交流를 추진할 때에는 우선 정부가 段階別 推進方案을 수립하고 각 단계의 經濟交流 주체, 범위, 규모 등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初期段階에서는 기업·개인 등 民間次元 위주의 경제교류를 적극 유도하되, 경제교류가 본격화된 이후에는 정부가 경제교류의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다른 분야의 교류와 일정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調整者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對北 경제교류의 단계 설정 및 각 단계의 구체적인 交流方案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 기업들과의 충분한 협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3) 최근 대만정부는 兩岸交易 및 投資規模 등에 대한 통제를 통해 경제교류에 편중된 兩岸交流를 시정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양안간 경제교류가 이미 지나치게 확대되었고 특히 대만의 對中國 交易, 投資의 많은 부분이 정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民間次元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큰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6. 對北政策의 世代·出身地域間 葛藤 解消

남북한관계, 중·대만관계를 불문하고 쌍방의 관계개선, 統一政策에 대한 汎國民的 合意는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에 불가결한 요인이다. 중·대만의 경우 과거 양안관련 정책은 최고 지도부가 독점하여 왔다. 따라서 교류·협력 및 통일에 대한 兩岸住民들의 입장은 중·대만정부의 공식적인 견해를 그대로 답습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關心領域도 극히 제한적이었다. 또한 개인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입장과 견해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를 공개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政治的 環境이 조성되어 있지 못하였다.

그러나 제한적이거나 양안관련 정책이 점차 공개적으로 추진되고 특히 1988년 이후 비정치분야의 인적·경제교류가 활성화되면서 兩岸關係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제고되었다. 兩岸關係에 대한 중·대만주민들의 관심이 제고된 것은 일단 양안관계 발전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대만의 경우 긍정적인 측면 이외에 世代, 出身地域間의 葛藤이 심화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함께 수반하였다. 즉 대만의 정치민주화가 진전을 보이고 大陸政策에 대한 國民黨 수뇌부의 독점적인 영역이 축소되면서 民進黨과 이를 지지하는 진보적인 在野 정치세력은 물론, 지식인·학생, 일반주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우선 대만내 세대간의 갈등과 관련하여 젊은 세대는 기성

세대에 비해 보다 과감하고 능동적인 大陸政策을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즉 중국의 각종 제의를 무조건 統一戰線 차원으로만 인식하지 말고 양안교류·협력의 각종 정치적 제약요인을 제거함으로서 교류·협력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대만의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에 비해 중·대만의 統一보다는 대만의 獨立에 보다 적극적이며, 이와 관련하여 대만정부가 外交力量을 강화하고 대만의 國際的地位를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대만 내 젊은 세대의 이러한 주장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보다 정정당당하게 대처하는 동시에 이념지향적이고 비현실적인 統一政策을 추진하기보다는 우선 대만의 자주적인 對內外力量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다.

세대간의 갈등 이외에 양안관련 정책과 관련하여 대만이 겪고 있는 또 다른 갈등은 대륙에서 이주한 소위 「外省人」과 대만 출신인 「本省人」간의 갈등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本省人들은 外省人들에 대해 ① 外省人들의 이해관계가 국민당정부의 이해관계와 일치하고, ② 外省人들은 국민당정부와 마찬가지로 대만에 머무는 것을 大陸收復을 위한 잠정적인 과정으로 인식하며, ③ 국민당정부의 제반정책은 外省人들의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평가는 지나치게 단편적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本省人에 비해 國民黨과 外省人間에는 일종의 공감대가 존재하였고, 특히 과거 外省人들이 국민당, 대만정부내 대부분의 주요 직

책을 독점함으로써 本省人들이 정치적으로 疏外되어 왔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물론 대만내 本省人과 外省人의 갈등은 蔣經國 사후 本省人인 李登輝의 총통직 승계, 국민당 최고 지도부의 本省人 대거 영입에 따른 國民黨과 外省人의 공감대 약화, 외성인 2세들의 인식변화⁴⁾ 등으로 世代間의 葛藤에 비해 점차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국민당, 대만정부내의 本省人과 外省人의 갈등이 단기간내에 해소되기는 어려우며, 특히 外省人의 대표격인 韓柏村이 행정원장을 사임하고 本省人인 連戰이 등용되는 과정에서 양자의 갈등이 고조되었다. 또한 최근 창당된 新黨의 주역이 外省人 二世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外省人 元老들이 新黨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냐에 따라 本省人과 外省人의 갈등이 새롭게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상의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대만내의 세대, 출신지역간 갈등은 대만정부가 大陸政策에 대한 汎國民的 合意를 도

4) 大陸에서 출생하지 않았으면서도 부모의 省籍에 따라 外省人 身分을 유지해 온 소위 「外省人 二世」들은 출신지역에 따른 구분을 거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30대의 外省人 世代들은 ① 자신들은 잠정적으로 대만에 머무는 過客이 아니고 新移民者다, ② 대만은 자신들의 出生地이자 生存空間이다, ③ 자신들이 國民黨과 共產黨의 역사적 원한에 따른 짐을 져야 할 이유가 없다, ④ 과거 국민당이 대만에서 행한 獨裁의 책임을 떠맡을 이유가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外省人들이 대만의 향후 정치·경제적 發展方向, 統一問題 등에 있어서 本省人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先入見에 대해서도 拒否感을 나타낸다. 따라서 젊은 세대들에 있어서는 外省人과 本省人의 갈등이 보다 빠르게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外省人 二世들의 인식변화에 대해서는 殷惠敏, “外省人的臺獨,” 「九十年代」, 1992年 11月號, p. 78 참조

출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과거 대만정부가 강력한 지도력을 갖고 있던 당시에는 일부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설정한 大陸政策의 원칙과 목표를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국민당의 정치적 기반이 약화되고 각계 각층에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는 대만정부가 범국민적 합의를 얻지 못한 大陸政策을 추진할 경우 많은 반발과 부작용이 야기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비단 대만 뿐만이 아니라 對北政策, 統一政策과 관련하여 세대간의 갈등, 그리고 대만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지만 출신지역간(실향민 등)의 갈등을 안고 있는 남한에게도 적용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남한 역시 對北政策과 관련된 각종 갈등을 해소하고 범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에는 각종 대립·갈등의 해소 뿐만이 아니라 남북한 통일에 대한 汎國民的 關心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⁵⁾

5) 즉 對北政策과 관련된 범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남북한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진정한 關心과 熱意를 提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民族統一研究院이 실시한 1993년도 통일문제관련 輿論調查중 통일문제에 대한 關心度를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52.9%가 物價安定·經濟成長 등 경제문제를 주요 관심사라고 답한 반면 남북한 관계개선 및 통일을 주요 관심사로 답한 사람은 5.5%에 불과하였다. 특히 연령별로 보면 20대(5.24%), 30대(4.44%), 40대(4.38%)의 경우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3. 7), pp. 115~17 참조. 또한 1993년 7월 한국청년정책연구소가 실시한 輿論調查에 따르면 20~30대 젊은 세대들의 통일에 대한 關心 및 통일의 當爲性에 대한 인식 정도는 40대 이상의 세대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中央日報」, 1993년 8월 8일). 이상의 여론조사 결과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남북한 통일에 대한 건전한 關心을 提高시키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第Ⅵ章 結 論

1979년 이후 중·대만관계는 대립·갈등시기, 비정치·민간차원의 교류·협력 확대시기를 거쳐 政治的 關係改善 및 통일문제에 대한 접근을 모색하는 단계에 진입하였다. 중·대만의 이러한 관계변화를 촉진한 주요 요인은 중국과 대만의 政治·經濟的 變革이며 사회주의권 변화 이후의 새로운 國際秩序 또한 이들의 관계변화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앞으로의 중·대만관계 역시 중·대만의 정치·경제적 변화 및 주변 國際情勢 변화와의 밀접한 관련속에서 변화할 것이나, 기존의 변화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기존의 중·대만관계 발전은 政治·非政治分野를 철저히 분리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쌍방의 참여한 政治的 對立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중·대만간 民間次元의 교류·협력은 이미 정치적인 제약속에서 발전할 수 있는 최고점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정치·비정치분야의 不均衡的인 關係發展을 더이상 지속하기가 어려우며 만약 정치적 관계개선의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각종 문제들이 돌출됨으로써 비정치분야의 교류·협력마저 제약받게 될 것이다.

중·대만의 정치적 관계발전은 현상황에서 비관도 낙관도 할 수 없으며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우선 정치적 관계발전의 肯定的 要因은 중·대만

모두가 양안의 정치적 관계개선 내지는 통일문제에 대한 접근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은 改革·開放의 확대, 社會主義 市場經濟體制 확립을 통한 경제발전을 최우선적인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양안간 경제교류·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양안의 경제교류·협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政治的 對立을 완화함으로써 兩岸關係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臺灣問題 해결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즉 중국은 비록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대만과의 정치적 관계개선을 통해서 경제교류·협력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는 동시에 대만내의 獨立霧圍氣를 일정하게 제어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한편 대만 역시 기존의 民間次元의 교류·협력 특히 경제교류에 대한 정치적 차원에서의 제도적 保護裝置 마련, 자신들의 향후 政治的 位相 설정 등과 관련하여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발전을 필요로 하고 있다. 즉 대만은 궁극적으로 統一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獨立을 추구할 것인지를 불문하고 일단 정치적인 측면에서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이러한 점을 의식하여 李登輝, 連戰을 정점으로 한 대만정부는 최근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개선을 위한 정책을 보다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다. 즉 1993년 4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汪辜會談」을 통한 중국과의 준정부간 접촉 정례화 합의, 중국 海協會와 대만 海基會 대표부의 상호설치 추진,

양안간 通航의 긍정적 고려 등 기존의 三不政策과 三通 不許 정책을 전환하기 위한 사전준비를 강화하고 있다.¹⁾

이러한 긍정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중·대만간에는 정치적 관계발전을 낙관할 수 없게 하는 부정적인 요인들이 존재한다. 중국이 안고 있는 부정적인 요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의 政治變動 및 經濟政策의 변화가능성이다. 중국은 14全大會, 8기 全人大 1차회의를 통하여 鄧小平 後繼體制로서의 江澤民體制를 공고히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經濟過熱, 지도부내의 갈등 등 부정적인 요인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현재 중국지도부내의 일부 갈등은 과거 첨예화되었던 黨內的 保革葛藤과는 양상이 다르며 경제과열 현상 역시 중국의 經濟政策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만큼 심각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중국의 정치·경제적 불안정, 불확실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향후 중·대만의 정치적 관계발전을 무조건 확신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이다.

대만의 경우 중·대만의 정치적 관계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李登輝 총통의 政治的 位相 변화 및 대만내 독립분위기의 고조 현상이다. 그동안 李登輝 정부의 혁신적인 大陸·對外政策은 중·대만관계 변화의 촉진제로 작용

1) 李登輝, 連戰體制的 향후 대륙정책 방향과 관련하여 海基會부회장 丘進益은 “향후 3년간 李登輝 政府의 가장 중요한 시정목표는 양안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대만정부는 최대한의 인원과 방안을 동원할 것이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宋克寒, “李登輝「務實」的兩岸關係展望,” 「鏡報月刊」(1993年 4月號), pp. 82~83.

하여 왔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대만의 독립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기능을 함으로써 중국의 불만을 야기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務實」에 바탕을 둔 李登輝 정부의 융통성있는 대내외정책이 兩岸關係 발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대만내의 독립추구 경향을 부추김으로써 양안관계 발전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를 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대만의 國際的 地位 강화를 겨냥한 대만정부의 적극적인 外交攻勢가 주요 서방국가들의 對中關係, 對臺灣關係와 연계될 경우 중·대만관계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게 될 것이다.²⁾

이처럼 중·대만관계에는 쌍방의 政治的 關係 발전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요인들이 존재하는 반면 현재의 상황에서는 극복하기 어려운 制約要因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제약요인들이 단기간내에 제거될 가능성 또한 희박하다. 왜냐하면 중·대만의 정치적 관계 발전을 제약하고 있는 요인들은 쌍방의 근본적인 政治的 立場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어서 民間次元의 교류·협력에서처럼 우회적·간접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중·대만의 정치적 관계는 대만정부가 요구하는 대만의 政治的 實體 및 국제적 지위 보장, 중국의 對臺灣 武力使用 포기를 통한

2) 중국은 兩岸關係가 이와 같이 발전할 가능성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중국의 입장은 Yan Xuetong, "China's Security after the Cold War,"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vol. 3, no. 5 (May 1993), pp. 4~5.

평화정착 등의 정치적 현안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도 아니고 獨立된 국가간의 관계도 아닌 매우 애매한 兩岸關係를 지속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대만은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쌍방의 한계와 제약요인에 집착하여 兩岸關係의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키기보다는 서로의 共感帶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중에는 비정치·민간차원 교류·협력의 지속적인 발전, 형식과 절차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政治的 接觸의 확대 등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측면은 우리가 남북한관계 개선, 南北韓 統一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도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이다. 즉 중·대만이 체제·이념상의 제약속에서 이룩한 交流·協力 성과는 물론이고, 이러한 성과를 政治的 對立·葛藤의 극복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은 남북한 모두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參 考 文 獻

1. 單行本

民族統一研究院。「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3.

朴斗福。「中·臺 兩岸關係: 交流·協力の 推進實態 및 그 示唆點」. 서울: 統一院, 1992.

唐金鋒。「海峽兩岸民間交流政策與法律」. 上海: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1991.

馬英九。「兩岸關係的回顧與前瞻」. 臺北: 行政院 大陸委員會, 1992.

蔡政文. 林嘉誠。「臺海兩岸政治關係」. 臺北: 國家政策研究資料中心, 1989.

民主建國會。「國防外交白皮書」. 臺北: 國家政策研究資料中心, 1990.

Miller, Robert F. ed. *The Developments of Civil Society in Communist Systems*. North Sydney, Australia: Allen & Unwin, 1992.

2. 論文

文興鎬。「中國指導部の 保革葛藤 展開推移와 14全大會。」「統

一研究論叢」，第1卷2號（1992）。

楊力宇。“鄧小平對和平統一的最新構想。”「七十年代」，1983年8月號。

宦國蒼。“北京調整對臺政策。”「九十年代」，1986年3月號。

尤里。“探親方案顯示臺灣開放誠意。”「爭鳴」，1987年11月號。

陳碩。“論中國社會主義初級階段的社會分化和階級階層制度。”「上海社會科學」，1988年10月號。

朱慶芳。“十年來我國各階級，階層結構演變的分析。”「社會學研究」，1990年第3期。

車書棟。“堅持新聞工作黨性原則的幾個問題。”「社會科學戰線」1990年第2期。

黃昆輝。“國家統一綱領的要旨與內涵。”「中國大陸研究」，第34卷第12期（1991年12月）。

葉遲英。“大陸學者看兩案經貿關係。”「中國大陸研究」，第35卷第7期（1992年7月）。

張旭平。“海峽兩岸經務關係與展望。”「中共研究」，第26卷7期（1992年7月）。

陸學藝。張厚義，張其存。“轉型時機農民的階層分化：對大·劉莊·華西等13個村莊的實證研究。”「中國社會科學」，1992年第5期。

徐林興。“向臺售武嚴重損壞中美關係。”「文匯報」，1992年9月4日。

許光泰。“論中共對兩岸人民關係條例的批評。”「中國大陸研究」，

第35卷 第10期 (1992年 10月)。

朱玉山。“兩岸文教交流之研究。”「中國大陸研究」, 第35卷 第10期 (1992年 10月)。

陳璋津。“兩岸學術交流中的政治因素。”「中國大陸研究」, 第35卷 第11期 (1992年 11月)。

鄭偉鳴。“中共對臺灣工作新轉變。”「廣角鏡」, 1992年 11月號。

李遠哲。“參雜政治因素交流無益。”「聯合報」, 1992年 7月 6日。

宋國誠。“官方媒體在海峽兩岸交流中的角色: 「人民日報」和「中央日報」的比較分析。”「中國大陸研究」, 第35卷 第 3 期 (1992年 3月)。

王玲玲。“論臺海兩岸的新聞交流。”「中國大陸研究」, 第35卷 9 期 (1992年 9月)。

楊力宇。“海峽兩岸關係座談會。”「爭鳴」, 1992年 11月號。

殷惠民。“外省人的臺獨。”「九十年代」, 1992年 11月號。

隔岸人。“中共統一緊迫感令臺灣不安。”「爭鳴」, 1992年 11月號。

丁樹範。“開放探親以來中華民國大陸政策的發展。”「中國大陸研究」, 第35卷 第 8 期 (1992年 8月)。

施華。“臺灣民主建構成型。”「九十年代」, 1993年 1月號。

林瑞。“李登輝神話的終結: 臺灣立委選舉啓示錄。”「九十年代」, 1993年 1月號。

——。“李登輝重組權力, 非主流挾勢反彈。”「九十年代」, 1993年 2月號。

陳明邦。“現階段對大陸投資政策與法令。”「中國大陸」，1993年 2月號。

宦國蒼。“克林頓對華政策的多個層面。”「九十年代」，1993年 2月號。

趙建民。“從直航的爭議看當前兩岸交流問題。”「中國大陸研究」，第36卷 第3期（1993年 3月）。

司馬路。“國民黨的李登輝路線。”「鏡報月刊」，1993年 4月號。

宋克寒。“李登輝「務實」的兩岸關係展望。”「鏡報月刊」，1993年 4月號。

穆惠民。“中國軍事威脅論豪無事實根據。”「人民日報」，1993年 4月 17日。

李登輝。“推動兩岸關係，勿自亂陣腳。”「中央日報」，1993年 4月 28日。

——。“日對兩岸關係思考模式影響亞太整合。”「中央日報」，1993年 5月 4日。

汪道涵。“兩岸關係不是一次會談就可解決。”「中央日報」，1993年 5月 26日。

——。“兩岸敵對關係幾可稱爲「已不存在」。”「中央日報」，1993年 5月 30日。

蔣一樵。“英對華已制訂全面政策：中英重開談判的臺前幕後。”「明報月刊」，1993年 5月號。

杜學魁。“中方舉起主權狀，英方應以國際牌。”「明報月刊」，1993年 5月號。

- 張虎。“中共在香港的組織工作。”「中國大陸研究」，第36卷 第5期（1993年 5月）。
- 黃昆輝。“中共急於三通，研擬兩岸直航方案。”「中央日報」，1993年 5月 8日。
- 錢復。“中華民國快速民主化下外交事務發展的經驗。”「中央日報」，1993年 5月 27日。
- 岳賽。“加入聯合國的奇想：臺灣外交活動向觀察。”「開放雜誌」，1993年 5月號。
- 施若彬。“臺灣重返聯合國的實際行動。”「爭鳴」，1993年 6月號。
- 高長。“兩岸直航短期內仍難突破。”「聯合報」，1992年 6月 7日。
- 范雪君。“在港中共黨員將逾六萬。”「爭鳴」，1993年 6月號。
- 齊辛。“「鄧辦」主導下的中共內政外交。”「九十年代」，1993年 6月號。
- 李怡。“專訪邱進益談汪辜會談。”「九十年代」，1993年 6月號。
- 江澤民。“當前的經濟工作。”「人民日報」，1993年 6月 2日。
- 平松茂雄。“中國海軍と中華世界の再興。”「新防衛論集」第20卷 第3號（1992年 12月）。
- Awanohara, Susumu. “Breathing Space: Clinton delays on conditions to China’s MFN renewal.” *Far Eastern Economic Review* (June 10, 1993).
- Baum, Julian. “President’s Choice: New premier is first ever non-mainlander.” *Far Eastern Economic Review* (February 18, 1993).

- _____. "Virtual Reality: Moves to rejoin UN, recognise Mongolia." *Far Eastern Economic Review* (June 3, 1993).
- _____. "Dissent and Depart: Young KMT leaders poised to form their own party." *Far Eastern Economic Review* (August 12, 1993).
- Chen, Qimao. "New Approaches in China's Foreign Policy: The Post-Cold War Era." *Asian Survey*, vol., no. 3 (March 1993).
- Hoagland, Jim. "China: Economic Growth Doesn't Guarantee Political Chang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June 2, 1993.
- Kaye, Lincoln. "Raging Inflation: Lhasa price protests escalate into anti-Chinese riot." *Far Eastern Economic Review* (June 3, 1993).
- McDonald, Hamish. "The Tibetan Connection: Taipei finds an ally in the Dalai Lama." *Far Eastern Economic Review* (June 10, 1993).
- Ming Cheung, Tai. "Stalling for Success: Chinese try Britain's patience on Hongkong talks." *Far Eastern Economic Review* (July 1, 1993).
- Nathan, Andrew J. "The Legislative Yuan Elections in Taiwan." *Asian Survey*, vol., no. 4 (April 1993).

- Rudolph, Barbara. "Status Seeking." *Time* (May 31, 1993).
- Sutter, Robert G. "Taiwan—Mainland China Relation: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CRS Report for Congress*. (August 6, 1992).
- Tucker, Nancy Bernkopf. "China and America: 1941 1991." *Foreign Affairs*, vol. 70, no. 5 (Winter 1991/92).
- Wehrfritz, George. "Hazardous Business: China offers site for Taiwan nuclear waste." *Far Eastern Economic Review* (March 25, 1993).
- Xuetong, Yan. "China's Security after the Cold War."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 vol. 3, no. 5 (May 1993).
- Zyla, Melana. "Socking it to China: US Senate acts on arms sales to Taiwan." *Far Eastern Economic Review* (August 5, 1993).

3. 中國의 公式文件

- 「加快改革開放和現代化建設步伐奪取有中國特色社會主義事業的更大勝利」(중국공산당 제14차 전국대표대회 공작보고). 「人民日報」, 1992年 10月 13日.
- 「中華人民共和國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告臺灣同胞書」

(대만동포에게 고하는 글). 「人民日報」, 1979年 1月 1日.

「中共中央建議修改憲法部分內容」(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헌법수정 건의안). 「人民日報」, 1993年 2月 16日.

「第八屆全國人民代表大會第一次會議政府工作報告」(제 8 기 全人大 1차회의 공작보고), 「人民日報」, 1993年 4月 2日.

4. 其他

「로동신문」.

「人民日報」.

「北京中央人民廣播電臺」.

「光明日報」.

「大公報」.

「經濟日報」.

「文匯報」(上海).

「中國時報」.

「中央日報」(臺灣).

「聯合報」.

「經濟導報」.

「明報」.

「文匯報」(홍콩).

「朝日新聞」.

The Economist.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South China Morning Post.

China News Analysis.

빈 면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김일성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을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
秩序 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
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
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綜合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
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
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
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方案과 南北韓關係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1992. 6. 30)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1992. 9. 30)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1992. 12. 31)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1993. 3. 31)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1993. 6. 30)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論 叢〉

-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資 料〉

- 92-01 統一 및 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및 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研究報告書 93-05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政策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2-4726, FAX : 232-5341

印刷處 웃고문화사 전화 : 267-3956

印刷日 1993년 9월 일

發行日 1993년 9월 일
